

인권정보자료실  
R1.1.10

# 인권하루소식

합본10호  
(98년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144호 F86) 2001년 1월호

인권정보자료실  
R1.1.10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제1073호-제1093호> 인권하루소식

호수	제목	페이지
1073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제2항의 '국유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	1073
1074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1074
1075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75
1076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76
1077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77
1078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78
1079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79
1080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0
1081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1
1082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2
1083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3
1084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4
1085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5
1086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6
1087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7
1088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8
1089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89
1090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90
1091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91
1092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92
1093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 (계속)	1093

# 인권하루소식

## 98년 3월

### (제1073호 - 제1093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3일(화)

제 10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지난해 한총련 탄압이 극에 달하던 때, 전북대생을 무더기 연행한 뒤 주사파 조작사건으로 발표한 '혁신대오' 사건이 공안당국의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민자당사에 물려가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유호(당시 농과대학 학생회장) 씨등 전북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11명은 지난해 6월 25일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로 연행된 뒤, 검찰에서 '혁신대오'라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을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시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다른 문건에서 짜깁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발표과정에서 조직의 총책이 뒤바뀌는 등 짜맞춘 흔적이 역력하다"며 "공

안당국이 총학생회 활동을 했던 간부 모두를 조직원으로 꿰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기사제공: <평화와 인권>]

\*선고형량: 엄성복-징역3년, 집행유예 4년/소현민, 최지훈, 주영식, 이승열-선고유예/홍진희, 유영산-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대규, 김선미, 김동섭-징역6월, 집행유예 1년/유호-무죄 (반국가단체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은 각 무죄)

##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수자 홍중희씨 벌금형

최근 함세환, 방양균 씨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처벌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엔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

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 씨는 "교도소에서 보안관찰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출소 후 열흘 이상 경찰에서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홍 씨가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뒤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홍 씨의 사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보안관찰법을 적극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 .....주요 공판 안내

- ▶ 3일(화)
  - 류용범(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 오만규, 김대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신건
  - 정현남(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선고
- ▶ 4일(수)
  - 김익(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속행
  - 김소연 외5(상해치사, 이석 사건) 오후2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속행
- ▶ 5일(목)
  - 송석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신건
  -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신건
  - 김대성 외5(국보법등) 오후2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속행
- ▶ 6일(금)
  - 김미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서울고법 403호, 신건
  -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3부, 서울지법 311호, 속행
  -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3시, 합의1부, 서울지법 416호, 속행

###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1일 오후 3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친일파청산문제를 제언하는 것은 친일파들이 사용했던 건국공신론, 근대화 주역론 등의 내재적 논리와 그들의 사회적 위력에 대해 냉정하게 검토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전까지 친일 문화,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동정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의 범죄가 더 나쁘고 영향도 더 크게 작용했다"며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해방후 민족주의자로 위장하여 한국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세습적인 권세를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오른 서정주·모윤숙(시인), 유지진(연극), 김은호(미술가), 현제명(작곡가) 씨 등은 해방후 반민특위 등의 활동을 무참히 짓밟고 군부정권 하에서 정부요직을 차지하여 학계·문화계·교육계 등의 대표를 맡아 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민족정기를 퇴색시킨 대표적 예술인으로 꼽힌다. 이들에겐 모두 사형이 언도됐다.

반민특위는 해방후 제헌헌법에 따라 일제청산작업의 일환으로 1948년에 설치되었다가 이승만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경찰의 쿠데타로 무력화되어 1949년 6월에 해체되었다.

### 제주 4·3항쟁 명예회복 선포

3월 28일- 4월 5일 기념주간

이승만 정권의 실정과 독자적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해 항거한 제주 4·3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상임대표 김중배등, 제주 4·3 범국민위)'는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명예회복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48년 4·3사건의 촉발제가 됐던 47년 제주 3·1만세사건을 기념해 열렸다.

범국민위는 이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제주 4·3 제50주년 추모 및 기념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술심포지엄, 그림전시회, 50주년 기념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 진혼극, 4·3문화학교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동아시아 평화·인권위원회 국제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9-10월중에는 서울에서 4·3진실규명과 화해·평화를 위한 종교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주간/인/권/호/름

(98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 23일 (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악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대상업무(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관한 3가지 요구 노동부에 건의/국민연금 급여율 55%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검찰, 1월말 성동구치소 노역중 숨진 박순중 씨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내 폭행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

◆ 24일 (화)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동양화재·신동아화재 등 7개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노동운동가 최명아(36·민주노총 조직1부장) 씨 사망/방한중인 국제연예메스터 로리 문고벤 아시아태평양지방장 기자회견 갖고, 모든 양심수 석방 촉구/정대협 회원 20여명, 롯데호텔 앞에서 나카스네 전 일본총리의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반대 시위/경실련·홍사단·환경련 등, 학생운동 관련자 전원 석방·수배해제 촉구

◆ 26일 (목)

'이산가족교류민간협의체' 3월 중순 발족 예정/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 김선명 씨가 지난 96년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 (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형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확정/통계청 발표, 1월 한 달만에 실업자 27만 명 증가/한국산업안전공단, 솔벤트에 함유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에게서 국내 처음으로 '골수이형성 증후군' 발생, 직업병으로 인정

◆ 28일 (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소송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 3월1일 (일)

정부,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의 직접 배상 요구 방침/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특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거둬 제의/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4·3항쟁 50돌 맞는 올해를 명예회복의 해로 선포/교육부 교원징계제심위원회, 작년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 기록부'가 발견돼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학교에 복직돼 물의/환경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4일(수)

제 10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화장실 칸칸이 쓰레기가 수북하고, 교실에 쓰러진 책상과 내팽겨쳐진 교과서들이 널부러져 있다. 발달한 여고생들의 생기 대신 황량함만이 가득한 교정은 도무지 새하기를 맞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무책임한 재단과 방관하는 교육관료, 눈치보는 교사들 틈에서 1년간 파행으로 치달은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재단이사장 김학만)의 현주소는 이렇게 참담하다.

경기여상의 파행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추위에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교실을 박차고 나오면서였다.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었지만, 이후 재단측 비리문제와 연관되면서 사태는 장기화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의 농성, 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교육청의 감사가 잇따른 끝에 5월 경기여상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교육청이 관선이사회의 파견을 약속했고, 이에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다시 엉뚱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재단은 이른바 '양파'(양심선언 참여 교사) 교사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했고,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섯달, 헤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갔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 밖을 배회하고 있다.

교육청 "할일 다했다"

사태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책 읽는 어른들은 두손을 놓고 있다. '양파'의 한 교사는 "설득해도 통하지 않는 데다 아이들을 만나면 학교측으

불신감만 팽배해진 아이들

1년간의 파행은 학교운영 전반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장기간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방학도 반납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일수(1백47일)를 채우지 못했다. 유급조치가 내려져야 하나, 학교측은 울며 겨자 먹기 때 수업일수를 보충한다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전원 진급시켰다.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일부터 경기여상 학생들은 때이른 기말고사를 치러야 한다. 역시 파행이 빚은 결과다.

형편 학교에 남아 시험을 준비중인 2학년 학생은 말했다. "교실문을 바꾸고, 페인트칠을 한 것 말고는 1년 동안 좋아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난방시설도 들여놨지만 추운 건 마찬가지구요" 이 학생은 "어서 빨리 정상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도 별로 기대는 안하는 눈치다. 어른들을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93년 8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원순(44), 최은순(33, 여), 이종걸(42) 변호사 등이다.

3일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의 집에서 열린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봉호(심사위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서울대 교수는 "박원순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묻혀버릴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사건화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97년 여성인권의 걸림돌로 이문열(소설 '선택'에서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가치관 대변)씨, 신태수(대구 지하철공사 대표이사, 역무직 여성승차자 원서접수 거부)씨, 이주일의 '코메디 쇼'(성적 인 농담과 묘사), 오규정(SPARK 발행인)씨 등을 선정했다. 97년 여성권의 '디딤돌'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배희 부소장(동성동본혼법 신고센타 설치)과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극장 '마녀' 설립과 서울여성영화제 개최), 민가람(85년 창립, 목요집회 개최), 이찬진 변호사(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최종영 대법관(우조교 승소판결) 등이 선정됐다.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다행스럽게도 국민인권기구 설치... 새 정부의 100대 과제... 국민인권기구는 하지만 '장기과제'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현 여부를 전혀 낙관할 수 없다.

하나. 국민인권기구 설치... 우 인권과 민주화를 향한 새 정권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둘째,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인 권도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노동법의 추상적 차별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차별금지입법이 없는 상태다. 그 결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실효성있는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100대 과제 중에서도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다. 국민인권기구 설치... 미룰 경우 인권과 민주화를 향한 새 정권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셋째, 금년은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해이자 헌법이 제정되고 세계 인권선언이 반포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인권기구의 취지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실효성을 부여하지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기에 금년만큼 좋은 해는 없다.

넷째, 이미 존재하는 관련위원회들과의 관할권 중첩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는 특히 고충처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각종 장애인관련위원회 등의 권한과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늦출 이유가 없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서두르면 연말까지 얼마든지 법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마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인권기구의 문제점은 자칫 또 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로 타락하기 쉽다는 데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민인권기구는 한편으로는 국내민간단체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인권기구들과 부단히 접촉함으로써 스스로의 국가기구적 성격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둘째, 국내 인권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5일(목)

제 10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학서도 인권교육, 강좌 늘어

성공회대·서강대·대구대, 이론화 작업 시급

인권교육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도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인권강좌'가 속속 개설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대학 내 인권교육에 앞장선 학교는 성공회대. 성공회대는 지난 95년 <인권과 평화> (담당교수 고병현)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인권과 사회복지> <법과 인권> <지구촌사회와 평화> 등 인권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놓고 있다.

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했으며, 법학과에서도 <법과 인권> (담당교수 윤대만) 과목을 수업중이다. 서강대 역시 <기독교교회의 인권과 정의> (담당교수 김범)를 2년제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인권강좌들은 △일상적인 '인권 침해' 실상의 파악 △인권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가치관의 습득 등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인권의 개념' '인권의 역사' '한국사회의 인권문제 및 인권운동의 과제' 등을 주요하게 수업하고 있다.

가 한 권도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인권강의는 자료유집 등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김영범 교수는 "유용한 교재나 교양서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인권교재의 개발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 개념' 등의 주제가 자칫 딱딱한 수업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까닭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어려운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97년 인권사회학 강의내용(대구대) 1. 서설: 인권문제의 현재적 지평과 인권사회학의 의의 //1. 인권사회학의 규범적 및 이론적 기초 2. 인권의 개념과 구성요소-인권관념의 여러 동학/3. 인권 관념의 형성과 인권론의 역사적 전개/4. 근대 인권론의 역사적 전개/5. 인권론의 규범적, 이념적 기초/6. 인권사회학의 기초 //II. 인권문제의 유형과 구조화의 동학 7. 인권문제의 구조와 인식유형:비교론적 개관/8. 제3세계의 인권문제와 그 구조화의 동학/9. 서구사회와 사회주의 체제의 인권문제/10. 동아시아의 인권문제와 인권담론 //III. 한국의 인권문제: 과거와 현재 11. 한국 인권문제의 역사적 구조/12. 현대 한국 인권문제의 유형과 특징 //IV. 인권문제의 해결의 모색과 전망 13. 거시적, 구조적 접근/14. 주제론적 접근: 인권기구·인권담론·인권운동





### 한상권 교수 출근투쟁 재개

#### 이사진교체 불구, 덕성여대 사태 미해결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던 덕성여대 (이사장 김계수) 사태가 여전히 해결을 못보고 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28일 한상권 교수가 부당하게 제임용에서 탈락당한 사건과 관련, 97년 10월 박원국 이사장이 해임되고 12월 3일 이사진의 전원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 이사진이 한 교수의 제임용을 계속 미루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상권(사학과) 교수는 새 학기 개강과 동시에 다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공의장 유초하등)'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덕성학원 이사진과 신임총장은 한 교수를 즉각 복직시키라"며 "학교측이 비민주적 관행을 철회하고 민주개혁을 착실히 추진시키지 않는다면 관선이사 파견과 민주총장 선출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현재 한 교수가 제임용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교수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면직된 상태"라며 "학교측이 제임용을 하지 않는 것에 법적하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교체된 이사진은 총장을 새로 선출한 뒤 한 교수의 복직문제를 거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측이 지난 2월 26일 이강혁 총장을 새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89년 재단이 성낙동 교수를 제임용시키지 않고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 평교수협의회 의장자격으로 성교수의 복직투쟁을 전개했다가 90년 정지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뚜렷한 사유없이 제임용에서 탈락됐다. 덕성여대 재단은 제임용 때 심사내규에 기준을 두어 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한 교수는 연구실적(학교기준 1.0점 이상) 2.3점을 받았으며 강의실적(C학점 이상) A학점, 봉사점수(0.2점 이상, 강의점수가 A학점일 경우 봉사점수는 없어도 됨)

0.1점을 받아 제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였다.

###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정부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내 산업안전과를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7개소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과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통합한 것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한 관리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상으로 산업안전과가 선택된 것뿐"이라며 "이제 산재예방정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97년 산업재해율은 0.81%로 96년의 0.88%에 비해 0.07%감소되었으나,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수는 2천7백42명으로 파악돼 96년보다 7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당신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고 싶습니다"

-박래군(구국전위 사건)씨 아내의 편지-

얼마 전 경주 남산자락 아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신을 면회했을 때 내 가벼운 웃차림을 본 당신은 깜짝 놀라며 내게 출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밖은 봄향기 일렁이는데 당신은 여전히 겨울내의를 껴입은 채로 겨울의 한가운대를 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나 또한 겨울의 추운 눈보라 속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언제나 건강했던 당신이 4년 감옥살이 도중에 추위조차 견디기 어려울 만큼 몸을 상했나 싶어 얼마나 가슴이 미어오던지... 단 20분도 안되는 짧은 당신과의 만남, 당신을 저 육중한 철문 안에 놔두고 혼자 교도소 문밖으로 나오는 내 마음속에는 눈물이 감이 되어 흐르고 여전히 겨울인 당신을 저기 놔두고 찾아온 봄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날, 영장도 없이 새벽에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당신의 사지를 붙들고 내게서 당신을 빼앗아 갔지요.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며 안기부 앞에서 울며불며 지낸 지 3일 만에야 당신을 안기부에서 만날 수 있었답니다. '살아있구나'하는 안도감도 잠시, 너무 초췌해지고 불안에 떨던 당신을 보고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당신, 졸업하고 나서 학원을 운영하며 새 삶의 의지를 키워가던 당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답니다.....

1995년 5월 30일, '유엔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에서는 당신을 비롯하여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안재구 선생님, 정화려 씨 등에 대해 자의적 구금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석방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 결정마저 숨겨 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유엔에서도 당신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당신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수들의 전원석방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저곳 뛰어 다니는 여기 계신 보랏빛 수건의 어머니들의 고통, 눈물, 기다림도 이제 끝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7일(토)

제 10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 「참된 시작」 등 20여종 반입 불허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검열 뒤 내용을 일부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사람만이 희망이다」 「세계와 노동」(민주노동 발행) 등 20여권의 도서의 반입을 불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 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법상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33조 도서열람)'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치소측은 도서반입 불허규정과 명확한 불허사유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구치소측은 도서외에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도 검열과 삭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최근 [길] 2월호

가 양심수 관련 기사를 삭제당한 채 전달되었다"며 "구치소측이 무슨 이유로 삭제했는지, 어떠한 원칙으로 검열한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앙래도 깨만

한편, 재소자들은 서신검열과 서신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수감자는 "4장의 편지 가운데 끝부분만 받았다"고 동료들에게 밝혔다. 박재현, 오창열 씨가 쓴 편지는 교도관 검열에 의해 아예 밖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구치소측이 소내 규정을 명분삼아 소내 탈법행위가 알려지는 것조차 막기 위해 서신양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측 관계자는 "소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보안상 위해여부, 증거인멸, 범죄구성 내용이 서신에 포함될 경우 행정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측은 서신검열의 기준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

출하는 내용 등을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다. <상자 참조>

▷ 반입불허된 서적: 「녹슬은 해방구」 「참된 시작」 「한국민중사」 「그럼소! 나는 사회주의자요」 「빨치산의 딸 1-3」 「세계를 뒤흔든 10일」 「두만강 1-3」 「민들레처럼」 「대중활동가론」 「제르미날 1-2」

### 「의정부지청 재수사」 촉구

#### 참여연대, 검찰발표 비난

의정부지청 검사들의 비리혐의와 관련, 2명의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경고조치했다는 6일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5백 만원의 차용행위를 하고 1백 만원 이상의 향응을 대접받았다면, 이를 대가성이나 뇌물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경고조치한 시간도 좀더 깊은 조사를 벌였더라면 얼마든지 변호사와 검사들간의 유착관계와 금전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행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거나 타수행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6. 암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외국어 등)
7.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여성운동, '고용·폭력·정치참여' 주목 90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4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세계인권선언 선포 50주년과 세계여성의 날 9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IMF시대'를 맞아 악화되고 있는 여성인권의 과제와 올 한해 국내 여성운동의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다.

올해 여성계가 주목하고 있는 과제는 △고용 △폭력 △정치참여 문제 등이다. 특히 '가자, 여성이여! 고용안정·인권이 보장되는 평등의 시대!'라는 이번 대회의 구호에서 나타나듯 여성고용문제는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계는 정리해고시 여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 나아가 실업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체계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노동자 가운데 63%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5인 이하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최근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는 문제 역시 당면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영숙 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여성들을 화풀이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며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 등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방송이나 교육 등을 통해 의식변화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주목하고 있다. 여성계는 새 정부의 공약대로 올 지자체 선거를 비롯해 여성에 대한 30%할당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당면현안을 중심으로 8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 붓물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정리해고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 설치된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에는 매일같이 50-100건에 달하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금삭감, 체벌, 집단 해고 등에 대한 고발이다.

부당노동행위 대책위가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고발된 사업장은 정리해고

시 지켜야 하는 해고회피 노력·사전 예고·합리적인 선정기준 등 필수적 요건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으며, 혹자 경영 속에서도 경제난을 핑계로 임금삭감과 체벌을 일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중소기업은 물론 LG건설, 대우전자 등 대기업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G건설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해고당한 박재로 씨 등 8명은 "사퇴를 종용받을 때,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타부서로 발령내겠다' '이번에 사표를 내야 퇴직금이 손해보지 않는다' '출근하면 사무실을 봉쇄하겠다' 등 강요만 있었을 뿐, 해고기준에 관한 일체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주중으로 접수된 사례들을 취합·분류한 뒤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한 권의 책... 『프라이버시와 인권』

(Privacy and Human Rights)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 곳: UNESCO 1994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시대 가장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권의 한 분야인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량축적이 가능한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특별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는 1970년대부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물이 『프라이버시와 인권』!

이 연구를 통해 제임스 마이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점차 자동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도 항상 조응해왔다는 점.

둘째, 아직 컴퓨터 전산화가 안된 나라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망라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확대되기 전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개인정보 중에서도 의학정보와 유전정보는 점차 공공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제 민간단체, 노조, 전문가들이 프라이버시를 사회적인 관심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온 결과 많은 나라들은 정보보호법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운동을 펼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0일(화)  
제 10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을 빗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김 씨가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교도소 내에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 씨와 변호인측(담당변호사 임종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김 씨의 가족은 전주에 살고 있으며, 김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교도소장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보복을 가할 목적에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송처분은 재판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가 전주교도소에서 이송처분을 받은 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미결수이던 지난해 10월 사소한 이유로 징벌 2개월 처분을 받고 51일간 독방에 갇혔으며, 이 과정에서 잠을 잘 때나 식사를 할 때를 포함해 24시간 내내 수감과 쇠사슬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김 씨는 부인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전 전주교도소장 이충배(1월 인권구치소장으로 전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박승주, 전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김광주 씨 등 4명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3일만에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가 징벌 목적으로 재소자에게 수감과 쇠사슬 등을 채우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받았다. <본지 1월24일자 2면 참조>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김 씨가 제기한 '수용장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

### 정의평화상, 라파엘 크리닉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펼쳐

들빛회(회장 김승훈 신부, 지하순 주교 기념사업회)는 제2회 '정의평화상' 수상자로 서울대 <라파엘 크리닉>을 선정하고 9일 오후 6시 30분 가톨릭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들빛회는 <라파엘 크리닉>이 의료봉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외교의 역할까지 했다며 수상자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에서 김전 라파엘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의료봉사를 시

작했다"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써 서로간에 사랑과 평화가 풍성히 넘쳐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라파엘 크리닉>은 서울대병원 가톨릭교수회(회장 김기현 교수)와 가톨릭학생회(회장 김대민, 의약2)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로써, 격주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해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성신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진료를 하고 있다.

제1회 정의평화상은 96년말-97년초 총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민주노총이 수상한 바 있다.

### .....주요 공판 안내

▶10일(화)  
·조현재(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진호(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훈동(국보법등) 오후2시, 합의10부, 서울고법 403호, 속행  
·홍성이/정영훈(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선고

▶11일(수)  
·심명갑(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속행  
·김소연 외5(상해치상등) 오후2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속행  
·이승현(특공치상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선고

-12, 13일자 공판은 내일자에

## <인권시평> 필진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의 박력있는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3월-9월 <인권시평>의 필진으로는 오창익(전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권시평> 3면에



### 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

97년 10월 23일 전주교도소장이 간부들과 함께 순시를 나왔다. 미결수들은 관행대로 5명이 한 줄로 정좌하고 앉았으며, 잠시 후 김 씨는 순시하는 사람들이 갔는지를 보려고 돌아왔다가 교도소장과 눈이 마주쳤다.

이어 교도소장과 김 씨 간에 "너 뭐냐"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다. 너 어디 아프냐" "체중이 나가다 보니 항문이 좋지 않습니다"는 문답이 오가다 김 씨는 교도소장 앞으로 불려나갔다. 이때 김 씨가 수감번호가 없는 재소자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 교도소장은 "이 놈 봐라"며 욕을 했고, 그 순간 김 씨와 한방에 있던 재소자가 "소장님, 형님이 나이가 맞살인데 욕을 하십니까"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빌미가 돼 김 씨를 비롯한 재소자 6명은 보안과로 끌려갔으며, 이후 김 씨는 팔, 팔뚝, 발목, 허리 등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인 채 0.79평 독방에 수감되었다. 이어 교도소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씨 등에게 2개월의 징벌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51일간 쇠사슬로 묶인 채 밥을 먹고 옆으로 누워있는 채 잠을 자야 했다. 성경책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했고, 잠잘 때 외엔 담요 한 장 받지 못했다. 거드림이와 사타구니에 상처가 있던 김 씨는 쇠사슬이 닿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당했고, 담요 아래에 라면박스로 습기를 차단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

전주교도소 내에선 지난해 10월 이후 쇠사슬로 묶인 채 징벌을 당한 재소자가 1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8일 오후 2시 전국여성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개 단체는 여의도에서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차별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의 우선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신·출산 등에 따른 여성의 보호와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채용할당제 등 고용유지와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탈법적 정리해고와 여성우선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장 대책 확충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3권 등 ILO협약 즉각 비준 △경제과탄·민생파탄의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업측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여성우선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과 정리해고 회피 노력 이행, 재벌총수와 그 가족의 재산헌납, 노동자의 인사경영참가권 보장, 전경련 해체 등을 요구했다.

### 주간/인권/호/름 (98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 2일 (월)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식량위기가 중대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발표/전미결프전 자료센터, 91년 결프전을 전후해 미군 40여만 명이 인체에 유해한 우라늄 입자인 '감손 우라늄' 입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주장

◆ 3일 (화)  
서울시교육청 발표, 97년말 시내 초·중·고교에서 생활고 등의 이유로 점심값을 지원받는 학생수는 모두 6천 3백74명, 1년새 48.8% 증가/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 박윤순, 최은순, 이종걸 변호사 뽑아

◆ 4일 (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 55년만에 옛 나치 게슈타포 알폰스 괴츠프리트(78)를 유대인 학살등 중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 5일 (목)  
대전지검 홍성지청 윤형모 부장검사,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윤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종결

◆ 6일 (금)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의료사고의 원인의사측이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7천9백80건으로 구제금융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보다 64.5% 증가/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파공작원 최정남 씨는 "고 씨의 노동당 가입 듣지 못했다"고 밝혀/부천민주노동청년회, 인천구치소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없이 도서관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 일부를 삭제해 전달했다고 밝혀/미국 국방부, 68년 3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인 '미라이 학살사건' 공식인정

◆ 7일 (토)  
<외신종합> 세르비아 보안군의 코소보 자치주 알바니아 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사상자 증가하면서 5천여 명의 알바니아 난민 발생

◆ 8일 (일)  
서울남부지청, 안기부 공작팀장 주만중(4급) 씨가 부하직원인 이재일(6급) 씨, 제미동포 윤홍준 씨와 함께 북풍기자회건 공모한 사실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안기부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노동부, '단순반복작업 노동자 작업근로지침' 배포/전국인론노동조합연맹, 97년 말부터 지금까지 실직인론인 2천여 명을 넘었고, 올 상반기 안에 이보다 더 많은 인론인이 해직될 것이라고 밝혀/서울고법 특별9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개인적인 운행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세계여성의 날 90돌 기념 및 제14회 한국여성대회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 인권 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우린 솔직히 고민이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개표당일은 물론이고, 당선자 시절에도 긴가민가했었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김 대통령은..."이란 소리를 열흘 넘게 듣게되니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겨우 실감하게 되었다.

김대중씨는 스스로 곧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여러 차례 투옥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며, 매일처럼 가택연금을 받았던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다. 6월항쟁의 성과로 복권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권운동가였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어찌 쉽게 믿어지겠는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고민은 시작된다.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한총련 학생들이 지금도 '전민항쟁'을 외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솔직히 고민이다. 양심수가 3월중예 나오긴 나올텐데, 우리의 바람대로 죄다 나오지 않고, 모양 갖추기 식으로 선별적으로 석방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풀긴 풀었고 어차피 나중에 다 풀어줄 것이니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양심수 전원석방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정권 초장부터 반대성명을 내면서 치고 나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고민은 양심수 석방문제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그 양반이 살아온 이력이나 철학으로 볼 때, 양심수 석방이든 재벌개혁이든 다 할텐데, 50년을 기다렸던 우리가 까짓 몇 개월, 몇 년을 못가다리나고 느긋하게 굴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비슷한 보수정권, 그것도 쿠데타 세력과 결탁한 정권일 뿐인데, 무슨 기대할 게 있나고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처럼 침묵하게 머리싸매가면서 논투, 사무를 벌이지는 않는 요즘 분위기가 고마울 뿐이다.

얼마 전 요즘 언론계나 타고 있는 북풍조작사건으로 구속된 제미동포 윤홍준 씨의 가족이 우리 위원회를 찾아왔다. 억울하니까 도와달라는 거다. 박홍 신부, 오제도 변호사를 차례로 찾아다니 보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윤씨를 도울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서른이 갓 넘은 윤홍준 씨는 북경, 동경, 서울에서 세 곳에서 연쇄적으로 김대중씨에게 별건 몇철을 해대기 위해 '김정일의 자금' 운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사람이나 듣고 자시고 할 짓은 없었지만, 윤씨 어머니와 약혼녀의 거친 주장은 웬지 나를 허전하게 만들었다.

윤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검찰이 윤씨의 면회를 방해해서, 가족들마저 구치소에서의 면회는 거절당했고, 겨우 검사 입회 하에 검찰청에서 단 한번 그것도 잠깐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도 두 차례 윤씨를 접견했지만, 역시 검사가 입회한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긋지긋한 안기부의 용공조작, 그 치열리는 조작에 놀아 난 윤홍준 씨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받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태껏 설치고 다녔던 박홍 신부, 오제도 변호사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데. 그렇지만 몇 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던 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 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 씨의 범죄와 윤 씨의 권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 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 원칙을 놓치면 진다

그래, 원칙이다. 문제의 답은 원칙에 있다. 이제 김대중씨의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가 아무리 국민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었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온 보기 드문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정치인이었다 해도 그의 이력은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답 '원칙'을 부여잡고 나가면 된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조작간첩이나 양심수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앞으로 감옥에 보내야할 정형근, 이사철, 김일윤 의원 같은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법원의 결정을 내심 환영하면서 전두환씨를 죽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그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형을 반대하려면 모든 형태의 모든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반대해야 한다. 일반형사범이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사법살인, 보복살인, 제도살인이고, 전두환씨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몇 년 전, DJP 연합은 상상도 못할 때, 제일 팔보기 싫은 것은 노육(老慾)이라며 김중필씨의 정치적 재기를 꾀했던 어떤 신문사 논설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자제도 고쳐안지 않고,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에 대해서는 아테나위를 들먹이며 '경험을 배워야 하고, 경륜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전두환의 사형이야기나, 논설위원의 노육과 경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 일리가 바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다. 김대중 시대를 살아가는 인권운동진영의 생존전략(전술이 아닌), 그것은 휴머니즘이라는 원칙을 부여잡는 일이다. 한번 부여잡으면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놓치면 진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1일(수)

제 10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북 주민 3백만명 사망 추정

### 불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백여명 너달간 면접 조사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충격적인 실상이 국내 민간단체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4달 간 북한 식량난민 4백27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조사 인구의 29%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인구는 면접대상자의 가족을 포함해 총 2천5백83명이며, 사망자수는 7백44명이다. 사망률이 특히 높은 연령층은 60세 이상의 노인과 어린이들이며, 이 중 0-6세의 어린이 사망률은 무려 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의 대량사망사태가 주로 전염병에서 비롯되었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망 원인의 52%는 여전히 굶주림에 의한 것이지만, 폐결핵 등 질병에 의한 사망자도 3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필요한 약품마저 공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며, 깨끗한 식수의 부족은 전염병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량사망을 일으키는 전염병은 주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열병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이고, 지난해에는 파라티푸스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영아 사망률 45%, 전염병 창궐

이같은 식량난 속에 조사대상인 반수 이상은 배고픔이 끊어진 이후 벼뿌리·소나무껍질·바닷가조개 등으로 연명해 왔다고 밝혔으며, 나무·산나물 등으로 장사를 하거나 가구와 집기를 팔아 생계를 이어나간 사람들도 다수였다.

불교운동본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여간 사망자가 최소 3백만 명 이상이며, 올해에도 최소한 3백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지금 북한 주민의 대량사태는 과거 한국전쟁이나 캄보디아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20세기말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대의 참사"라고 밝혔다.

### 대량 이사 전쟁 때보다 심각

불교운동본부는 "이러한 사태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올해 최소 2백만 톤 이상의 대량 식량지원과 전염병 예방약 등 의약품 지원, 그리고 깨끗한 식수공급이 최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언론과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각국정부가 즉시 UN식량원조에 참여하는 곡물량을 늘릴 것 △보다 많은 국제기구 요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험에 처한 북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최악의 위험에 처해있는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식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유엔아동기금이나 국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들이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수도의 기능 정상화와 방역 및 면역활동(예방주사)의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국제연합이 중국정부와 협력하여 즉시 중국 국경을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북한 난민들의 위기를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국경지역인 압록강 두만강변의 중국 길림성내 장백, 연변지역에서 식량을 구하려 넘어온 북한 주민

들을 대상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청년회의 준비위' 결성

#### 14개 단체, 진보정당 건설 목표

8일 오후 3시 성동청년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등 전국 14개 청년단체들은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향후 진보정당건설을 목표로 '청년회의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혁)를 결성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준비위원회는 '고용안정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진보정치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1천2백만 노동자의 완전 고용 및 진보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켰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선임 및 조직체계, 운영안을 확정하고 4월 11일 '고용안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제' 행사 등 활동을 펼쳐기로 했다.

### .....주요 공판 안내

▶12일(목)

·김인호(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 10시, 합의3부, 교법303호, 선고

·김은희, 최순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교법404호, 속행

▶13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2부, 지법319호, 속행

·박중대(국보법 간첩등) 오전11시, 합의4부, 교법403호, 속행

·김학균(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교법403호, 선고

·민경우(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4부, 교법403호, 선고

##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에 주요 부분을 요약해 게재한다.

사건: 97교합78(병합 149)

피고인: 엄성복

검사: 옥준원

변호인: 변호사 전봉호/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정동, 유길중, 안호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판단

가.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 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

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또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이적목적 외에도 위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1995. 10. 초순경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조직의 인선을 논의하고, 같은 달 21. 09:00 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적단체 결성식을 개최함으로써 위와 같이 계속적이고도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진술들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위 각 판결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체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사는 1995년도 전북대 총학생회 선거에 즈음하여 인간중시 계열 선거운동원들의 후보 추대식 및 교양대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 진술자들에게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없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공소외 양진건, 김진옥, 오경섭이 1995.

10. 초순경(중략) 위 모임의 개최장소가 전북대 총학 사무실이었던 점과(위 장소 또한 학생들이 공개적인 곳 이어서 이적단체의 조직인선을 결정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중략)

(2)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목적은 1.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인간중시 이념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등이고, 조직의 규약은 1. 시간엄수, 2. 철의규율(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조직보위철저 4. 혁명적 동지애로 무장이라는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앞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목적은 서로 비슷하며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목적 및 규약을 채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3) (4) (중략)

(5)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직의 명칭이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것이나, 위 명칭으로 작성된 어떠한 문건도 나타난 바 없고(중략)

(6)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가 결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도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중략)은 모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각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들만을 증거로 하여 위 이적단체의 결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위 각 판결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인간중시" 제하의 문건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 행사가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결성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중략)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 없는 증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1998. 2. 26

재판장 판사 김용현/ 판사 차문호/ 판사 조윤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2일(목)

제 10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자신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소자의 재정신청을 허위로 취하시킨 교도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당하게 됐다.

지난 96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치고(43·부동산업) 씨는 여광석 전 청송 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로 12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윤 씨는 87년 '절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후, 90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으며, 이 기간동안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93년 6월 여

광석(당시 소장) 씨 등을 대구지검의 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윤 씨는 재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감호소측의 협박과 회유를 받던 끝에, 94년 1월 중순경 '재정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윤 씨는 "재정신청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가출소한 뒤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취하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씨의 주장대로 재정신청취하서는 필적이 위조되고 무인도 베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취하서 상의 무

인은 다른 지면에 압지된 무인을 겸중이의 은박지 등을 이용해 전자(轉寫) 위조한 것이며, 재정신청취하서상에 기재된 '윤치고' 성명 3개의 필적은 그림 그리듯 그린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해 9월 28일 MBC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신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건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반드시 규명해야 할 수사상황에 대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결정할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 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행위 여부까지도 밝혀낼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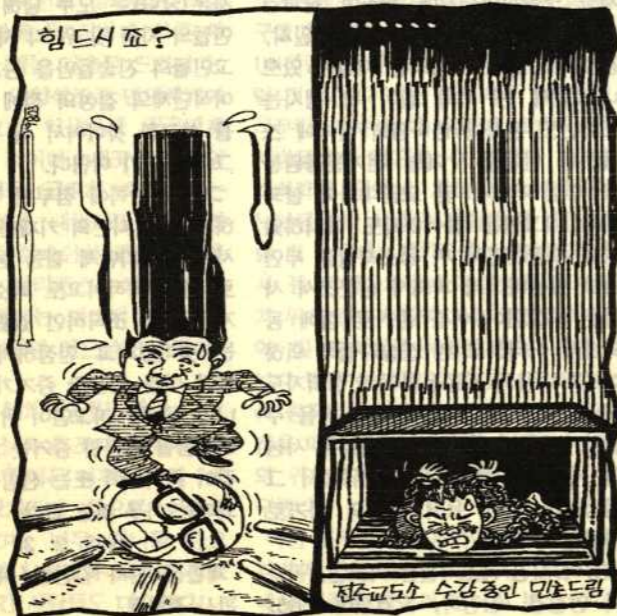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새정부 출범후 안기부 개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96년말 안기부 고문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시도했던 김형찬 씨등 인권피해자들이 인권유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10시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과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대책위(상임대표 홍근수 목사, 대책위)는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에 의한 인권유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유린 및 불법적 정치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 활동 금지 등 안기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안기부의 예·결산 공개와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인 감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 해방후 미군기지 내 최초 시위

### 군산지역 사제단, 군산비행장 사용료 징수 항의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이래 최초로 종교인들이 미군기지 내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회장 김진화 신부) 소속 신부 20여 명은 최근 군산미군기지 사용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 9일 오후 2시경 미군기지를 기습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신부들은 4대의 자동차로 미군기지 위병소를 무단으로 통과한 뒤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기지 내에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오후 2시 30분경 군산경찰서 소속 전경 1개중대가 도착해 "아무런 통보나 공문발출없이 사령관 집견은 불가능하다"며 강경하게 막아나섰으며,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던 미군측도 오후 3시경 신부들이 현수막을 들고 미군기

지안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헌병대 장교가 협상을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결국 4시 20분경 신부측 대표단이 미군안대실에서 미군측 헌병대 장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김진화 신부는 "미군기지 기습 점거농성은 불평등한 한미협정등 모든 협상을 개정하라는 선포"라고 밝히며 "만약 성명서가 미공군 사령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농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측은 성명서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지원의 군산 미군기지 주둔군 지원금비 및 사용내역 공개 △미군측의 활주로 인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내역 공개 △한국측에 미국

내 활주로인상안 규정 강요하는 미군측 폐단 시정과 사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즉각 폐지 △한반도 내 미군은 즉각 물러갈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 철회운동'을 전개한 시민모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은 현재의 활동을 일단락짓고, 이후 미군기지 소송실태 조사를 통해 보상 및 치료대책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본지 3월 6일자 참조).

## 행사와 동정

□ 북한 식량난의 실태와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민간 정부 언론의 협력방안  
·때: 13일(금) 오후 2시-5시 30분  
·곳: 종로성당 3층 강당(종묘공원 옆 765-6105)

·1회의: 탈북주민 472명 면담조사 결과와 최근 북한주민의 식량난 실태  
·2회의: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민간 정부 언론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주최: 참여사회연구소(723-9581)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3672-5373)

□ 여성인권과 평화 세미나. 권력과 고문의 구조, 고통의 비윤리적  
·때: 14일(토) 오후 5시  
·곳: 또하나의 문화(322-7946)  
·주최: 또하나의 문화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제6기 8차 대의원총회  
·때: 17일(화) 오후 2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월간 『함께걸음』 창간 10주년 기념식

·때: 19일(목) 오후 5시  
·곳: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기념강연: 장애우등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론의 역할(최창섭 서강대 언론대학원 원장)

□ 제14기 장애우대학 수강신청자 추천 접수(521-5364)

·강의: 3월 20일-6월 19일(오후 7시-9시)

·곳: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장애인 월간지 『함께걸음』 10주년

따뜻한 정책 · 훈훈한 미담의 10년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장애인 전문 월간지 『함께걸음』(이사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이 오는 15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한다.

85년 9월 『밀알들』이라는 장애인 소식지에서 출발한 이후, 88년 3월부터 본격 발행된 『함께걸음』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등한 삶의 권리회복'과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꾸준히 장애인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동안 『함께걸음』은 '세계의 장애우 그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미국 등의 장애인 복지실태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21세기 장애우 복지의 과제, 탈시설화'라는 정책·제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기사로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91년 2월호에 장애인 부부 예상덕, 이순영 씨의 훈훈한 삶의 이야기로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사람사는 이야기'는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함께걸음』 관계자는 "88년 첫 발간과 동시에 '장애우'라는 개념을 도입·확산시키는 등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장애우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청소년·부녀복지 등 복지문제 전반의 상황과 정책방향 제시의 역할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회에서 아직도 신체적 장애를 사회적 장애와 동일시하는 편견이 팽배하고 독자층도 폭넓지 못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함께걸음』은 19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우 등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창간 10주년 기념강연과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3일(금)

제 10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

정부가 북풍공작 사건조사와 더불어 안기부 개혁작업을 단행하는 가운데, 안기부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탑골공원에서 제220차 목요집회를 갖고, 안기부 피해자의 석방과 안기부의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임기란 상임의장은 “지난 61년 5·16 쿠데타후 ‘중앙정보부’로부터 탄생한 안기부가 그동안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공작정치를 벌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해 존재해온 안기부를 즉각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2년 대선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당시, 아들 황두하 씨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나온 전재순 씨는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22일간 고문받았던 악몽을 생각할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다”며 분노했다.

전 씨는 “당시 안기부에서 심문조사를 받을 때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힌 채 ‘여기가 어디인줄 아는가’ ‘이년이 돼먹지 못했다’ ‘이선실을 보았는가’ 등의 협박을 받았으며, 특히 당시 정형근 안기부1차장(현 한나라당의원)은 아들, 며느리, 손주들 가족 5명이 보는 앞에서 ‘이년은 시시하게 다루서는 안된다. 가족들 앞에서 총살시키겠다’며 고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민가협 관계자는 “당시 안기부가 송해숙(황두하 씨 부인) 씨를

아들(황두하, 당시 3세)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가해 아직도 두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한 9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창희(전 외국어대 교수) 씨의 아들 박재혁 씨는 “안기부가 아버지를 술먹이고 고문수사해 아버지가 북경 북한대사관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약 아버지가 북한대사관에 갔다면 사진 한 장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는가”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의 부인인 김혜정 씨도 “안기부는 97년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진행한 70세 이상 고령자들마저 연행해 고문하였다”며 “안기부 조작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사면도 안돼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가협 관계자는 “지난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씨의 죽음은 바로 안기부의 고문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정부는 안기부의 선처죄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야말로

로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가협은 이날 목요집회에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전면적 조사 △안기부 고문수사 진상규명 △고문수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기부 개혁단행 등을 촉구했다.

## 오늘 특별사면 예정

### 11시 법무부 공식발표

관심을 모았던 김대중 정권의 특별사면조치가 오늘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끝난 뒤 오전 11시 특별사면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갖는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들은 오전 11시 이후 전국의 각 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교도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13일 전국의 각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일반 수 및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방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오후 7시)

91년 이른바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의 필적감정을 맡았던 김형영 씨가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고 김기설 씨와 강기훈 씨의 필적을 다시 한번 감정의 쇄하고 7년전 이 사건의 관계자들을 찾아가며 진실을 추적한다. SBS는 지난 93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유서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으로 방영을 취소한 바 있다.

## 정리하고 갈날 앞...생존전략은 투쟁뿐 대우정보시스템 밀어부치기식 해고

IMF시대를 맞아 각 사업장마다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능가하는 양상이다. 최근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정보시스템(사장 유완재)은 밀어붙이기식 해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전 직원 1천7백여명 중 1백53명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우중공업에서 근무중인 10명은 지난 2월 27일 개별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의 해고방식은 자진 사직 또는 같은 계열사인 대우자동차판매(주)로 옮기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다. 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로 옮길 경우, 우선 현 직장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대우자동차판매에 고용되더라도 6개월간의 판매실적이 좋아야만 채용되는 임시직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해고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할 경우엔 보직대기발령과 자택대기발령으로 일을 빗긴 뒤, 인사대기발령에 이은 권고사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상의 정리해고 조치를 취하면서도 회사측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조리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웅(36·8년 근무) 씨는 “회사측이 지난해 50여억 원의 흑자를 내는 등 해고를 해야하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으며, 그밖에 △노조와의 사전협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 30일전 통보 △합리적 선별기준 제시 등의 모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고자들은 느닷없는 통보에 일자리를 찾아볼 여유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며, 현재 김대웅 씨등 3명은 회사로 정상출근하면서 무언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아직까지 아내에게 해고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다”며 “해고통보가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들은 IMF시대와 노사정 합의에 이은 정리해고 시대에 편승해 해고의 갈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속절없이 온 가족의 생존권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결국 버티기와 투쟁만이 노동자들의 선택으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 “전경련 해체” 기습시위

### 김우중 회장 추대식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전경련 회장 추대식이 열린 12일, 행사장소인 을지

로 롯데호텔 앞에서는 ‘재벌해체와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행동연대) 회원 주축로 규탄 시위가 열렸다.

회원들은 “김우중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벌사교집단인 전경련의 해체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재벌총수들 재산의 사회환원 △노동자 경영참가 등을 촉구했다.

한편, 낮 12시로 예정된 경제5단체장과 전경련 회장단 회합을 위해 재벌총수들이 속속 롯데호텔로 도착하자, 행동연대 회원 4명은 축하연장인 38층 고급클럽을 기습 방문했다가 호텔직원들에 의해 전원 밖으로 끌려나왔다.

이들은 “김우중 회장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재벌이 잘못된 것이 뭐냐’고 발언한 데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축하연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행동연대는 또 “앞으로도 도심지와 재벌본사 앞에서 지속적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리해고자와 실업자들의 아픔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수첩] 시장님은 ‘즐대기’중 ‘인권’ 두고 거래하는 김선기 평택시장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공천경쟁이 한창인 지금, 평택시 김선기 시장의 행태가 눈길을 썩거리게 한다.

평택시는 지난 96년말 이후 예비다제단 비리 문제로 물의를 빚어온 지역이다. 재단을 운영하는 최성창(전 재단이사장) 씨 일가의 횡포와 비리에 맞서 예비다제농아학교 학생들이 장기간의 농성투쟁까지 전개했지만, 최 씨 일가의 아성은 지금까지도 굳건하기만 하다. 이 과정에서 관찰관청인 평택시청에 대해선 재단쪽만 편든다는 비난이 빗발쳤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김선기 평택시장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던 즈음 김 시장은 돌변한 태도를 보였다. 새정치국민회의의 한 의원실로 사람을 보내 “의원님의 뜻대로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전한 것이다. 당시 김 시장은 여당이 된 국민회의의 공천을 따기 위해 발벗고 뛰어다니던 중이었고, 여기에 ‘예바다 사태’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뒤늦게 사태 해결의 의지를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시장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약속한 바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정가와 평택시 내에선 ‘김 시장이 국민회의의 공천이 어렵게 되자, 자민련쪽으로 말을 바꿔타기로 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자민련 공천을 위해서라면 굳이 ‘예바다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당초 평택시청은 재단 이사진을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김 시장은 갑자기 ‘재단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니 또다시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농아학생들의 인권이 걸려있는 예바다재단 문제를 한낱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로 치부하는 김 시장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3일(금)

호 의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속보 - 3·13 특별사면 명단

- \* 최장기수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던 우용각 씨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 구미유학생사건 관련자이자 영화 "외투"의 소재가 된 강용주 씨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 최호경, 장창호, 양홍관, 변의숙, 이경섭, 함정희, 은재형, 손병선, 조덕원 씨 등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석달윤, 함주명, 이상철, 김태룡 씨 등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정화려 씨 등도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 방북시인 박영희 씨도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3.13 공안사범 사면자·감형자 명단>

순위	성명	사건명	조치	비고
1	강남운	한총련 출범식	잔형집행면제	
2	강동화	일심단결회	잔형집행면제	잔형 3개월
3	강석현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4	강성모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5	강정희	분향소 관련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6	고영기	공산주의자연합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반
7	권유신	96서강대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8	김광수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9	김문근	승당마을 강제철거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10	김선태	공산주의자연합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반
11	김성식	계급투쟁동맹	잔형집행면제	잔형 3개월
12	김승기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13	김시홍		잔형집행면제	
14	김연석	서울시립대 총학부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15	김영	방북	잔형집행면제	*김하기
16	김용기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17	김우형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18	김재호	사학연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19	김희영	경희대 총학 부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4일
20	남승균	96 인부총련 의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순위	성명	사건명	조치	비고
21	문순덕	계급투쟁동맹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22	문종권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23	문치웅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24	박경근	광주대총학생회(94)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25	박광순	시위	잔형집행면제	
26	박성동	외대 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27	박세화		잔형집행면제	
28	박용모	회합, 통신	잔형집행면제	*진판스님
29	박종익	시위 주도	잔형집행면제	
30	반호진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31	방진욱	사민청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32	백주선	중앙대 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33	서경원	방북	잔형집행면제	
34	서다윗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35	선정우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36	성두현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37	송진환	남총련의장(92)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38	신성필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39	양승호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40	양연수	아암도 철거반대	잔형집행면제	
41	양준석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42	양희선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3개월
43	오동욱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44	우한철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45	유지봉	충북총련 중집장	잔형집행면제	
46	윤영광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47	윤정민	통일중공업 노조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48	이남영	국제사회주의자사건	잔형집행면제	
49	이영원	단국대 학내시위	잔형집행면제	
50	이종철	고려대 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51	이철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52	이혁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53	정명아	국제사회주의자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54	정양덕	활동가조직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55	조봉호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56	최익환		잔형집행면제	
57	최인기	사민청	잔형집행면제	잔형 6개월
58	최창근	민정연 사건	잔형집행면제	
59	탁귀영	국민대 총학 부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60	황영호	한국합성노조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61	강재우	범민련 사건	형집행정지	* 강희남
62	김병권	범민련 사건	형집행정지	
63	김병주	제일교포 사건	형집행정지	
64	김인수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5	박창희	일본관련	형집행정지	

순위	성명	사건명	조치	비고
66	신인영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7	윤수갑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8	윤용기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9	전창일	범민련 사건	형집행정지	잔형 6개월
70	최하종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71	홍경선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72	손유형	재일교포사건	가석방	
73	유정식	일본유학관련	가석방	
74	황석영	방북	가석방	

<감형자 명단>

순위	성명	사건명	조치	비고
1	강희철	일본관련	감형	
2	김성만	구미유학생사건	감형	
3	김정목	남북어부	감형	
4	남진현	사노맹사건	감형	
5	박동운	행방불명자가족사건	감형	
6	박수관	재일교포사건	감형	
7	심금섭	남한조선노동당	감형	
8	안승윤	행방불명자가족사건	감형	
9	양동화	구미유학생사건	감형	
10	유재선	일본관련	감형	
11	이장형	일본관련	감형	
12	이재익		감형	
13	정영	남북어부	감형	
14	황대권	구미유학생사건	감형	
15	황인오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감형	
16	황인옥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감형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4일(토)

제 10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교과 74명이었다.

관심 속에 단행된 13일 새정부의 특별사면조치는 일부 양심수만을 선별석방하는 '생색내기'에 그쳐, 다시한번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석방된 74명은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 4백78명 가운데 15%에 그친 숫자이며, 김영삼 정부 출범당시 석방된 144명(총 양심수 중 28%)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8년 이상 수감된 초장기수 23명 가운데 신인영(69·31년 구금) 씨 등 단 6명만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을 뿐, 41년째 구금중인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씨(70) 등 17명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구미유학생 사건(85년)·사노맹·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년)·구국전위 사건(94년) 구속자 등 굵직한 조직사건의 관련자들 역시 모두 석방되지 못했으며, 석달윤(18년 구금)·함주명(15년 구금)·이상철(15년 구금)씨 등 군사정권 시절의 조작 간첩 사건으로 주목받은 사람들과 학생운동 관련자 대부분도 사면에서 제외됐다(상자 참조).

#### 비전향자 사면·감형 탈락

그러나 이날 사면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면에서 제외된 사람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국가체제 진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며, 결국 '반성의 여부'가 사면의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도 교도소 내에서 구태의연한 사상전향서와 반성문, 탈

퇴서약서 등을 강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령의 초장기수 6명을 제외하곤 비전향자 모두가 사면 또는 감형대상에서 제외당했다.

#### 만기 앞둔 석방...생색내기 다수

또 이번엔 석방된 사람들 대부분은 형기의 90%이상을 마쳤거나, 구금기간이 2년이 안된 사람들이어서, 사실상 사면의 의미를 갖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영(경희대생) 씨가 출소를 불과 나흘 앞둔 상태에서 석방된 것을 비롯해 형기의 94% 이상을 복역하고 풀려난 사람은 14명이며, 윤정민(통일중공업 노동자·6개월 구금) 씨 등 2년 이하의 구금자는 48명이었다. 결국 새 정부의 사면조치는 '머리수 채우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실망...분노...규탄"

한편, 새정부의 특별사면이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로 끝나버리자, 석방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들과 시민사회단

체들의 실망과 분노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김태룡(19년 구금) 씨의 누나인 김순자(56) 씨는 동생이 갈아입을 옷가지까지 준비해 대전교도소로 내려갔으나, 김태룡 씨가 사면명단에서 빠져있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순자 씨는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 반가워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가협, 민변, 천주교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소폭·선별석방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면조치는 군사정권이나 김영삼 정권에서도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조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부에 의해 기만당했다는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144명의 양심수가 석방된 것과 비교해봐도 실망스런 조치임에 틀림없으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권력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가협, 천주교인권위, 전국연합 회원 등 5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명동성당에서 사면 조치에 대한 혐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 주요 미석방 양심수

1. 우용각 씨 등 초장기수 17명
2. 조상록 씨 등 4·5·6공 간첩사건 관련자 15명
3. 박노해·백태웅·남진현·현정덕 씨(이상 사노맹 관련자 전원)
4. 김성만·황대권·김용주·양동화 씨(이상 구미유학생 사건 관련자 전원)
5. 김낙중·손병선 씨 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13명 전원
6. 안재구 씨 등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 6명 전원
7. 박영희 씨 등 방북 관련자 4명
8. 기타: 8·15 연세대사건 관련자 등 한총련 대학생 다수

## “각오하고 있었으니 열려 마십시오” 사면 제외된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씨

13일 오전 특별사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도 최우선의 사면대상자로 꼽혀왔던 우용각(70) 씨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사면명단에서 빠져 버렸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나이가 모자란다”는 것 즉,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만 70세 이상자 석방’이란 기준에 비추어 우용각 씨는 약 7개월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다.

“우용각 선생님의 출소를 환영합니다”는 플래카드까지 들고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오전 11시경 우 씨가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자 “이건 말도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대신 면회를 통해서나마 우용각 씨를 위로하고자 했다. 하지만, 우용각 씨는 모든 ‘비전향장기수’와 마찬가지로 가족외엔 면회가 제한된 신분. 3년 전부터 면회가 허용된 우동(70·종전이러는 이유로 면회허용) 씨를 제외하곤 바깥세상의 누구와도 얼굴을 맞닿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선별석방 소식에 분노한 민가협 어머니 등 면회객들은 우동철 씨의 뒤를 따라 면회장으로 들어다쳤고, 교도관들은 기세에 눌린 채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비록 석방이 되지 못했지만 면회를 통해서나마 40년만에 ‘바깥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우용각 씨는 답답한 자세로 면회객들을 맞이했다.

“각오하고 있었으니 열려 마십시오.” “밖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신인영 씨가 나가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40년의 세월 끝에 ‘바깥세상’으로 전달된 우용각 씨의 심경이었다.

**‘유서대필’ 사건 TV방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오후 7시**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 봅니다.

### 장기수 등 선별석방 ‘실망’ 엠네스티, 전국회의 성명

새정부의 사면조치에 관심을 가져왔던 국제인권단체에서도 3·13사면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나섰다.

13일 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발표해 “일부 정치범의 석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또 “많은 장기수가 좌파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엠네스티가 제시한 양심수의 명단은 단지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제일한국인 정치범 지원을 위

한 전국회의]도 “제일 한국인 정치범인 손유형, 김병주 씨와 일본관련 사건의 유정식, 박창희 씨의 석방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서순택·김장호 씨 등을 비롯한 5백명 가까운 정치범들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출소자 1천명에 설문지 배포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13일 오후 2시 전국 30개 교도소 앞에서 특사로 석방된 출소자 약 1천여 명에게 ‘교도소 인권실태조사’ 설문지를 일제히 배포했다. 설문지 배포에는 교도(구치)소 소재 각 지역의 민주단체들이 참여했다. 두 단체는 8월까지 97년 이후 출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작업을 벌여 교도소 인권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문의: ☎ 02)777-0643, 02)741-5363

### 36년만의 출소, 최하중 씨

## “기쁜 게 부끄럽습니다”, 첫 소감

36년만에 감옥문을 나선 최하중(72) 씨의 출소 첫 소감은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석방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이 먼저 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부끄럽습니다.”

석방대상자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했을 기쁨이 왜 철심 노구의 장기수에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는 ‘동지’들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이었다.

이날 최 씨는 여느 석방자들과 달리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바깥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수십년간 감옥에서 동고동락한 신인영(69·31년 구금) 씨가 수십명 인파의 환영 속에 대전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던 순간, 최 씨는 납치되다시피 교도소 뒷문을 통해 강생보호소로 이송된 것이다. 남한내에 연고자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뒤늦게는 후원인들의 도움으로 강생보호소에서 나온 최 씨는 만감 속에 환영객들의 포옹을 받을 수 있었다.

72년의 인생 가운데 정확히 반평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고 나온 최하중 씨는 스스로를 “다섯살배기 어린이”로 비유한다. 최 씨는 “전화를 어떻게 거는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심지어 못질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생활능력이 저가 되어버렸다”며 “앞으로 세파를 헤쳐나가는 것이 저지 않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최 씨는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삶터인 봉천동 ‘만남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일궈나가게 된다. “감옥에 있을 때 바깥의 지원이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을 바란다”는 최하중 씨는 한편으론 “서둘러 세상에 익숙해진 뒤, 겨레가 하나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7일(화)  
제 10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전두환·노태우는 나왔는데...”

### 5·6공 양심수, 47명중 단 3명 석방

인권범죄자인 전두환·노태우 씨 등이 이미 풀려난 데 반해, 5·6공 인권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번 3·13사면조치를 통해서도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가협 집계 따르면, 5·6공 때 구속돼 지난 13일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 사건의 김성만(85년 구속) 씨 등 총 47명, 특히 폭압정치가 극에 달했던 전두환 정권 때의 구속자만도 26명에 달한다. 그러나 5·6공 양심수 가운데 이번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은 서경원 전 의원과 김병주(제일동포 사건), 손유형(제일동포 사건) 씨 등 단 3명에 불과했으며, 석달윤(18년 구금, 형기 87% 복역) 김장호(16년, 76% 복역) 이상철(15년, 84% 복역) 함주명(15년, 75% 복역) 씨 등 5공 정권의 고문피해자로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양심수들마저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3·13 석방자 기자회견 가져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3·13 사면조치와 관련, 서경원 씨 등 13일 풀려난 석방자들은 16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백여 양심수 전원의 석방과 전면적인 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석방자들은 “40년간 구금중인 우용각(70) 씨를 비롯한 장기수 17명을 여전히 석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비인도적 처사이며, 유엔인권위가 석방을 촉구한 김성만, 황대권, 안재구, 류라진, 정화려, 박래군 씨 등이 제외된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황석영(형기의 82% 복

역), 서경원(88%), 박창희(83%), 김희영(만기 4일전) 씨 등 만기를 거의 다 채운 일부만을 석방하면서도 박화국(만기 9일전), 안윤정(97.6% 복역) 씨 등 형기의 2/3를 복역하고도 풀려나지 못한 양심수가 50여명에 달하는 점 △70세가 넘는 비전향장기수와 범민련 사건 고령자들에 대해 잔형면제가 아닌 형집행정지를 내리고, 황석영, 손유형, 유정식 씨 등 3명은 가석방으로 풀이준 점 △사상전향 거부물 이유로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 씨를 감형조치에서도 제외한 점 △임수경, 임종석, 현준희 씨 등 공민권을 박탈당한 수만 명에 대해 사면복권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는 형평에도 어긋나며 진정한 사면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석방자들은 또 “사면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대해 ‘재범의 우려’ ‘체제전복의 위험성’ 운운한 것은 국민정부 역사가 과거 군사정권이 주장했던 냉전적 사고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용기(73·39년 구금), 최하중(72·36년 구금), 김인수(76·36년 구금), 홍경선(74·31년

구금) 씨 등 비전향장기수 4명과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 박창희 전 외국어대 교수, 전창일 범민련 의장, 유정식(23년 복역), 백주선(96년 중앙대 학생회장) 씨 등 19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사면에서 제외된 박노해 씨의 부인 김진주 씨와 김성만·황대권·강용주·변의숙 씨의 어머니 등도 참석했으며, 박창희 교수는 “같이 생활하던 황대권 씨의 어머니를 보니 면목이 없다”며 흐느껴 좌중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 재소자 도서반입 불허 여전

명확한 규정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했다가 재소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이 이를 시정하기로 했던 약속을 또다시 어겨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 3월 7일자 참조>.

인천구치소측은 지난 3월 초 부민노청(회장 박재현) 수감자들이 도서검열에 반발하자 “이제부터 도서, 서신검열에 있어 수감자들을 최대한 배려해 잘 넘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구치소측은 “박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소자들에게 도서반입 및 서신검열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최근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교도소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

인권의 시각지대, 교도소와 구치소. 그곳에는 평균 5-6만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인권개선을 위한 첫 작업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정시설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출소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 02)741-5363 (담당: 엄주현)  
·천주교인권위원회 ☎ 02)777-0643 (담당: 윤요양)

### 산재 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88년 설립후 산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온 노동과건강연구회(공동대표 김은희, 노건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토론회 및 기념총회를 갖는다.

노건연은 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8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해온 산재추방단체로서, 28일 오후 2시-5시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705-8216)에서 10년간의 산재추방운동 역사를 짚어보고 정리,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에 앞서, 노건연은 각 부문별로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한다. 17일엔 '산업안전분야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허와 실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생과 산업환경의 변화 △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 등을 알아보고 정책적 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19일 '산업안전분야의 쟁점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산재해의 근본적인 추방을 위해 '산업안전의 역사 및 안전인증제도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끝으로 24일 '보상과 재발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재보험 민영화 주장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현재 재정경제원과 재벌들은 산재보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민영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치료재활, 직업재활의 실태에 따른 바람직한 재활세계 및 구체적 내용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각 부문별 토론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588-6944)에서 각각 오후 7시-9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54차 유엔인권위 개막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4월 24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된다.

#### .....주요 공판 안내

- ▶17일(화)
  - 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서울지법 311호, 선고
  - 홍성이(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선고
- ▶18일(수)
  - 신선호(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속행
  - 강신호/이소현/정동호(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속행
  - 최영욱(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선고

-19, 20일 공판 내일 게재

### 주간/인권/호름

(98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 ◆ 9일(월)

현대중공업 용접노동자 6명, 중금속 크롬중독에 의한 콧구멍출혈병에 걸려/천주교 전주교구 신부 20여명, 군산미군기지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미군기지 기습점거 위위/과파엘리너, 제2회 정의평화상(들빛회 제정) 수상

#### ◆ 10일(화)

주한미군, 구제금융시대 매출 격감을 이유로 PX 등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정리해고 추진/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민 4백27명을 상대로 면접조사 결과, 최근 2년 동안 조사인구의 29% 사망해/국민회의·자민련,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방안 적극 추진/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이 오는 4월말 곡물재고가 바다나 추수 때까지 원조물자인 수입식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 11일(수)

일본 인사원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성적 학대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여성 응답자 중 17%가 상사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나

#### ◆ 12일(목)

세계일보사, 10일 방영된 문화방송 <PD수첩> '위기의 신문, 개혁은 오는가'편에 출연해 재벌언론의 폐해를 지적했던 김영호 기획위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정인숙 판사, 신발을 훔치다 교사에게 들켜 뺨을 맞아 턱을 다친 대구 B여중 과아무개양과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나친 교사체벌은 위법행위라며 1천4백만 원 지급 판결/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치고 씨, 여광서 전 청송 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일본 정부, 북한과 인도네시아 등의 식량위기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국제원조용으로 비축하는 '식량은행' 설립 검토중

#### ◆ 13일(금)

새정부 특별사면, 양심수 4백78명 중 15%에 그친 74명만 석방/민기협 등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와 관련 "양심수 석방의 수준이 극히 미흡하다"고 비판

#### ◆ 14일(토)

문화방송 <PD수첩>의 신문개혁시리즈 2탄(신문의 권력 유착 실태) 17일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문화방송 상층부 측 무기한 연기

#### ◆ 15일(일)

국민회의, 양심수 석방이 기대에 못미쳤다고 석탄질등에 추가사면을 단행해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통계청 발표, 97년 1월과 2월 사이 전체 실업자 증가율은 평균 69.5%(38만3천명)/서울지검특수3부(박상길 검사), 97년 12월10일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등 5백 명 이상을 보유한 서울시내 13개 대형종합병원들이 총 1백58억 원을 부당징수한 사실 밝혀내고 보건복지부에 정식통보 안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새로운 인권을 설계 할 때”

###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6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과 93년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6일 개막 연설을 통해 "이제는 인권침해에 대응

하는 시대로부터 이를 예방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위한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고 밝혔다(아래 연설 요지).

이번 회기에서는 53개국 정부 대표들이 각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 및 자결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고문과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이번 54차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는 해일 뿐 아니라, 93년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5년만에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원칙들은 전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고, 오늘날 사회발전의 척도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공동의 선언이 되어야 하나, 불행하게도 아직 '선언'은 행동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은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희생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인권피해는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세기는 예방의 시대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행동할 수 없노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오늘의 인권침해는 미래의 갈등을 불러온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갈등의 악순환은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개발, 인권 사이의 관계를 융화시켜야 한다. 각국의 경험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인민의 완전한 참여나 인권의 완전한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는 이 지구상에 대량학살과 전쟁, 공포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은 제정되었다. 마틴 니콜러의 경고에서처럼, 우리의 양심이 반인권적 도전을 받을 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자신과 후손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제는 세계인권선언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인가를 물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언을 올바르게 지킬 것인가를 물을 때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5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전 인류를 위한 공동의 인권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바라보며, 향후 50년을 위한 인권의 새로운 단계를 설계해야 할 때이다.

1998년 3월 18일(수)

제 10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기타 비인도적 처우 및 형벌, 실종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그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인종차별 △교전국가의 아동문제와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권과 관련된 문제 △국가·인종·종교·언어에 있어 소수자와 선주민의 인권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인 '양심적 병역기피자'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설명을 듣게 된다.

###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19일(목)
  - 김인호, 윤성도(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303호, 선고
  - 류응범(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303호, 선고
- ▶20일(금)
  -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3부, 서울지법311호, 속행
  - 이장희 외1(국보법등) 오전10시, 4단독, 서울지법523호, 속행
  - 이중린, 나정순(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1부, 서울고법 303호, 선고



<특별기고>

#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홍근수(목사, 향린교회)

김대중 정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취임 경축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스스로 "건국이래 최대의 사면"의 은전을 입은 사람들이 무려 5백52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추스리기 어려움을 느낀다. 이번 대사면에서 석방된 양심수는 불과 74명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기협 등 재야 인권단체에서 무조건 석방하라는 양심수 총수인 478명 중 15%에 불과한 숫자이다. 이 중 5백33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면·복권이란 것은 고차교통법정 사제이고, 공무원 징계말소가 17만여 명, 행정사범 등을 복권해 준 것이 3만여 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 군사정권에도 못 미친 실패작

국민의 정부란 것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으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나 도둑놈들이나 파렴치범들을 사면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가? 간첩생산과 북풍조작을 전문 업으로 삼고 있는 안기부나 공안검찰에 의한 죄인 아닌 죄인인 양심수들 400명 이상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고서 국민의 정부니 새 역사니 국민대화합이란 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양심수 석방 수준은 국제연대네스티나 유엔이나 이 나라의 종교계의 양심수 석방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작이다. 심지어는 종전 군사독재정권이나 사이비 문민민주정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적인 국민의 탄식이 들린다.

당선 다음날로 광주학살과 국정과정의 원흉들마저 과감히 석방할 수 있는 결단력을 보여 통근 정치를 기대하게 했던 김 대통령이 정작 양심수 석방은 대사면의 모양 갖추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이었고 552만에 걸친 대폭적 사면 단행은 숫자 불리기 노름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 기껏해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격이 되고 만 것이다. 색깔 의심을 받고 있는 김 대통령의 새 정권의 안정 문제와 보수우

익 쪽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나머지 불가피한 '자품'이었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이번 사면조치를 발표하면서 "제법의 우려가 있는 자, 앞으로 체제전복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했다"고 했다. 그에게 묻고 싶다. 지금 옥중에 있는 양심수 중에 과연 '정부전복'이나 '체제전복'을 꾀했거나 꿈꾸는 사람, 또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단 말인가? '체제전복활동 우려' 운운으로 이들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과거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과 천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정당화일 뿐이고 '민주화'와 '민족대화합'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한총련 학생들과 범민련인사들과 장

기수들을 비롯하여 노동해방운동의 지도자들인 박노해 씨와 백태웅 씨 등과 평화통일운동의 상징인 김낙중 씨와 손병선 씨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춤을 추고 나와서 가족의 품에 안기게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이유는 대사면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누가 체제전복세력인가?

이번 대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양심수들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진정한 민주인사들과 통일꾼들이다. 문제는 이 양심수들을 체제 전복세력으로 보는 낡은 의식이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야만 정권이 안정되고 국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반역사적인 낡은 의식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들이 자유를 숨쉴 수 있도록 감옥문을 활짝 열어 이번 사면조치에서 제외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이것만이 국민대화합과 민족대화합의 길이고 민주화와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이는 길이다. 그리고 새 정권이 국민의 정부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 한 권의 책...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장호순/ 개마고원/ 344쪽/ 1998/ 1만2천원

미국 헌법의 역사를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개마고원 학술서적 1호로 출판된 이 책은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사건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도 함께 소개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멀리 판결(1908), 흑인과 백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브라운 판결(1954),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를 제시한 헤리스 판결(1993), 통신품위법의 위헌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제한규제의 범위를 지적한 르노 판결(1997) 등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인들이 보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인권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과거사를 들춰보면서 필자는 현재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결국 자유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편집자주> 이번 주부터 새 책 소개를 수요일자로 옮기고, 매주 토요일에는 국제인권소식, 인권영화를 소개합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19일(목)

제 10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낙성대의 새 식구들

### 출소 장기수, 또 하나의 시작

남한에 연고가 없는 출소 장기수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낙성대 [만남의 집] 이 새 식구를 맞았다.

13일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된 비전향 장기수 최하중(72세, 36년 구금), 김인수(76세, 36년 구금), 홍경선(74세, 31년 구금) 씨가 그들이다.

출소 6일째인 18일, 최 씨 등은 머리를 맞대고 먼저 출소한 유운형(75세, 34년 구금) 씨에게 설명을 들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서류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다.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비워둔 것을 가리키며 최 씨는 "우리는 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며 얌전한 미소를 지었다.

홍경선 씨는 "동지들을 두고 나오면서 밭이 떨어지지 않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김대중 씨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배신감마저 느낀다"며 많은 장기수들이 사면되지 못한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한 독지가가 마련해 준 2층 양육인 낙성대 [만남의 집]에는 이들 새 식구 외에 7명의 장기수들이 생활하고 있다. 세계최장기수로 알려졌던 김선명(74세, 45년 구금) 씨는 기공소에 일자리를 얻어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이종(88세), 최남규(87세) 씨등 4명의 장기수들은 연로한 탓인지 걸음걸이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만남의 집의 하나뿐인 여성 장기수인 정순덕(66세, 23년 구금) 씨는 의족에 의지한 몸으로 분주하게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들의 조용한 일상에

새식구들의 삶이 보태졌다.

최하중 씨는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현재 생활능력이 어린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남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후에 내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모두들 양로원 아니면 갱생보호소에서 지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지들과 만나 너무 좋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집이 더욱 비좁아져 동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우리들보다 좀 젊다는 이유로 다리도 성하지 않은 정순덕 씨가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하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순덕 씨는 "이렇게 살아서 만날 수 있

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선생들이 스스로 방청소도 하고 식사 때마다 도와줘서 편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족에 의지한 식사준비 모습은 힘에 부쳐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들은 또다시 석가탄신일 사면을 기다려야 한다. 옥에 두고 나온 동지들의 석방에 대한 기대가 크겠지만 홍경선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대적으로 사면한다고 하면서 그 당일 국무회의를 하는 등 형식이란 형식은 다 갖춰놓고 6명만 내보내주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천천히 사면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석가탄신일 때 사면할 걸 왜 이번엔 못했겠느냐"며 별반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접고 난 뒤 출소장기수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서를 갖고 관악구청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는 공중전화 사용법을 배워야겠다"며 바깥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 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업체의 동의를 거쳐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 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여전히 2년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묶어둠에 따라, 노동착취·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을 목사, 외노협)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상품가치' 정도로 여기는 관료와 기득권집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심화되었다"며 정부측을 강력 비난했다. 외노협은 "연수취업제는 변형된 산업연수생 제도일 뿐"이라며 연수취업제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현행 외국인인력관리제도인 산업연수생제는 그동안 불법취업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해 온데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각계의 '폐지여론'을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아무야 시킨 바 있다.

##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병 초래"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의 망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회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병' 운운하는 것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며 "경제가 좋아지면 사회 안전망이 자연히 이뤄질 것이라는 사회복지수석의 발언은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라고 질타하면서, 조 수석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단체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 때: 3월 19일 오후 7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 내용: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및 관악노동청년회 탄압상황 발표
- 제2차 아셈회의에 관한 시민·여성·사회단체 공동 워크숍
- 때: 3월 19일(목) 오후 4시-7시 · 곳: 환경운동연합
- 주최: 아셈한국민간포럼(문의: 참여연대 장소영 723-4255)
- 주제발제: 아셈의 논의 동향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박성훈 고려대 교수)/아셈의 쟁점과 민간단체의 역할(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외국인노동자 귀환을 위한 실질조치 촉구 캠페인

- 때: 3월 22일(일) 오후 1시-3시 · 곳: 명동성당
- 주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744-9063)
- 제1기 문화기획전문가 양성과정
- 때: 3월 1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곳: 민예총 강당(문의: 739-6851)
- 강사: 박인배(민예총 기획실장), 심광현(영상원 교수) 등
- 수강료: 7만원(전 12회, 자료비 별도)

□ 계간 [창작과 비평] 통권 100호 기념 학술 토론회

- IMF시대 우리의 과제와 세기말의 문명전환
- 때: 3월 27일(금) 오후 1시 · 곳: 연세대 상경대학 강당(각당연)
- 주최: 창작과 비평사
- 강연: 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 소국주의와 대국주의의 내적 긴장(최원식)/한국사회의 변동과 20세기(박명규)/세계사적 전환기에 맞는 민족문화론은 유효한가(임규찬) / 새로운 문명과 한국의 사회운동(이시제)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나눔이'(사무자원활동가)와 '지킴이'(야간상담원)를 모집합니다. (문의: 576-7128, 576-5513~4)

□ 제1기 광주지역 귀농학교

- 접수기간: 3월 23일(월)-4월 7일(화)
- 때: 4월 14일-5월 16일 오후 7시-9시(매주 2회 화·금요일)
- 곳: 남동성당 교육관
- 참가대상 및 인원: 귀농을 희망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선착순 60명)
- 수강료: 개인 5만원, 부부 9만원
- 주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 본부(062-523-1188)/실업자 권리센터(062-224-4139)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20일(금)

제 1086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2건), 부당해고(146건)와 부당전직(23건), 단협 위반(114건) 등이며, 결국 정리해고제도 실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협과 강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소사장제, 계약직 전환을 통한 사실상의 해고 △일괄사표 강요 후 선별사퇴 △인

수합병시 제입사 형식으로 선별해고하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업주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쥐어준 대신, 무차별적인 해고를 제지할 힘을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며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해고남용을 막기에는 너무 무력하다는 점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1백89개 사업장의 8만7천9백47명 노동자가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으며, 그 체불액수가 모두 1천6백1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임금을 삭감 당하면서도 '정리해고' 협박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한 노조활동 무력화 △노조가입 방해 및 노조탈퇴 강요 △노조전임자 임금 미

지금 △노조간부징계 및 활동방해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정부나 여당측의 대응은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는 27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부앞 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체제전복세력' 발언 규탄

민가협, 빛속 목요집회

지난 13일 정부의 사면조치 이후 첫 목요집회가 열렸다.

19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환, 민가협)는 탑골공원 앞에서 221차 목요집회를 갖고 3·13 사면조치를 규탄하며 양심수 전원석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집회에서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은 "이번 사면이 행형법상 매달 논의하는 가석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정부는 수많은 양심수들을 비전향자 및 체제전복세력으로 취급해 석방에서 제외시켰다"고 규탄했다.

사면에서 제외된 배태웅(사노맹) 씨의 약혼녀 전경희 씨는 '체제전복세력' 운운한 박상천 법무장관의 사면·석방 기준 발언을 비판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수많은 광주시민들을 살상한 전두환, 노태우 씨나 경제를 IMF나라로 내몬 김영삼 전 대통령, 대선 때마다 북풍커네션을 일으킨 안기부 등이 오히려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정리해고와 실업고통으로 자살한 노동자의 넋을 달래는 진혼곡

때: 3월 20일 오후 1시-2시  
곳: 여의도 국회의원회 중앙당사 앞

## "이사칼들이었다"

### <내일신문>, '고스톱 의원' 9명 공개

"김영구(서울 동대문울) 양정규(제주 북제주) 이용희(경기 용인) 이외의(대구 북갑) 변정일(제주 서귀포·남제주) 유홍수(부산 수영) 권익현(경남 산청·함양) 서정화(인천 중·동·옹진) 이상배(경북 상주)·이상 한나라당" 국회내에서 고스톱판을 벌인 국회의원 명단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주간 <내일신문>은 3월 25일자(224호)에서 "실명을 밝히려는 빛바치는 여론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고스톱 구설수에 오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기로 결정했다"며 "명단은 국회내에서 국가적 위기사태가 벌어진 지난 12월 이후 자주 고스톱을 쳤다는 구설수에 오른 의원들을 기준으로 삼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 3명의 증언을 종합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의원들은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19일 저녁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단체 탄압중지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원들.

특히 지난 2월 18일 부민노청 회원등 8명이 구속된 관노청 사건은 사실상 김대중 정권 이래 최초의 조직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사건은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호들갑 속에서도 공안당국의 인권유린과 조직수사가 여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래 첫 조직사건 '진보적 노동자들의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관노청은 지난 89년 결성된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에서 출발, 94년 명칭을 바꾼 이래 현재까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최근 'IMF를 이겨낸다'라는 제목의 경제강좌를 개설하는 등, '노동법강좌' 개설과 '무료노동법률상담실' 운영 등이 이들의 주요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찰은 관노청의 '강령'을 시비삼아 이적단체 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노청 회원은 "관노청엔 강령이 없고 단지 회칙이 있을 뿐이며, 공안당국에서 '강령'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이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듯, 아직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이적규정과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18일 목요기도회에 참석한 구속자 가족이 "열흘간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듯이 최초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진행된 이후 구속자들의 접견권은 시종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구속자들을 대공분실에서 각

경찰서로 분산 수용하면서 그 소재조차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연행 후 48시간이 지난 2월 20일 이후 서류상에 기재된 경찰서에 수감하지 않고 계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잠을 재웠다고 구속자 가족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조백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씨는 단지 관노청 회원들과 친분이 있었을 뿐인데 회원으로 지목돼 구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그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회원임을 자백하라"는 강압수사를 받았으며, 검찰 역시 그에게 관노청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두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당국은 조 씨가 관노청 소식지에 기고한 '다들비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95. 10)' '경영참가에 대하여(95. 11)' '임금체계와 단일호봉제의 이해(96. 3)' 등 이미 책이나 통신을 통해 발표된 논문들에 대해 이적표현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7일 구속된 부민노청

회원들 역시 관노청과 다를 바 없는 경우다.

부민노청은 지난 93년 지역 내 노동청년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철학·역사·노동법 강좌등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문화학교·풍물교실 등 대중 문화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부민노청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구성했으며, 정치학교 등을 통해 사상학습을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민노청 회원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조작된 문서를 들이대며 협박했고, 단순 교양강좌를 사상학습으로 조작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회원은 또 "지난해 12월 13일 기소되기 전에 이미 서울시경이 언론을 통해 조작된 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고, 민주단체에 대한 조직수사와 협박·폭력, 인권유린의 구태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의 부끄럽고 어두운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새벽 아침에

구속중인 윤순재(관노청 회장) 씨의 시

어느 새벽 아침인가  
용인으로 가기위한 터미널행 버스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멀리서 다가간다.  
욕심이 다 되도록 노동을 하시는 아버지  
몇 달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일까?  
어두컴컴한 노란 불빛 아래 서서히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허름한 옷차림과 깊어진 주름살  
피곤해 보이는 하얀 머리카라와 까끌한 피부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전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나를 쳐다보는 두 눈은 반기고 있었고  
크게 뜬 두 눈은 촛불처럼 환하게 따뜻함이 나의 가슴을 찔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가 숙여진다.  
노동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의 눈빛 옆으로  
내가 편히 있을 때 고통받는 동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모습은 허름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반기는 듯한 사랑찬 두 눈이 너무 능글하고 당당하였다.  
민중을 향한 굳센 마음과 정열과 사랑은  
노동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의 두 눈과 다를 것이 없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21일(토)

제 10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나?"

정리해고로 인해 너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마저 시작돼 서민들의 역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4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었던 △중구 퇴계로 2가~4가 △종로구 청계8가~왕십리 로터리 △강서구 방화역 주변 △성북구 돈암동 로터리~미아삼거리 등 8곳을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로이 청계8가 등 8곳 금지구역 설정

이처럼 서울시가 노점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춘절기와 IMF시대를 맞아 노점상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선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의 강운규 주임은 "노점을 없애달라는 민원은 별로 없지만, 일단 불법인데다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주임은 또 "단속을 완화하면 도로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노점상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내무부와 시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병열 중구청 가로정비계장 역시 "단속을 멈추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소수의 노점상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겪는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변 점포 상인들의 민원 △쓰레기 처리 등 환경

문제 발생 △생계형이 아닌 축재형 노점 발생 등도 노점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IMF형 노점상 급증 사전에 막자"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송병열 계장은 "단속 나갈 때마다 가장 큰 예외사항은 시민들이 노점상 편에 서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까지 IMF형 노점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일선 공무원들은 말한다. 그러나 5월부터는 그 숫자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존 위협에 처한 노점상들과 단속반원들 사이의 마찰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송 계장은 "사람들이 노점으로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뿐"이라며 "단속 이후의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단속실적 우수지역 포상

한편, 서울시는 분기마다 단속실적을 점검해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3개 구청에 대해 1백만 원 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버려져 버려진 서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결과적으로 노점단속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퇴계로 2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한 아주머니(44)는 이제 겨우 두 달밖에 안된 '초보 노점상'이다. 남편없이 중학생 딸 하나를 키우는 이 아주머니는 일 나가던 식당 사장이 어려워져서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두 달새 벌써 경찰서 신세도 지고 벌금까지 물었지만 앞으로 집중단속이 벌어져도 장사를 계속할 생각이다.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 아주머니에게 푹부러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

#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제조사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현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용자 이송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출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교도관의 기혹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송조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냈다.

### 정형근·정재문 의원 수사촉구

#### 시민연합준비위, '북풍공작 진상규명' 서한 전달

지난 대선 시기 안기부가 정치공작을 진행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안기부에 북풍공작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사회시민연합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김택성등, 시민연합준비위) 소속 회원 30여 명은 20일 낮 12시 20분경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풍공작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촉구서한을 안기부측에 전달했다.

시민연합준비위측은 "안기부가 지난 대선 때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구여권의 재집권을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심지어 이종간첩을 이용해 야당을 북측과 접촉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폭로해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려 했다"고 거세게 분노했다.

이와관련, 시민연합준비위측은 △정재문, 정형근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정치공작에 관여한 구여권 고위인사 파악 및 책임규명 △한나라당의 진실규명 및 사죄 촉구 △수사당국의 철저한 공개수사 등을 주장했다.

###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와 녹색연합(대표 노용희)은 20일 낮 12시 용산미군기지 제5정문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 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법매립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지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관련 건축업자와 미군의 처벌 △환경실태의 조속한 조사 △불법매립한 한미행정협정 즉시 개정 촉구했다.

최근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 물의를 빚고있는 동두천 미 2사단 케이시

부대는 80년부터 부대 내 훈련장 부근 야산 수만 평의 부지에 10여 미터 높이로 폐아스콘과 콘크리트, 석면, 우레탄 등 건축폐기물 수십만 톤을 불법으로 묻거나 버려왔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4조 1항에 따르면 '미군이 어떠한 환경오염을 저지르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노동자 녀를 달래자"

#### 금속산업연맹, 진혼굿 펼쳐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대란을 맞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죽

###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항의 파업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리헤이드 교도소 내 미결재소자 5백여 명이 지난 5일부터 혼잡한 교도소 환경에 저항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 절차를 진행시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재소자중 한 명은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수감되어 왔다.

### 미국, 아동학대로 하루 3명 꼴 사망

미국 내 아동들이 학대나 부주의로 인해 매일 3명 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들 아동 가운데 43.8%의 흑인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해마다 미국 아동 1백30만 명이 범죄나 강간으로부터 도망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시간에 한 명 꼴로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살인을 범한 아동의 40%가 2백만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지는 등 아동학대가 미국 시민사회 내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로 고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 제공)

음에까지 이르러 이들의 녀를 달래는 곳이 진행됐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산업연맹)은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의 당사 앞에서 진혼굿을 펼치고, 정부와 사용자측에 정리해고와 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최대립 씨를 비롯해 3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따른 고통으로 분신을 하거나 자살했다"며 "이들의 녀를 위로해주자"고 밝혔다.

이날 진혼굿은 판etti 종물과 진혼시 낭송, 진혼무 가무, 동양엔리베터 노조원들이 소지의식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3백여 명은 진혼굿이 끝난 뒤 오후 2시부터 '정리해고 저지와 재벌개혁을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정리해고제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를 주장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24일(화)

제 10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 현장에서 항의...집단 소송 제기키로

공권력의 부당한 불법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비폭력불복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서울대생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 셔틀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장에서 경찰의 불법검문이 진행되자, 집단적으로 항의에 나선 끝에 검문을 중단시켰다.

이날 경찰은 오전 10시경부터 서울대로 들어가는 버스를 통제하면서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집중검문을 벌였으며, 이는 서울대에서 서총련 집회가 열린다는 정보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이날 서울대에서는 서총련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경찰의 검문이 벌어지자 서울대생 50여명은 오후 1시경부터 교내 '열린 마당'에서 불법검문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시경엔 3백50명으로 불어난 인원이 교문 앞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법전 제시하며 항의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시종 비폭력원칙 아래 진행됐으며, 다만 검문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은 다소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는, 외에도 불법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을 준비중인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학사회에서

법검문의 부당함을 선전하는 한편,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법전(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이대며 불법성을 따져묻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이름과 군번을 적으려던 학생이 경찰관에게 뺨을 맞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에 학생들이 책임을 주궁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결국 오후 3시30분경 검문은 중단되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중요한 것으로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불법검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악경찰서장에 대한 탄핵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불법검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의 진술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김도형 변호사는 "불법검문이라 하더라도 일단 검문에 응했다면 법률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보이나,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행 또는 속박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해당 경찰관들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는, 외에도 불법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을 준비중인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학사회에서

불심검문 거부 움직임이 계속 확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정법관련 서신불허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19일 면회과정에서 구치소측에 의해 서신접수가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민노청 관계자는 "구치소측이 서신을 불허해 재소자의 알권리조차 말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검열담당자는 "편지 내용중 1/3은 행정법 관련이지나나 나머지 부분은 구치소의 검열행위에 대해 약용 또는 자의적 검열이라고 표현하는 등 전 반적인 편지내용 또는 흐름상 도를 넘어서 부분삭제보다는 불허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부민노청은 구치소측이 재소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하기전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일부 재소자를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를 내리게 하는 등 알몸수색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감자의 경우 알몸수색에 저항해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치소측은 지난해 7월부터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분간 한자 공부 시킨 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시험을 치르게 하고 평균성적이 좋은 훈련생의 경우 머리를 한번 더 감을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어 재소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교도소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

교도소 행정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출소하신 분들 또는 주변사람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 02)741-5363 (담당: 임주현)

·천주교인권위원회 ☎ 02)777-0643 (담당: 김요원)

###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연수취업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외국인노동자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본지 3월 19일자 2면 참조).

22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웅 목사, 외노협) 회원등 내국인 30여 명과 외국인노동자 70여 명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연수취업제의 철회'와 '귀환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부산경남지역 7개 단체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등 광주지역 6개 인권단체 등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연수취업제 시행령을 확정·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스스로 도장을 찍은 노사정 합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공개적 여론수렴을 통해 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귀국조치 이전에 체불임금, 산재 등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2차 과제로 논의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깨고 '외국인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기구를 통해 '연수취업제'의 시행을 전격 결정해 버렸다.

### .....주요 공판 안내

- ▶ 24일(화)
  - 김홍도, 김은희, 송석연(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404호, 선고
- ▶ 25일(수)
  -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합의7부, 서울지법423호, 재계
  - 김익(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4시, 합의2부, 서울고법302호, 속행
  - 조은호(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4시, 합의2부, 서울고법302호, 신건
  - 김미영, 김하균(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서울고법403호, 선고
- ▶ 26일(목)
  - 조현재(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303호, 선고
  -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404호, 속행
- ▶ 27일(금)
  -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2부, 서울지법319호, 속행
  - 김소연 외5(상해치사등, 한총련사건)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302호, 선고
  - 심명갑(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302호, 선고
  - 정재영(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서울고법403호, 속행

### 주간/인권/호/름 (98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 16일(월)

국민회의 정책위,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불허방침/국민회의, 5월3일 부처님 오신날에 양심수 추가 사면을 단행토록 정부에 건의 예정/3·13 특사로 풀려난 양심수 20여명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추가석방 촉구/제54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 17일(화)

통일부, 고려이산가족의 북한방문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방침/정부와 국민회의, 노사정 대화의 이행 점검과 후속과제를 다룰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법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철(전 민미협 공동대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가락동 한농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지원대책 마련 촉구/정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허용/삼성전자가 1천명 안팎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대기업들의 대량감원 구체화/서울시교육청, 고등학생용 성교육 교과서 처음 발간/노동부, 사업주의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주는 법정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20일(금)

국제펜클럽의 투옥작가위원회(회장 모리스 파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해제 요청/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98년 입단협을 산별교섭으로 벌여나갈 것을 사용주들에게 공식 제안/서울시교육청, 교원 1천1백여 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했으나 퇴직수당은 1백50명 분인 67억여 원에 불과해 명퇴 희망 교원 선별수리키로/열린사회시민연합 준비위원회 회원 20여명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공작 의혹 진상규명 촉구집회/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실업자 조직인 가칭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 결성/서울지법 공안1부 박민표 검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 적용, 징역 15년 구형/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법규절운동본부 회원 40여 명,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의 건축폐기물 영내 불법매립 규탄시위

◆ 21일(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98년산 추곡수매가 97년 보다 5.5% 인상 결정

◆ 22일(일)

수원대 인문대학 앞에서 재단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수원대 총학생회 천막농성장에 교직원 10여 명 난입/노동부, 실업자 동맹의 정식 노조설립 불허방침

인권  
시평

###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지난 달부터 1주일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부산에서 러시아 문학을 강의하는 임체희란 사람이다. 그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므로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시와 편지쓰기를 좋아하고, 아내와 딸, 아들이 있다. 하지만, 그는 정신병원을 세 번이나 드나들었고,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안기부에 의해 감시당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내와 딸마저 자신의 적인 안기부에 포섭되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 공부를 했고, 지금은 웬만큼 자신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공포의 원인제공자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터무니없는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고문의 대명사인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조차 있지 않는가. 도청과 협박, 감시, 미행 등등 음울한 행위들이 정보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되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다면, 그 공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안기부의 존재는 정치인이나 운동권 인사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안기부의 축소 개편 방향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안기부의 개혁추진 방향은 미흡하다. 과거 안기부가 자행한 온갖 불법적인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고문과 밀실수사를 통해 자행했던 인권유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일,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불법 인권유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과거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는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가령 정형근 의원과 같은 이들은 명확한 조사를 거쳐 공직에서 추방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보수집을 통해 축적해놓은 개인들의 '정보파일'을 모두 파기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그런 정보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다시는 안기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예산도 정확히 심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법의 개정을 통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안기부의 진정한 개혁이다.

정신병원을 드나든 대학강사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은 이와 비슷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안기부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들은 꽤나 귀찮은 존재다. 때로는 매정하게 내치기도 한다. 그들은 대부분 정보기관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무슨 지하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보기관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실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 최근 안기부의 북풍공작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으며, 창설 이래 가장 큰 폭의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짐쳐지고 있다. 지난해에 일어났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공작이 북한과의 커넥션 속에 이루어졌고, 안기부장이 직접 이를 지휘했다는 일 등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수사를 받던 안기부장이 자해를 해 입원하는 일로 이 문제는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일들은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벗어나 안기부가 심지어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정

치참여권마저 왜곡시키려 했던 것으로

문제는 '오해'로부터 기인한 이런 정신적인 공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과대피해망상증 환자들이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고 말한다. 이승만 정권 때는 특무대였고, 박정희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였으며, 안기부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는 안기부가 그 대표적인 기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정신과 치료나 받으라고 말할 수도 없다. 원인은 분명 이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그 공포로 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공할

이런 일들은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벗어나 안기부가 심지어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정

치참여권마저 왜곡시키려 했던 것으로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25일(수)

제 10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지난 16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가 한창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회의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인 하스 반 미엘로 씨는 "인권 선언 선포 50주년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어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는 냉엄한 현실이 50주년의 의미를 특별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의 외무장관 대리 니나 마짜이 씨는 "인권선언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가와 민간단체간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점령영토와 자결권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나 곤잘레스 쿠바 외무부장관이 발언에 나서 "서구국가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없이 자신의 기준에 미흡한 다른 나라에 대해 협박과 강압을 일삼았다"고 비난해 관심을 모았다. 곤잘레스 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는 확립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서구의 이중잣대는 유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좌초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곤잘레스 장관은 "미국의 불법적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다"며 "쿠바는 98년 현재 약 70퍼센트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공중보건과 교육,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쿠바 외무부장관의 발언에 앞서 인권위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힐데버그 존슨 노르웨이 장관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사태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을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으며, 킵켄 독일 외무부장관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 이장희교수 출금해제 요청

아시아인권위원회, 공동행동 촉구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에 대한 출금금지과 여권발급 중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교수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아시아지역의 각 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등 앞으로 항의서한과 성명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

## 행사와 동정

### □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연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

-아시아 이주노동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보고대회

- 1주제: 국제규약의 이해와 적용-신경임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 2주제: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이해와 과제-정혜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국제협력부)
- 3주제: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활동가들의 결의-김미선 (아시아 난 미그리트 센터-홍콩)
- 때: 3월 25일(수) 오후 3시-6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강당
- 주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02-744-9063)

### □ 진관스님 석방 환영 법회

- 때: 3월 25일(수) 오후 4시
- 곳: 조계사 내 문화회관
- 문의: 불교인권위원회 (734-6401)

쿠바, 서구의 이중잣대 비난 회의도중 매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위기에방에 대한 노력의 배가와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더 많은 실천"을 강조했다. 로빈슨 씨는 "앞으로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는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소녀 인신매매를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인종차별 반대투쟁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확충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일련의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로베르토 로바

## 4·3 50주년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요구

### 서울·제주 등 각지 행사 예정

제주 4·3사건 50주년을 앞두고 진실규명과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행사가 제주도와 전국에서 계획되고 있다. 명칭조차도 폭동 또는 항쟁등 상이하게 불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게 된다.

4·3사건은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당시 송영란(제주대 85학번) 씨등 3명이 4·3의 진실규명을 외치는 대자보를 붙이다가 연행된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진실규명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도민들간의 갈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성격론제를 비롯해 진상규명작업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 4·3연구소(소장 강창일)의 김창후 운영위원장은 "4월말까지 정부가 국회 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약속을 하는 한편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4·3의 해결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도의회도 4·3피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94년에 의회내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만5천여명의 피해자 신고접수를 마치는 등 도내 4·3사건의 진실규명 요구가 끊임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올해 행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주지역에서 94년부터 진행된 합동위령제와 '제50주년 제주 4·3 문화, 학술사업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남규)'가 펼치는 학술문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당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넋을 기리는 제주도 전통굿인 '해원상생굿'이 4월 1일 오후 6시부터 12시간동안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해 4월 5일 오후 6시에는 제주 카톨릭회관에서 4·3사건의 체형자들과 미국무성의 증언기록 내용을 영상화해 최초로 '4·3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찬국등)'가 제주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국화하는데 주력하

고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대표 강만길)도 8월 중순경부터 9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호르타 등 3백여 명의 국내외 저명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노동자적 발언과 관련해 국내 단체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98년 한미 무역투자 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이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치할

## 한 권의 책... 4.3은 말한다 · 5

- 은폐된 역사의 진실 찾기 -

제민일보 4·3취재반/ 전예원/ 492쪽/ 1998/ 1만5천원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꼬박 바쳐 취재한 기록물들이 다섯 번 책으로 나왔다. 이듬하여 '4·3은 말한다'! 한국 언론 사상 한 사건의 심층보도를 위해 10년 넘게 취재반을 가동해온 제민일보의 4·3 취재반의 노력은 이데올로기 편향에 의해 진실이 가려진 4·3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부터 제민일보 지면을 통해 연재되었던 같은 제목의 연재 기사를 중심으로 일부내용을 다듬어 보완한 것이다. 제1권은 '4·3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의문의 배경부분, 제2권에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5·10선선 거부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봉기과정, 제3권은 중산간 초토화 감행 직전의 사건들 기록, 제4권, 5권은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초토화 직전의 실상과 허구성을 마을별 취재를 통해 일일이 밝혀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에 대해 특별취재반의 김종민 기사는 "알게 모르게 겪는 외압을 견디는 것은 가장 정확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길"이었다고 술회한다. 그동안 4·3 취재반은 국내외에서 채록한 증언자만 6천 명을 모아왔고, 미군 비밀문서 등 미국·일본과 국내에서 입수한 관련자료 2천 건을 수집했다. 이런 방대한 자료와 치밀한 취재로 은폐된 역사를 정면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국내외 학계와 언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앞으로 4·3취재반은 초토화직전에서 벌어진 대량의 인권침해 사실을 트로픽식으로 기록할 예정이며 이를 두 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26일(목)

제 10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키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제1회 월례 심포지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각종 국제조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회장 박천웅 목사)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연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에서 발제자들은 ILO조약의 이주노동자 관련 조항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을 비준하도록 캠페인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선 씨는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올해 동안 이주노동자조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으며, 특히 11월 APEC회의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일, 12월 18일 이주노동자조약 채택일 등에 집중적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천웅 회장은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아직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국제연대활동도 취약해 캠페인에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국제조약 비준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보장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국제조약으로 지난 90년 채택됐지만, 현재까지 필리핀, 이집트, 보스니아 등 9개국만이 이를 비준하고 있어 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기 위해선 20

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미선 씨는 "세계적으로 약 5천5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약 8백만 명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각국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지난해 11월 1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민

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 소속 회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오창열(교육부장) 씨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구형받은 것을 비롯, 나머지 회원들이 각각 3년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구형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순 검사는 "부민노청이 공개단체를 표방했지만 활동내용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는 등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명백하다"고 말한 반면, 변호인측은 "이들이 순수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보는 눈이 편향적"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4월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 김형찬 대책위,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과거 수많은 인권유린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는 안기부에 대해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김형찬 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는 25일 오후 1시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북풍조작 인권유린 안기부 규탄 및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촉구대회'를 갖고 안기부 개혁과 김형찬 씨 고문수사관 처벌, 북풍조작 사건의 철저한 조사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90년대 들어서 안기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피해사태 67건이 접수되어 고소·고발되었지만 단 한건도 진상규명되거나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96년 12월 5일 안기부원 4명에게 고문을 당하던 김형찬 씨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2백50여 명이 참가했으며, 대책위는 안기부 개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안기부측에 직접 전달했다. 대책위는 공개서한에서 "안기부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정치인 사찰 및 고문, 인권유린행위가 철저히 밝혀져 법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권교체가 된 지금 이는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안기부가 김형찬 씨를 잡아가듯 상태에서 고문과 구타로 용공조작을 시도했다"며 "명백한 공권력남용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가 안기부직원 4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해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풍조작과 관련, 대책위는 "이번 북풍조작사건은 분단의 비극을 악화하여 상대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등 공안세력과 구여권세력이 저지른 정치적 음모로 안기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하는 등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종찬 안기부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북풍조작 관련자

전원 구속·처벌 △67건의 안기부 고소·고발 사건 제수사 및 처벌 △김형찬 씨 고문수사관 신원공개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 대학언론 탄압 극성

편집권 침해·기자 해임 잇따라

최근 대학신문에 대한 대학당국의 간섭과 탄압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대기연)은 "개강호 발행을 앞두고 각 대학에

서 기사와 제목이 수정·삭제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기자들에 대해선 해임·제적 등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대기연에 따르면, 안양대에서는 개강호에서 철거민 관련기사와 북한방송 관련기사 등 사회면 기사가 삭제당하고 주간교수가 편집장을 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인제대에서는 IMF제협상과 정리해고제 도입반대 등을 주장하는 광고가 실리지 못했다.

전대기연은 "현정사상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대학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학당국은 대학신문을 학교홍보지화 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문물 정상발행할 것 △학생기자들의 편집자유권을 보장할 것 △학생자치권 탄압 중지와 학생복지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 등을 주장했다.

## 행사와 동정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규탄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연대집회
  - 때: 3월 26일 (목) 오후 1시~2시
  - 곳: 미도파 백화점 앞
  - 주최: 국제연대 행동네트워크
-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투쟁 결의대회
  - 때: 3월 27일 (금) 낮 12시
  - 곳: 전국 16개 지역 (수도권-공화문빌딩앞)
  - 주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
  - 때: 3월 27일 (금) 오후 3시
  - 곳: 정동 세실레스토람
  - 내용: 교육부장관 및 국회의원의 면담 보고, 유아교육법 4월 임시국회 처리방안
- 노동과 건강 연구회 10주년 기념 총회 및 기획토론
  - 때: 3월 28일 (토) 오후 2시~5시(토론), 5시~7시(총회)
  - 곳: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 주최: 노동과 건강 연구회
  - 토론: ' ' 동안의 산재추방운동에 대한 평가
- 경제파탄 빈민전가 중단 촉구 및 백만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 때: 3월 31일 (화) 오후 1시
  - 곳: 종묘공원
  - 주최: 전국노점상연합 (725-5025)
- 제2기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평가회 및 <지방의회 여성위원의 삶과 도전> 출판기념회
  - 때: 3월 31일 (화) 오후 3시~5시
  - 곳: 기독교교회연합회관 4층강당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가비: 12,000원 (출간도서비)
- 지구적민중행동(pga) 국제회의 보고와 신자유주의 대응을 위한 토론회
  - 때: 4월 2일 (목) 오후 2시~5시
  - 곳: 종로성당 강당 (종로5가)
  - 주최: 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담당 이창근 837-2853/ 오병일 855-191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27일(금)

제 10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세계인권선언제정 50주년을 맞아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권리장전이라 할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을 오는 12월 10일 인권선언 제정일에 맞춰 채택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인 밥 겔만(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창립자, Bob Gelman) 씨는 서문과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 이를 배포했다. (www.wired.com)

겔만 씨는 ‘선언’ 서문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나듯이 인류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네트워크정보사회에서도 역시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꾸준히 통신검열 반대운동을 펼쳐온 ‘통신연대’ 검열팀이 앞으로 ‘사이버권리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전반적인 정보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연대 장여경 대표는 “정보기본권은 검열의 문제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조직할 권리 △정보교환의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엔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 뿐 아니라 자본에 의한 기술적 규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 첫 모임을 갖는 ‘사이버권리팀’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등급제’(특정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부여,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차단하는 제도)에 대한 학습을 시작으로 프라이버

시권 및 여타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미 상공회의소 규탄시위

####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주한 미국기업인들이 한국의 복수노동 조 허용 철폐 등 17개 노동 관행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국내 사회단체의 강력한 규탄투쟁이 벌어졌다(본지 3월 25일자 참조).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대표 이창근)는 26일 오후 1시 을지로 미상공회의소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규탄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연대집회’를 갖고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서 이지영(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소속) 씨는 “미 상공회의소가 한국 민중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으며, 이창근 대표도 “이러한 생존권 유린행위가 앞으로 더 노골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복수노동 허용문제 등은 한국 노동자들이 스스로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 외국 단체가 한국정부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도록 해서 안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5월경 IMF 전면 재협상 촉구 투쟁 때 다시 규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상공회의소의 부당한 요구 철폐 및 사과 △정부의 미상공회의소 요구 거절 및 고용안정 보장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노동탄압, 대량해고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미상공회의소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는 만약 4월 1일까지 미상공회의소의 답변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결의했다.

### <기자수첩> 대학관료들의 반인권적 발상 ‘정보통제’ 위해 팩스·인터넷 사용 불허

신속한 정보와 통신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대학신문사에 대해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심지어 팩시밀리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다.

공주교대는 최근 ‘팩시밀리와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이 학교 학보사 편집장의 요청을 싸늘하게 거부해 버렸다. 그런데 통신기기 사용을 불허한 학교측의 설명이 참으로 가관이다.

학보사 편집장 김경남 씨에 따르면, “정보교환을 통제하기 어려워 팩시밀리를 설치해 줄 수 없고, 북한과 연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같은 놀라운(?) 학교측의 발상 때문에 학보사 기자들은 직원용 팩시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 원고를 받고 이를 다시 컴퓨터 자판으로 두드려야 하는 ‘월시적’ 환경에서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경남 편집장은 “전국의 대학신문 중에 가장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총장 이하 대학관료들의 사고가 한심할 따름이다.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⑫ - 손민영 씨

#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월호 월간 <말>은 한 출소자의 수기를 통해 낙후된 감옥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 수기의 주인공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해 10월 24일 5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손민영(37) 씨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라는 고통 외에도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그의 아버지(손병선)는 무기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6년째 수감 중이고, 그가 구속된 지 10개월만에 어머니는 수배 중에 얻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세브란스병원에서 잠시 어머니를 뵈고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끝내 법무부 당국의 불허로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가 충격 속에 차례로 돌아가셨다.

그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며 수감생활을 이겨내야 했다. 그런 고통 끝에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였고, <말>지에 실린 ‘교도소에서 여자는 살 수 없었네’는 자신의 수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격적 고발이었다.

여자의 몸으로 여자가 살기 힘든 교도소를 체험한 그는 이제 교도소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풀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의 글은 일독할 가치가 있다. 그의 글 속에는 생생한 감옥의 실태와 인권을 박탈당한 이들의 절규가 절절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에 격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수감자에게는 고통이다.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과 격리되고, 경제생활, 정치적 권리들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나머지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가 경험한 교도소의 교화작업은 오히려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제시대의 수준이었다. 그래도 양심수는 낮다고 한다. 일반

형사범들의 경우, 그들은 거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동물처럼 취급당한다. ‘인간적인 자존심일랑 영치시키고, 수감기간 동안은 죽어지내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인 것이다.

한 알의 약 얼기까지 보름간 투쟁 그가 보기에 교도관들은 일제시대의 간수와 다를 바 없는 생각에 젖어 있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죄수니까 고봉스러운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젖어 있는다는 것이 5년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내린 그의 결론이다. 따라서, 그는 “최소한 경험한 부분을 알릴 것이다. 사회가 관심 갖게 하려

감옥에선 ‘인간적인 자존심일랑 영치시키고, 수감기간 동안은 죽어 지내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이다.

면 문제를 노출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할 길이 열린다”고 주장한다. 그는 출소하면서 수감생활 동안 틈틈이 적어둔 ‘병상일지’를 기초로 6개월 동안 수기 작업에 매달리겠다고 다짐을 했다. 관철음을 안고 수감되었던 그는 영등포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를 거치면서 자신의 병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약을 얻거나, 제대로 된 거각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었다. 그는 행형법과 시행령의 규정대로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 때마다 매번 거절과 청원,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위협(?)하고서야 보름 정도 걸려 한 알의 약과 한 번의 진료를 얻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김천교도소에서는 “독거수용자와 병자에게는 온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교도관들이 아예 모르고 있었

을 정도였다.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낙후한 의무과에 70세가 넘는 의무과장과 간호사, 약을 짓는 재소자가 의료인력의 전부인 그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한 일은 수지침을 배우고, 파스요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 때는 마비가 와서 앉아 있기도 힘들고, 손가락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때가 있어, 통시정 끝에 외부 진료를 했지만 김천의료원 원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엉뚱한 진료 결과를 내놓았다. 출소 후 진찰 결과는 관절염 재발이라니 기가 찰 뿐이었다.

관절염 재발이 정신병? 감옥의 이런 반인권적인 실태를 개선하는데 자신의 몫이 있다고 믿는 그는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의도(?)를 하고 있다.

92년 대선 전,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단 조직이라는 보도 아래 터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과 아버지가 분명 노동당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간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안기부 개혁문제가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자신의 약속대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감옥문제에 전념할 계획이다. 감옥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결혼도 해야 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취직도 해야겠지만, 지금도 5만에서 6만이라는 적지 않은 이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진보에 힘을 보태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28일(토)  
제 10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96-97년 노동법 개악에 저항하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본격적인 가두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강제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총력투쟁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7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총력투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한편, 4월 이후 지속적인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총파업까지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원장은 "성명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한 몇 마디 말로는 아무도 꺾이지 않는다"며 "결정적인 투쟁으로 집권자와 자본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줄 때에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파업을 하면 국가부도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급적 파업은 피하고 싶지만, 노동자들을 끝까지 거리로 내몬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정권과 언론이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영원히 일개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에게 파업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2월 국민들의 충정어린 걱정을 받아들이며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 개혁은커녕 오히려 하루 1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에 직면했을 뿐"이라며 "이젠 진정한 개혁과 일터지키기를 위해 총파업을 조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동양엘리베이터 등 파업투쟁 전개 현재 민주노총 소속 몇몇 사업장에선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3천여 명이 해고된 언론계에서 가장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곳으로 알려진 세계일보사는 지난 2월 1백6명의 차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뒤 20명을 해고했으며, 편집국 기자 53명중 48명을 이미 내보냈다. 또한 세계일보는 최근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벌언론의 피해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김영호 전 편집국장을 해고해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고자 조정진 씨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여당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다"며 "이제는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양엘리베이터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비조합원 2백80여명이 강제해고 당하고, 회사가 단체협약의 불이행을 통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조차 무시하는 근로자파견제 시행령을 마련한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조철 관공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시행령에서 모든 노동자를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력의 공급원마저 자본이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제 총력투쟁을 선언한 노동자들이 '국가부도위기'를 앞세우는 정·재·언론계의 집중포화를 뚫고 총파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지난해 초 노동법·안기부법 낱기 통과에 맞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게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노동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97년 의장)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용길 씨 등은 97년 1월 8일 대전 중앙로 동양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노동법 총파업과 관련하여 집회를 주도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9월 30일 기소됐으며,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는 고소·고발이 취하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이번 판결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단병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마저도 노동자의 목을 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노조와 노동운동가들의 활동을 묶어두려는 비열한 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공권력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이 또다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대생들은 지난 20일 벌여졌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관악경찰서장(이인원 총경)의 공개사과를 받기 위해 교문을 나서 인도로 평화행진을 시도하던 도중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서울시경 소속 전경 6백여 명에 의해 가로막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던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남학생(96학년)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관악성심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학생(96학년, 남)도 방패에 오른쪽 코를 맞아 5-6바늘을 꿰매는 등 학생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총학생회는 오후 2시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3 선별사면 규탄과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대 쉼기대회'를 갖고 지난 20일 부당하게 진행된 불심검문에 대해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관계자도 "세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예전과 별반 차이없이 민주주의 기본권을 현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현재 3백여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으며, 이후 관악경찰서장 등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3·20 불법검문에 대한 관악경찰서장 공개 사과 △모든 인권유린 측각 중단과 민주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복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복풍사건을 진정한 안기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각계의 의견이 모여다.

27일 김진균 교수(민주화진보를위한 지식인연대 대표), 홍근수 목사(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복풍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정치공작의 산실 안기부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89년 이내창 씨 의문사사건, 96년 김형찬 씨 분신사건 등 안기

부 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안기부의 낡은 인맥을 청산하고 조직표를 바꿔 그리는 것만으론 반민주적 국가기구의 진정한 청산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과거청산과 민주적 통제로 안기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풍사건을 통해 정치권의 대북점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이중잣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도 27일 성명을 통해 "복풍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정치권이 조기수습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또 '수도권 특수지역선교회 선교자금사건'(75년 4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79년 3월), '서울제일교회 폭력사건'(83년)과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76년 발간) 등 책자를 통한 용공음해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당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민교협·민변·참여연대·경실련 등 4개 단체는 오는 4월 2일 '안기부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은 올해 정보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본지 3월 27일자 1면>. 이와 관련 미국의 밥 켈런 씨는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의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6조) 누구나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 단체의 내부규정에 달려있다.
- (제9조) 누구도 온라인 상의 동의 또는 협정과정에서 자의적 감시를 받아서는 안된다.
- (제13조) 누구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온라인에서 단체를 선택할 자유, 교육·실천·예배·규율에서 신념이나 종교를 명시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누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단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본적인 온라인 통신과 적용에 관한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빈곤자, 노인 그리고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30일(월)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긴급> 도원동 철거민 위급상황

### 두 명 생명위독, 철거민 농성 철탑 붕괴 위험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철거현장에서 오늘 새벽 철거민 두 명이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철거구역원들이 철거민들이 농성중인 철탑을 붕괴시키려고 해 다시 위험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일 새벽 1시3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 골리앗(철탑)에 진입하려던 철거민 중 도원동 주민인 이범희(남, 61)씨와 백석호(남, 28)씨가 크게 중상을 입어 현재 중앙대학 병원과 한강성심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이씨는 정수리부분이 맞아 터져서 피가 뿜어나왔고, 갈비뼈와 척추, 목뼈, 다리뼈 등이 부러졌고, 특히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비장을 건드려 과다출혈을 하고 있고 온몸이 부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앙대학교 응급실에 있다가 의사들의 수술지연으로(수술비 문제 거론) 오전 7시가 되어서 수술에 들어갔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백씨는 얼굴과 손, 허리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정도는 얼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의식은 아직 깨어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중앙대학 병원에 찾아갔으나 중앙대학병원에서 치료거부를 당해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긴 상태이며 역시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 ● 도원동 골리앗 붕괴 직전!! (3시30분 상황) ●

현재 주민 41명이 갇혀 있는 도원동 철탑은 적준구역 철거반들에 의해 1,2,3 층 모두가 장악되었고, 철거반원들이 계속 철탑 하부를 붕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현장 주위에는 경찰병력이 둘러싸고 있어 기자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철탑 내부는 물이 흥건하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와 전화연결도 이미 끊어졌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자인 삼성건설측이 외부에서 철거현장이 보이지 않도록 담을 쌓고 있어 고층 건물에 올라가지 않으면 철거현장을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재야 원로인사들과 각 단체 대표들로 항의단을 구성, 용산경찰서측과 구청 측에 항의방문을 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전철연 사무실로 긴급히 연락해주시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 <항의전화합시다>

용산경찰서장실 713-0121

용산구청장실 710-3333

삼성건설 751-3355

문의) 전국철거민연합 (766-556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3월 31일(화)

제 10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

### 인명 무시 ... 알고보니 또 적준!

재개발현장에서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30일 새벽 1시3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는 철거민 이범희(61)씨와 백석호(28)씨가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이들을 폭행한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으나, 철거민측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용역강제들에 의한 폭행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 온몸 골절, 3도 화상

현재 용산 중앙대부속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이범희 씨는 다리와 갈비뼈, 팔 등이 부러진 데다, 부러진 갈비뼈가 비장(지라)을 찢어, 각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가족들은 또 "이 씨의 손가락 마디 3개가 잘려 나갔으며, 머리에도 큰 부상을 입었으나 아직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식을 회복한 이 씨는 "용역강제들에게 붙잡혀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당했으며, 이후 119 구급차에 의해 실려왔다"고 말했다.

백석호 씨도 얼굴 형태를 알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중이다. 병원측은 백 씨가 온몸에 2·3도 40%의 화상을 입었고 기도에도 화기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백 씨의 누나 경화 씨는 "동생이 '무언가에 맞아 쓰러진 후, 등뒤에서 화기를 느꼈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며, 병원측 촬영 결과 역시 환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에 3도 화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개발현장 내 철탑망루에서 농성중인

철거민은 "백 씨가 골리앗 바로 아래서 강패들에게 맞다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 5층 철탑에 들대포 세례

이날 사건이 발생한 도원동 재개발 지구는 철거가 99% 마무리된 상태로, 공사현장 외곽이 2.5미터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5층 높이의 철탑망루(일명 골리앗)를 공사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농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7일부터는 용역회사측이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골리앗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 등 목격자들은 "용역직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5층 철탑에 있는 농성자들의 얼굴에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댔다"고 진술했으며, 농성자측도 "나를 내내 골리앗에 물대포를 쏘아댔고, 그 물살은 사람을 날려보낼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용역직원들이 공사현장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골리앗 내의 주민들은 외부와 일체 고립되었으며, 물과 전기·전화마저 끊어진 상태다.

30일 사고를 당한 이범희 씨와 백석호 씨는 철거민 10여 명과 함께 골리앗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행보다 뒤쳐져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씨들이 병원으로 후송된 과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용산경찰서 형사는 "두 사람이 공사장 내에서 골리앗을 중심으로 정반대편에 각각 쓰러져 있었고, 119 응급차에 실려 후송됐다"고 주장한 반면, 골리앗 내의 농성자들은 "재개발 현장 안으로 119 응급차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용역, 취재진 출입도 차단

한편, 도원동 재개발지역의 용역업체 역시 과거 '폭력·살인철거'로 악명을 날려온 '적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다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영업 중인 적준개발은 지난해 7월 전농동 강제철거작업에서도 용역을 맡았으며, 당시 골리앗에 화염이 옮겨붙어 박순덕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적준 소속 용역들은 재개발 현장주변을 완전히 차단해 주민은 물론, 취재진의 출입마저도 가로막고 있다.

30일 밤 현재 골리앗에서 농성중인 철거민측은 "중장비와 용역직원들 일부가 철수했으나, 50여명의 용역직원들이 계속 울타리주변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공판 안내

#### ▶ 3월 31일 (화)

김진혜/김봉남 외5(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속행 박훈동(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정영훈/김홍모/최순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 ▶ 4월 1일 (수)

이유진(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신건 이주현(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1부, 303호, 선고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이상 서울고등법원 (☞2면 계속)

### 민주노총, 명동성당 농성돌입

고용안정·부당노동행위척결 촉구

민주노총이 30일부터 무기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30일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대책위의 병원노련, 공익노련, 대학노련 소속 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성명을 통해 "하루 1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산업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난무해도 현정권은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4월 1일부터 매주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고용안정확보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근로자파견대상 최소화" 촉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최근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제 시행령 마련과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근로자파견대상업종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여성노동자회는 "노동부 안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사실상 해당 산업노동자 전체가 파견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노사정합의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판 안내(1면에서)

- ▶ 4월 2일 (목)  
정명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김대성 외5(국보법, 한총련)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 4월 3일 (금)  
신선호/이승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강신호/이소현/최영옥(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정동호(국보법 찬양·교무·회합·통신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이재용(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1부, 303호, 속행  
나정순(국보법 찬양·교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1부, 303호, 속행  
김종천(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신건  
김학균(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1시, 합의4부, 403호, 속행

-이상 서울고등법원

### 주/간/인/권/호/름

(98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 23일 (월)

전교조, 정부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자 소급 임용취소 방침'과 관련해 재검토 촉구/국제육수수재단·농협중앙회·전농등 1백여 개 민간단체가 참가한 '북한육수수심기 범국민운동' 발대식

◆ 25일 (수)

중앙노동위원회, 기업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때 잉여 인력 해소는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월간 <한국논단>,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1세대>를 친북·용공저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무실 집기등 압류 당해

◆ 26일 (목)

통계청 집계, 2월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서울 7교통에서 퇴직한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월급제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외에 추가로 보는 개인 운행수입도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오사가 지방재판소, 제일 한국인등 일본 거주 외국인 13명이 외국인 등록법에 따른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 27일 (금)

유엔인권위원회, 인권옹호자선언 채택을 기념해 오는 4월2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권옹호 메시지를 녹화해 보내줄 것을 요청/서울고법 형사2부, 이석 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씩을 선고받은 김소연, 권순옥 씨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씩 선고/일본 총무청 발표, 완전실업률은 1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6%로 53년 조사게시 이래 최고치 기록, 완전실업자수도 약 2백45만 명으로 최악

◆ 28일 (토)

정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자금 48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할머니 1백55명에게 3천8백만 원씩 지급

◆ 29일 (일)

안기부, 지난 정권에서 수천 억 원대의 사업예산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미리 받아 금리가 높은 투신사에 분산 예치한 뒤 연간 수십 억 원의 이자수입을 안기부장의 비자금으로 관리해와/용산경찰서, 서대문구 2산부인과가 미혼모의 갓난아기를 지하철 등에서 검을 파는 '앵벌이' 조지에 팔아 넘겼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 착수

# 인권하루소식

## 98년 4월

### (제1094호 - 제111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일(수)

제 10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도원동 철거폭행 적준용역 확실히

### 철거민 고사작전, 음식물 반입 차단

30일 새벽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철거민 폭행사건에 용역직원들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본지 3월 31일자 참조).

이날 새벽 3시경 중앙대부속 용산병원으로 이범휘(61) 씨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은 "공사현장 내에 설치된 (용역직원용) 막사 안에서 이 씨를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는 막사 안에서 부상당한 채 누워 있었으며, 주변엔 흰색 헬멧을 쓴 사람들(용역직원)도 여러 명 있었다고 구급대원은 증언했다.

따라서, 이 씨가 최초 골리앗 진입을 시도하다 사라진 시간이 새벽 1시20분 전후로 알려졌고, 용산소방서 구급대로 연락이 온 시간이 새벽 2시 36분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씨는 약 1시간여 동안 구타를 당했거나 구타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염방사기 발사 의문  
한편 백석호(28) 씨는 이범휘 씨가 발견된 현장과는 정반대쪽 울타리 부근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상황도 참조). 이와 관련, 구급대원은 "당시 경찰의 안내를 받아 피해현장에 도착한 뒤, 백 씨를 후송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화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가장 큰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사건 당일 백 씨가 쓰러져 있던 현장 부근에서 화염방사기가 발견됨에 따라 화상의 원인이 화염방사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누가 화염방사기를 발사했는가는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 골리앗 농성자측과 경찰측은 화염방사기의 발사자에 대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사건초기엔 이 씨가 백 씨를 용역직원으로 오인해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현재 경찰측에선 "대학생이 백 씨를 용역으로 오인해 화염방사기를 발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백 씨 등 철거민들은 짧은 시간 안에 골리앗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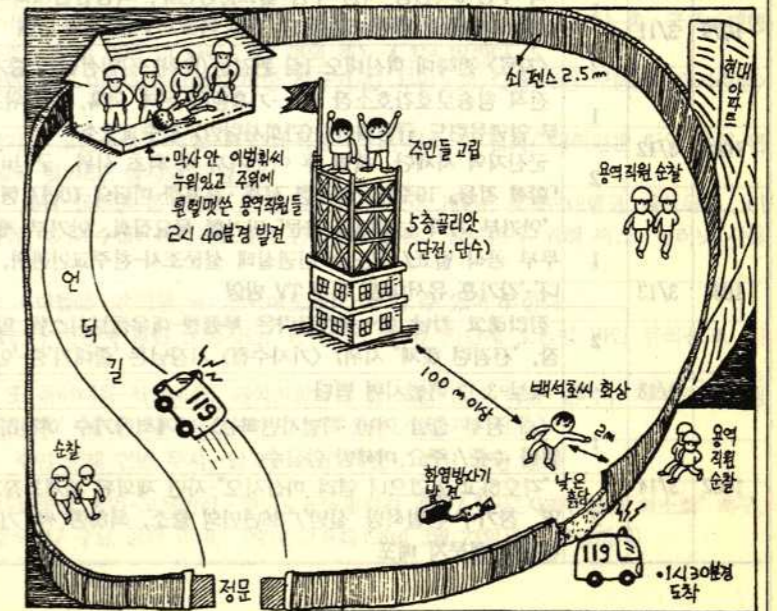
#### 재야인사 강제철거 중단 요구

31일 오후 2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이 도원동에서 규탄시위를 갖기도 했으나, 외부와 차단된 공사현장은 일

단 평은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냈다. 앞서 30일 오후엔 백기완, 장기표, 오세철 씨등 각계인사가 용산경찰서장을 면담해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의 뜻을 표시했으며, 이불과 옷 등 생필품의 반입과 강제철거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골리앗으로 옷과 이불 등은 전달됐으나, 용역직원들은 물과 음식물 반입을 여전히 차단하는 등 농성자들에 대한 고사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에 입원 중인 이범휘 씨는 △비장 파열 △왼쪽 미골(복승아빠 부위) 골절 △왼쪽 갈비뼈 7, 8, 9, 10번 골절과 혈흉(피고임), 기흉 발생 △왼쪽 제3수지(가운데 손가락) 골절 등에 대해 각각 수술을 받았다. 병원측은 "이 씨의 왼쪽 두개골도 골절됐으나 아직 상태를 관찰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의 장인택 교수는 "머리, 가슴, 다리 등 세 곳의 골절상은 일정한 힘으로 가격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원동 사건 현장 그림



Xch X

### 〈인권하루소식〉 98년 3월분 총목차(1073-1093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73	3/3	1	전주지법,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조작 결론, 이적단체 구성 혐의 무죄 선고/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신자 홍중희 씨 벌금형/ 주요 공판 안내
		2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전일과 예술인 단죄/ 제주 4.3 항쟁 명예회복 선포, 3월 28일-4월 5일 기념주간/ 주간인권흐름(98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1074	3/4	1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경기여성,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이문열 씨 등 여성인권 결집들 선정
		2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 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곡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1075	3/5	1	대학서도 인권교육, 강좌 늘어-성공회대·서강대·대구대, 이론화 작업 시급/ 97년 인권사회화 강의내용(대구대)/ 〈만화사랑방〉 - 경기여성
		2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4월 25일 '국제제식의 날'/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구성-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행사와 동정
1076	3/6	1	미군, 거저먹는 평장사-군산미군기지, 비행장 사용료 되레 인상/ 〈현장 스케치〉 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2	한상권 교수 출근투쟁 전개, 이사진 교체 불구 덕성여대 사태 미해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산재예방책 실종위기/ "당신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고 싶습니다"-박래군(구국전위 사건) 씨 아내의 편지
1077	3/7	1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잠원 시자' 등 20여종 반입 불허/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참여연대, 검찰 발표 비난 "의정부 지청 제수사" 촉구
		2	여성운동, '고용·폭력·정치참여' 주축-90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붓물 터진 정리 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한 권의 책〉...프라이버시와 인권
1078	3/10	1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정의평화상', 라파엘 크리너-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펼쳐/ 주요 공판 안내
		2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주간인권흐름(98년 3월 2일부터 8일까지)
		3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오창익(전주교인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079	3/11	1	북 주민 3백만명 사망 추정-북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백여 명 네 달간 면접조사/ 14개 단체, '청년회의 준비위' 결성-진보정당 건설 목표/ 주요 공판 안내
		2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1080	3/12	1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만화사랑방〉 전주교도소
		2	군산지역 사제단, 해방 후 미군기지 내 최초 시위, 군산비행장 사용료 징수 항의/ 장애인 월간지 '함께 걸음', 10주년, 따듯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 행사와 동정
1081	3/13	1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 오늘 특별사면 예정, 11시 법무부 공식 발표/ 교도소 인권실태 설문조사-전주교인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 방영
		2	정리해고 칼날 앞...생존전략은 투쟁뿐-대우정보시스템 밀어부치기식 해고/ 김우중 회장 주대식장, "전경련 해체" 시위/ 〈기자수첩〉 시장님은 '줄대기'중-'인권' 두고 거래하는 김선기 평택시장
호의	3/13	1~3	속보-3.13 특별사면 명단
1082	3/14	1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사상전향 잦아...김영삼 정부의 질반 수준/ 주요 미서방 양심수
		2	"자오하고 있었으니 열려 마십시오"-사면 제외된 세계최장기수 우유각 씨/ 엠네스티, 전국회의 성명, 장기수 선별서방 '실망'/ 36년만의 출소, 최하종 씨-"기본 게 부끄럽습니다" 첫 소감/ 출소자 1천명에 설문지 배포

### 〈인권하루소식〉 98년 3월분 총목차(1073-1093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83	3/17	1	"전두환·노태우는 나왔는데..."-5·6공 양심수, 47명중 단 3명 석방/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재소자 도서반입 불허/ 교도소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를!
		2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54차 유엔인권위 개막/주요 공판 안내/ 주간인권흐름(98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084	3/18	1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주요 공판 안내
		2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홍근수 목사, 향린교회)/ 〈한 권의 책〉...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1085	3/19	1	낙성대의 새 식구들-출소 장기수, 또 하나의 시작/ 〈만화사랑방〉3·13 사면초치
		2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온존-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유지/ 조규환 사회복지수석 망언,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법 초래"/ 행사와 동정
1086	3/20	1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이사람들이었다"-〈내일신문〉, '고스톱 의원' 9명 공개/ '제제전복세력' 발인 규탄-민가협, 빛속 목요집회
		2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새벽 아침에-구속중인 윤순재(관노청 회장) 씨의 시
1087	3/21	1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2	시민연합준비위, 정형근·정재문 의원에 대한 수사 촉구-'북풍공작 진상규명' 서한전달/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등,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노동자 넋을 달래자"-금속산업연맹, 진흥국 펼쳐/ 〈국제인권소식〉 남아공, 미결제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미국, 이동학대로 하루 3명꼴 사망
1088	3/24	1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소송 제기키로/ 재소자 알콜리 첨해-인천구치소, 행정법 관련 서신불허
		2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 반발-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주요 공판 안내/ 주간인권흐름(98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3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089	3/25	1	유엔인권위, 빈곤·분배 등 사회권 강조,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아시아인권위, 이장희 교수 출금해제 요청, 공동행동 촉구/ 행사와 동정
		2	4.3 50주년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요구, 서울·제주 등 각지 행사 예정/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 동 네트워크,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한 권의 책〉...4.3은 말한다·5
1090	3/26	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키로/ 부민노청, 3년·5년 구형/〈만화사랑방〉 불심검문
		2	김형찬대책위,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내국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대학인론 탄압 극성-편 집권 침해·기자 해임 잇따라/ 행사와 동정
1091	3/27	1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통신연대 검열, 사이버탐으로 개편/ 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 미상공회의소 규탄시위/ 〈기자수첩〉 대학관료들의 반인권적 발상, '정보통제' 위해 팩스·인터넷 사용 불허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⑨-손민영 씨〉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
1092	3/28	1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벼랑에 돌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지난해 노동법 파업 유죄선고,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2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 개혁 토론회/ 〈발해〉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1093	3/31	1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인명 무시...알고보니 또 저준!/ 주요 공판 안내
		2	민주노총, 명동성당 농성 돌입-고용안정·부당노동행위철폐 촉구/ "근로자과연대상 최소화" 촉구, 한국여성노동자대책협의회/ 주요 공판 안내/ 주간인권흐름(98년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2일(목)

제 10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한창이다. 특히 올해가 4·3 50주년을 맞는 시점 이어서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논의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4·3에 대한 논의가 해금된 것은 87년 6월항쟁 이후. 그전까지 4·3은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였고, 탄압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 열기는 4·3 진실규명작업을 본격화시켰고, 그 작업은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10여 년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진실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양민들이 군경토벌대와 우익청년들에 의해 집단학살되었으며, 그 숫자는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것과 다양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을 뿐이다. 제주도의회가 접수한 피해사례에서도 1만1천6백65명의 피해자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9천6백74명이 군경토벌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4·3의 핵심쟁점인 학살의 경위와 책임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제주도민과 학계 일부가 꾸준히 당시의 정부자료와 미국측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 성균관대에서 열렸던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의 논의 역시, ‘대량학살이 왜, 누구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었는지부터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중됐다.

토론에 참가한 김광식(21세기 한국연구소 소장) 씨는 “국회에 조사특위를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자료를 공개하고 4·3에 대한 입장발표(사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3의 진실규명과 해결을 지체시킨 또 하나의 원인으로 4·3을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시켜온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제민일보>의 김종민 기사는 “제주도가 전국 인구의 1%밖에 안된다는 점이 커다란 한계였다”며, “도민들은 1%가 갖는 정치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식 씨 역시 “광주 5·18을 모범삼아 4·3을 민족사 내지 세계사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현권(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씨는 “4·3 진실규명의 최대 목표는 희생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서’를 위해선 결국 가해자를 밝혀내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

이다. 50주년을 맞아 4·3이 집중조명을 받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감출 수가 없다. 김종민 기사는 “4·3이 내년부터는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진실찾기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4·3 50주년 행사

□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식 및 명예회복 추구대회

·때: 4월 4일(토) 오후 2시

·곳: 탑골공원

□ 제주 4·3 희생자 진혼곡

·때: 4월 4일(토)-5일(일) 오후 5시

·곳: 연강홀(종로5가)

·주최: 제경 제주도민회, 제주 4·3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 강요배의 4·3 역사회전

·전시기간: 4월 3일(금)-12일(일)

·곳: 인사동 학교재 회랑

## 만화사랑방

이동수



##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정해구(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제주 4·3항쟁과 미군정

4·3의 책임문제를 논할 때, 좌우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불가피했던 차원보다도 한 고립된 섬에서 약 1년 사이에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대부분 무고한 양민들이 조직적으로 대량학살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4·3의 발발과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대량학살의 핵심적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군정 정책의 실패였다. 현재 대부분의 분석은 우익단체-경찰-미군정의 책임문제를 똥똥그러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경찰-우익단체 등은 위계적인 상호 연계를 지녔으면서도 동시에 상호 독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 집단 각각의 책임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있다.

4·3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제주도의 갈등이 제주도 자체의 좌우 대립 형태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침투해 갔던 반공적 통제력과 이에 저항했던 주변지역의 좌파 및 민중간의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계엄법이나 일제하 ‘계엄령’에 의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가혹을 불태우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 토벌대의 양민학살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관련자들에게 대한 처벌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3당시 계엄은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었다. 그러나 계엄법의 제정은 제주지구 계엄선포 1년 후인 49년 11월 24일에 있었다. 4·3당시의 계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국가긴급권의 행사가 법적 근거없이 행사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4·3당시 계엄하에서 자행된 토벌대의 만행은 어떠한 식으로도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 황상익(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집단학살과 그보다 더 심하고 끔찍한 인간성 유린의 ‘집단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4·3때의 만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빨갱이’다. 당시의 하수인, 현장의 가해자들은 인간을 학살하고 인간에게 반인간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빨갱이’를 죽이고 유린한 것이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4·3 비극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4·3의 비극을 입태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빨갱이’는 현대판 문둥이다. 우리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그동안 ‘죽어야 할 자’, 더 나아가 ‘죽여야 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20세기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병리는 ‘빨갱이’를 통해 걸로 드러나 왔다.

▶ 박명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소장)-제주 4·3과 한국현대사 10월 여순사건 이후에는 수백 명 씩 죽어가는 집단참살이 이어졌다. 제주에서의 지속적이고도 계획적인 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이른바 ‘국가테러리즘’의 전형적 실례를 구성한다.

제주 4·3은 단순히 좌파 대 우파, 남한 대 북한, 분단 대 통일, 제국주의 대 민족해방세력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 이 사건은 육지 대 변방, 중앙 대 지방, 지배전통 대 저항전통, 문명 대 전통, 기계 대 인간, 국가권력 대 민중 등의 대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었다. 이중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 변방, 독립, 고립, 자치, 자율, 저항의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던 제주공동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파괴와 억압이었다.

▶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근대성과 폭력

4·3사건은 북한체제에 대적하는 반공정치의 ‘희생적 질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선택된 희생양이었으며, 제주사람의 무고한 죽음은 반공 국가의 신화를 만들어 내는 제의적(祭儀的) 희생이었다.

한국의 근대성은 양민의 무고한 죽음과 반공주의 공포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4·3의 역사적 사실은 공산폭동이나 민중항쟁이라고 보다 바로 반공주의 폭력과 공포이다.

도정부와 도의회가 4·3추모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현재의 상황은 4·3의 진정한 애도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3추모제의 공식적 담론으로 등장한 ‘용서와 화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쟁을 서둘러 종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

-3월 28일 성균관대

## 오늘의 주요행사

□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 토론회

·때: 4월 2일(목) 오전 10시 ·곳: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경실련, 민변, 민교협

·발제: 장주영 변호사/ 토론: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강경선(방송대 교수) 이승우(경원대 교수) 이종석(한겨레 논설위원) 김당(시사저널 기자)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홍근수(목사) 천정배(국민회의 의원)

□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벌금 폐지를 위한 목표기도회’ 및 평화행진

·때: 4월 2일(목) 오전 11시 ·곳: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주관: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 지구적 민중행동(PGA) 국제회의 보고와 신자유주의 대응을 위한 토론회

·때: 4월 2일(목) 오후 2시-5시 ·곳: 종로성당 강당

·주최: 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담당 이창근 837-285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3일(금)

제 10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나를 폭행한 건 용역강패들”

### 도원동 폭행 피해자 이범휘 씨 증언

〈속보〉 지난 3월 30일 도원동 제계 발전장에서 중상을 입고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이범휘(61) 씨는 2일 “굴리앗 진입을 시도하다 용역강패들에게 붙잡혔으며, 15-6명의 용역강패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일 새벽 공사현장 내의 철 탐방루(일명 굴리앗)로 들어가기 위해 철거민 10여 명과 동행중이었으며, 굴리앗 부근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아 쓰러진 뒤, 용역직원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진술했다. 그는 용역원들에게 잡히자마자 5-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이어 언덕위로 옮겨져 다시 같은 수의 용역원들에게 폭행당했고, 그 뒤 용역원들이 사용하는 막사로 옮겨진 뒤 세 번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쇠파이프 등으로 수없이 맞아 정신이 들라날라했으며, 막사로 찾아온 구급대에 의해 후송됐다”고 밝혔다.

#### 의혹 사는 경찰 수사방향

그러나, 현재 경찰의 수사는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범휘 씨에 대한 폭행음의자로 느닷없이 ‘대학생들’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공사현장 울타리밖에 몰래있던 2백 명 남짓의 철거민과 대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울타리를 넘어왔으며, 그들이 이 씨를 용역으로 오인해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 차례나 옮겨가며 집단폭행을 당했고, 최후엔 용역 막사로 끌려갔다”는 피해자 이 씨의 진술은 ‘오인에 의한 폭행’이라는 주장을 납득시

킬 수 없는 데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철거민 역시 “용역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진입지점 반대편에 모여 소리를 질렀지만,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철수했다”며 경찰측 추정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조사중인 용역직원들에게서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은 자칫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화상 경위 여전히 의문

또한 피해자 백석호(28) 씨의 화상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대학생’ 또는 ‘철거민’을 용의선상에 두고 있는 반면, 용역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다. 현재까지 백 씨의 화상원인은 화염방사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화상경위는 계속 의문으로 남고 있다.

사건 당일 철거민 일부는 농약분무기를 개조한 ‘화염방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용역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을 붙인 채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굴리앗 농성자들은 “굴리앗 아래에서 용역강패들에게 잡혀가는 사람은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었다”며 백석호 씨가 용역강패들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백 씨가 진입 초반에 ‘실화’로 화상을 입었을 경우

△용역원들이 백 씨를 굴리앗 아래서 붙잡아 다시 울타리 부근으로 끌고 간 뒤, 화상이 발생했을 경우 △백 씨가 다른 철거민이 들고 있던 화염방사기의 화염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 굴리앗 아직도 단전·단수

한편, 2일 현재 굴리앗에는 경찰의 인도 아래 음식물과 여성용품 일부가 반입됐지만, 전기와 전화, 물은 여전히 끊겨 있다. 철거민들은 이날 오후 도원동에서 집회를 갖고 “강제철거 중단과 폭행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으며, 오는 4일에도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귀환희망 외국인노동자 벌금제지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2일 오전 11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70여 명을 포함해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통제와 단속위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철폐 △벌금제도와 강제출국 방침 철폐 △입금제불과 산업제해 보상문제 해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8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1조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산재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5천 명에 달하고 있다.

### 북풍조작 안기부·한나라당 규탄,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 전면개혁 촉구대회

3일(금) 오후 2시 종묘공원/ 주최: 전국연합

##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민변, 민교협, 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최근의 안기부 개혁이 국내담당 조직 축소, 인원 축소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기부가 순수정보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 수사권 폐지

장 변호사는 안기부의 개혁방향으로 ①수사권 폐지 ②국내정보기능과 국외정보기능의 분리 ③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 폐지 ④국회의 통제강화 ⑤정보감독위원회의 설치 ⑥안기부직원법 등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들었다.

이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일단 큰 틀거리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수사권 폐지’와 ‘국내의 정보기능의 분리’ 등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였다. 권오현(민기협 공동의장) 이승우(경원대 법대교수) 홍근수(김형찬대학위 상임대표)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씨 등 대다수 토론자들이 인권침해와 정치공작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 천정배(국민회의) 의원, 김담(시사저널) 기자는 시기상조론을 폈다.

김담 기자는 우선 “1, 2, 3 차장제를 1, 2 차장제로 개편한 뒤 과거 1차장 산하의 국내정보분야를 2차장 산하로 하고, 2차장 산하의 해외정보분야를 1차장 산하로 격상하는 등의 조치는 국내업무 축소의 개혁의지 실천”이라며 안기부 개혁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기자는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는 남북이 대치된 현실에서 무리한 주문이다. 또한 수사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뗄 수 없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변화없이 불가능하다”는 입

장을 보였다.

#### 국내의 정보기능 분리

국내의 정보업무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장 변호사는 “국내의 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담 기자는 “국내의 정보기능의 분리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기부의 업무 중 70-80%가 대북업무인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내정보업무를 담당할 부처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각종 국가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수집 기능의 조정과 통합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당장 별개로 두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한 편의 논문

####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와 자율이 보도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탐구-

48년 4월 3일부터 93년 5월까지 언론이 제주 4·3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4·3에 관해 언론의 보도량(빈도와 기사량)과 명칭사용, 기사정보원 등의 보도태도를 정치상황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김광우 씨는 “4·3에 대한 언론보도는 정치상황, 즉 정치민주화 수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87년 이후 한겨레신문의 경우 4·5월 동안 제주 4·3 관련 기사는 전체보도 건수의 62%, 보도량의 72%를 차지한 반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서 동아, 서울, 조선일보의 경우 4·3관련 기사를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보여지듯이 4·3을 비롯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은폐와 왜곡으로 진실이 가려진 한국현대사가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가능함을 확인케 한다.

- 김광우(서강대 언론정보학과 방송전공) 123쪽/ 1993

한편, ‘국회의 통제강화’와 안기부의 직권남용방지를 위한 ‘안기부 직원에 대한 자체 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일치하였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안기부의 예결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가능한 최대범위 내 안기부의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이익에 활용할 것 등이 강조되었다.

### 대만인권축진회 성금

서준식씨에 대한 국제 관심 지속

서준식 씨 사건에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외국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대만인권축진회(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가 서 씨의 보석금에 보태달라며 성금 3백 달러를 지난 3월 28일 보내왔다.

대만인권축진회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서준식 씨를 지원하는 국제적 관심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인권활동가가 극히 소수인 상황에서 가능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공정한 법원이러면 정당한 인권활동에 대해 유죄를 판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 머리 길다고 라이터볼로 지지 서울 모 공고, '교사폭력' 물의

교사가 학생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라이터볼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일이 발생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모 공고(남녀공학) 전기과 3학년인 김 아무개 군은 "지난 3월 28일 학생주임 양 아무개 선생님이 앞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머리카락 일부를 라이터볼로 태워버렸다"고 밝혔다. 당시 김 군은 체육수업 후 세면을 해 머리가 물에 젖어 있었는데, 이에 양 교사는 젖은 머리카락이 불에 탈 때까지 라이터를 갖다댔다고 김 군은 말했다. 김 군은 또 "너무나 열받고 허무해서 학교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1교시가 끝난 뒤에도 또 다른 김 아무개 군이 양 교사

에 의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모 공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위와 바리깡을 들고 다니며 머리를 깎는 것은 예사인데, 이날은 아마 가위가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최근 머리카락을 잘린 경험이 있는 한 아무개 군은 "머리가 길다고 사 고치는 것은 아니고, 머리를 잘라봤자 불만만 많아진다"며 교사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학교 학생들은 "학생주임 선생님 외에도 교사의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자과 김 아무개 군은 "구두를 신고오자,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백가이버칼'로 신발을 찢어 버렸으며, 장 아무개 선생님은 반 아

이들을 운동장에서 머리를 박게 하고 앞으로 전진시키는 등 제일 폭력이 심하다"고 말했다. 강 군의 말처럼 이 학교 학생들의 불만은 특히 장 아무개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전산과 2학년의 김 아무개 양은 "장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사색할 시간을 주지않고, 그 시간동안 절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써두곤 한다"고 말했다. 한 아무개 양은 "선생님들은 '때려야만 말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인문계하고는 달리 공업학교라서 더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학생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계획이다. 손 아무개 군은 "잘못한 것에 대해선 대가를 받겠지만, 인격모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이 기회에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관련 교사와 학교당국을 면담하고 시정조치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인권운동사랑방, 7일 워크숍 계획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운동은 대중적으로 전개해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로 '가칭'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운동'을 민주단체 및 각 개인들에게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경찰이 불심검문시 목적 및 이유와 검문자의 소속, 이름을 밝혀야 하는 법률 요건(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을 이에 무시하면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참석의 자유를 제한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됐다. 더 불어 검문을 당하는 사람들도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심히 넘어가거나 저항없이 검문에 응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랑방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단원나 개인이 함께 '거부운동'에 참가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을 높일 것"을 요청하며, △7일 워크숍 △통신동우회 게시판 설치 △불심검문 내용 및 대처방법 등 인권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741-5363·2407, 담당: 이영태)

## "강제철거 중단" 촉구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공동성명

[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 강제철거감시단] (강제철거감시단)과 경실련 등 10개 사회단체는 3일 도원동 폭력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주거대책 요구를 가로막기 위해 자행된 이번 폭력사건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기수용 주택을 요구하는 주민을 강제 철거시키는 일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제철거감시단은 "강제철거는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엔인권위 결의를 근거로 주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해온 민간단체다.

## "신자유주의 반대, 지구적 민중행동" 촉구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PGA보고대회 가져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자본의 세계화 반대'를 기치로 내건 '지구적 민중행동 (PGA)' 1차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 회의에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필리핀 농민운동, 유럽의 제3세계·인권·환경단체 등 전세계 3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행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에서는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했다. 이와 관련,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는 지난 2월 종로성당에서 보고대회와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후 'IMF의 구조조정 강요 반대' 등의 슬로건을 갖고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탄생한 PGA (People's Global Action)는 신자유주의 및 자유무역협정들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기구(네트워크)로서 △세계의 모든 민중운동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할 대상 △공동행동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PGA가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IMF, WTO (세계무역기구) 등 초국적 기구들과 각종 자유무역 협정들이다.

PGA는 오는 4월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다자간투자협정(MAI) 및 WTO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구적 행동의 날'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 <레드 헌트> 탄압 재연

각 대학 4·3 기념 상영

제주 4·3 기록영화 <레드헌트>에 대한 당국의 과민반응이 재연되고 있다. 전국 각 대학들은 4·3 50주년을 맞아 학교별로 <레드헌트>의 상영을 계획 또는 진행했으나, 경찰과 대학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각종 압력을 행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우석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소속 학생은 "3일 오후 2시 학생회관 내 음악감상실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하려고 계획했지만 학교측이 장소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 상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학교측은 2일 오후 8시 40분경 '교지편집위원회' 대표자를 만나 <레드 헌트>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영금지 및 연기를 강요한 바 있다. 원주경찰서도 같은 날 학교측에 경고문을 보

## <발췌> '지구적 민중행동' 선언문

... 우리는 민중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경쟁과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거부한다. 대신 우리는 존엄과 평등, 정의 그리고 자유라는 틀 내에서 상호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지지한다. 현재, 지구화 과정과 그 결과에 반대하는 많은 다양한 저항의 길들이 있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이미 지구화에 싸우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부류들, 민중들, 조직들을 연결하는 가교를 건설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시장의 범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적 이익의 추구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중의 빈곤은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며, 민중들의 지구적 연합을 통한 민중 및 시민사회의 능력 강화만이 정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민중들의) 능력 강화는 또한 기술의 소비와 생산 모두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포함한다. 기술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중들은 그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술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그리고 자유로운 접촉과 통제권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민중들에게 비민주적인 발전에 반대하여 상호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과 결탁한 초국적 자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의회와 정부에 대해 국제경쟁에 앞서 사회적 환경적 요구에 집중하도록 압력과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전세계 국가들에서 동시적인 행동을 조직한다.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 각 국가들을 점점 더 억압적으로 만들고 있는 지구화의 효과는, 인권을 위한 대다수 대중들의 광범위한 조직화와 직접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맞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화를 반대함에 있어 강한 힘을 키우고 직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민주적인 행동은 불공평한 시스템에 대한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핵심과 함께 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공동체로서, 다양성에 깊이 뿌리를 둔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 우리는 함께 공평한 세계의 비전을 형성하고 자연에게서 물려받은 자산과 인간 권한(empowerment), 존엄 그리고 자유로부터 오는 진정한 성공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7일(화)

제 10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말썽마다 조직폭력배 등장

### 매일노동뉴스 기자, 취재도중 폭행당해

노동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가 관리 직원등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최근 도원동 철거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원장 김학중)에서 취재중이던 매일노동뉴스 오재현(38) 기자는 회사 관리직원과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강서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오 기자는 "당일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장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으며, 관리직원들이 노조원들의 현장순회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취재하던 중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오 기자는 상해진단 2주, 급성심근경색 2주 등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날 사건과 관련, 노조 지부장 이정미 씨는 "오 기자를 폭행한 사람은 관리직원 두 사람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

은 남자 한 사람이었으며, 그 남자는 조직폭력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또 "당시 병원 내엔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자들이 10여 명 있었으며, 그들은 관리직원과 잘 아는 사이 같았다"고 말했다.

청구성심병원은 최근 임금체불과 노조탈퇴강요 문제로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 온 사업장이다. 이정미 지부장은 "회사측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1순위라고 협박하고 있으며,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노조탈퇴서에 찍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 기자에 대한 폭행은 병원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불법·부당노동행위와 기자 폭행을 저지른 청구성심병원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

6일 낮 사공고에서 만난 양 아무게 교사는 사뭇 난감해 하는 표정이었다. 얼마전 학생들에 대한 두발단속 과정에서 라이터블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태웠다는 혐의(?)가 외부로 알려진 뒤, 양 교사는 무척 곤혹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양 교사는 "머리카락을 태운 일은 절대 없다"며 학생들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다. "나도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이어 양 교사는 구태의연한 '탈선론'을 펼치며 두발단속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머리가 길면 밖에 나가서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엔 소년원 출신들도 있어요. 예방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두를 못 신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양 교사는 또 학생주임으로서 동료교사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동료교사들로부터 두발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한참의 변명 끝에 양 교사는 "두발단속을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과실을 털어놓았다. 양 교사는 "아이들에게 사과도 했다"며 "더 이상은 아이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양 교사의 말처럼 '작은 실수'였다면 이번 사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6일 한 학생은 "앞으로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진 않더라도 폭력은 계속될 것 같다"며 걱정을 버리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자율'과 '개성'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질서'와 '통제'를 앞세우는 교사들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작은 실수'와 아이들의 상처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 (주)원실업도 폭력 시비

(주)원실업(회장 원종목)에서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행사건으로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관리자와 용역깡패를 동원, 조합원을 집단폭행했다"며 "원실업 원종목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금 악덕 자본가들의 탄압은 군사독재시절의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고용분담·불법노동행위 엄단을 약속한 정부가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감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왜 이제서야 우리를 위로하는가"

### -4·3 희생자 진혼국을 다녀와-

무고한 죽음을 영혼의 울음으로 재현하는 4·3희생자 진혼국이 서울의 한복판 연강홀에서 지난 4일 열렸다. 50년 전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어간 혼령들이 바람따라 구름따라 이곳에 모여 그들의 위로제에 참석했다. 4·3희생자 진혼국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죽은 자와 그 죽음 앞에 남겨진 산 자 사이에 다리를 놓고 말을 놓아 '너무나도 원통하고 절통한 사연'을 풀어헤치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무너를 통해 가장 고통스런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이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날 진혼국에 참석한 유족들은 50년간의 가슴앓이에서 오는 답답함과 폭력의 생존자가 겪는 강요된 침묵의 고통을 벗어 던지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진혼국이 거의 끝날 쯤, 현 강목을 3개의 천으로 가르고 그 줄을 꼬고 펴는 무녀의 고된 노동이 따끈따끈한 번복된 쯤, 이제 그만 끝내자는 무녀의 말에서 놓아주지 않는 영혼들의 집착을 느낄 수 있었다. 정순태 무녀의 입을 통해 들려온 "왜 이제서야 우리를 위로하느냐"는 한 영혼의 외침은 많은 물음을 갖게 했다. 그것은 "4·3의 진실이 결국 규명될 수 있는가? 4·3의 역사적 진실은 누구의 진실인가?"를 묻는 영혼의 울림이었다.

### .....주요 공판 안내

- ▶4월 7일(화) 김정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4부, 선고 김용희/김정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진성(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 ▶4월 8일(수) 이승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오해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나현규(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오후 4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 ▶4월 9일(목) 조현재(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선고
- ▶4월 10일(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6호, 합의1부, 속행 정재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김진명(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속행 원용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김익(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주/간/인/권/호/름

(98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 ◆30일(월)

정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추가 신고자에 대해 93년 수준으로 보상금 지급키로/감사원,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실태와 타당성 집중감사 예정/용산구 도원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 이범휘(61) 씨, 철거용역업체인(주)적준 직원들에게 집단폭행당해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 입고 병원 입원/[한국정신대연구소] [경남 정신대문제 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중국 동북지역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현지조사' 실시결과 현지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수은 강제 복용 및 흡입' 증언 확보/용산경찰서, 미혼모가 낳은 아기의 불법 입양을 일선한 혐의로 서대문구 천연동 1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안년 병원 부원장 남소자 씨 수배

###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 명이 1천여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5천여 명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2천여 명 종로공원에서 '백만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전남대, 제자 여대생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약대 안아무게 교수 해임/재단·총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충북 청주 서원대 평교수협의회 교수 50여명 총장실 점거 밤샘농성/프랑스 하원 주담 범정노동시간을 임금 삭감없이 2천년까지 의무적으로 35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

### ◆1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박종대 씨에 대한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꽃과는 처녀> 등을 이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부분무죄 판결/제주도, 정부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촉구/안기부, 옛 102실 산하 정치과와 지역과를 통폐합해 사실상 국내정치공작 부서 폐지/국민회의 '4·3 진상조사 특위' 출범

### ◆2일(목)

정부, 제1차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열어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확정/하내분규를 빚고 있는 경기여상 학생들 오전 수업을 거부한 채 건물옥상에서 패시류 던지며 함의 시위/제주 4·3연구소장 강창일 교수, 미군정 비밀자료 공개와 제주도 양민학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촉구

### ◆3일(금)

국민회의, '등급 외 상영관' 설치방안 검토/유엔인권위원회 사형제도 완전 폐지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5일(일)

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병원노조, 병원측이 단순업무지를 정리해고하고 용역으로 대체하려는데 반발해 명동성당에서 8일제 농성중/노동부 발표, 1~3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수는 10만4248명으로 지난해 204%/대검공안부(진형구 검사장), 10일 영남대에서 결성될 예정인 제6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해 대화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석자 전원 처벌 방침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8일(수)

제 10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이철용 씨 사건, 가해자 드러나

### 시위진압 전경, "방패로 폭행" 시인

지난해 6월 1일 발생한 '시민 이철용 씨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시위진압에 나섰던 백골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용 씨는 사건이 있던 날,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도중, 백골단원들에게 방패와 군화발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해 목뼈와 안면, 턱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시경 제4기동대 소속 경원이었던 김 아무개(97년 11월 제대) 씨는 최근 "시위진압 도중 무의식적으로 이 씨의 목부위를 방패로 내리쳤다"며 가해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사건을 수사중인 최성우 검사(서울지검 528호)도 7일 "김 씨 외에 두 명의 가해자가 더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건 진상의 일부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해자 세 명의 존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다.

우선 이철용 씨가 입은 부상 가운데, 목뼈 골절상은 가해자 김 씨의 방패에 맞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얼굴 부위에 집중된 부상의 경위는 해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나머지 두 가해자가 얼굴 부위의 폭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성우 검사는 "나머지 두 명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철용 씨는 "경미한 폭행으로 어떻게 두개골과 코뼈 등이 부러질 수 있겠냐"며 최 검사의 언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성동경찰서측이 "이철용 씨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진상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역시 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김 씨는 "윗분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해 수사 진행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며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 (주)한화, 정준희 씨 자살사건 파문

### '폐수방류' 지시에 번민하다 자살

지난달 24일 (주)한화 창원공장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던 정준희 씨의 자살에서 비롯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 씨가 자살한 뒤, 정 씨의 아들 노트에서 발견된 유서를 통해 정 씨가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불법적인 '폐수 무단방류'를 강요받았으며 그로 인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은 "약 1년 전부터 부인에게 폐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괴로운 심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후 고민과 술먹는 회수도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 씨는 회사측의 폐수방류 지시에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이를 무시당했고 심지어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정 씨의 죽음 이후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등 사회단체들은 '(주)한화 폐수 무단방류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지난달 31일 1차로 조사단을 창원 현지로 내려보냈고 8일 추가조사를 위해 2차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앞서 3일 낮 12시 (주)한화 정문 앞에서는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측이 사건을 가점분화로 인한 단순자살로 축소은폐하는 가운데 수사기관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 씨가 평소에 폐수처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기록한 노트 형식의 일지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 회사측이 일지 열람을 거부했으며, 유족들이 나중에 일지를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일지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매일 출근시간에 (주)한화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9일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현행 불심검문은 위법"

불심검문 워크숍 열려

7일 연세대 학생회관 4층에선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송실대, 고대, 연대, 이대 학생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학생회를 통한 홍보활동과 '대시민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차병직 변호사는 "현행 불심검문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 선언'이 채택됐다.

지난 3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가 선언 초안'과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며, 이 초안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통해 정식 선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인권운동가 선언'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중인 인권활동가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언으로 지난 86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내 실무그룹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각국은 인권운동가의 국내법 준수여부와 해외 재정지원, 재판 절차 참여권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면서 '선언' 채택을 지연시켜 왔으나,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라는 부담이 결국 '선언' 채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선언'과 관련, 각국 NGO(민간단체)들은 '선언'의 미비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선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선 각국 국내법의 개정과 유엔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요약> '인권활동가 선언' 초안

2장  
2. 이 선언에서 언급된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 보장을 위해 법적, 행정적 기타의 절차를 각국 정부는 밟아 나가야 한다.

3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 관해 유엔헌장과 함께 각국 정부의 국제적 책임에 모순되지 않는 국내법이 법적 기본적 자유가 실행되고 함양되어야 하며, 또한 그 안에서 권리와 자유의 신장, 보호, 효과적 이행을 위해 이 선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5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 옹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이들과의 연관하여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평화적 집회, 결사의 권리  
(b) 민간단체 구성, 결합, 참여의 권리  
(c) 민간단체 혹은 정부간 조직과 통보할 권리

6장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국내 법, 행정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추구하고, 획득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리  
(b) 인권과 다른 적용가능한 국제 문서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견해, 정보 그리고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자유롭게 출판, 전파할 수 있는 권리  
(c) 법과 실제 양자 모두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에 관한 견해를 연구, 토론, 형성, 보유하고, 이러한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문제들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권리

8장  
1.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차별이 없다는 전제하에 한 나라의 정부와 공공업무의 수행에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것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공공업무와 관련된 정부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판과 제안의 권리,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보호, 이행을 저지, 방해하는 정부 활동에 관심을 모아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9장  
1. 이 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바처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포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2장  
1.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함양에 영향을 주는,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행위들 뿐 아니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가져다 줄 국가에 의한 활동과 행위에 평화적 수단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국내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13장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이 선언 3장에 따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 신장, 옹호를 표현하기 위한 자원을 청구, 획득,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4장  
3. 국가는 사법권 하의 모든 영토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옹호를 위한 한층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그것이 옴부즈맨(민원조사위원), 인권위원회 혹은 다른 형태의 국가기구 어떤 것이든, 적절한 곳에 만들고 개발하도록 하고 지원해야 한다.

15장  
국가는 교육의 전 수준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교육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할 책임을 지며, 변호사, 법관, 군대에 종사하는 이들과 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과정에 인권 수업의 적절한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책임 또한 갖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9일(목)

제 11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없는 낭설로 호도하는 발언마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구금과 관련된 인권문제'(의제8)에 대한 회의에서 주기철 주재네바 대사는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사법행정의 개선과 비인도적 처우를 막는 보호장치,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상체계를 통해 고문과 자의적 구금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행동절차'(Urgent Action Procedure)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 장기수 석방 인도적 결정

주 대사는 이어 지난 3·13 사면조치를 홍보하는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의 신뢰도를 깎아 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국민의 정부" 취임을 맞아 대사단이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모두 2천3백4명이 석방됐고 그 가운데는 74명의 공안수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면에 70세 이상의 장기수들을 석방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었으며, 국내 민간단체의 제안도 수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주 대사는 "장기수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편견"이라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 측은 "우용각 씨 등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중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엔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호도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발언을 했던 주 대사는 한편으로 세계각국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고문 등 극악한 행위를 종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연설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인권' 등에 대한 인권위 회의에서 마영삼 유엔 한국대표부 일등서기관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착취와 비인간적 생활 그리고 노동조건과 저임금, 육체적 학대 성추행 등이 너무 일상적"이라고 발언하면서도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은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받아들이는 국가간의 공동책임이라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감옥을 바꾸자!

-교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대상: 97년 1월 이후 출소자 누구나  
·1차 마감: 4월 15일  
·문의: 인권운동사랑방(☎741-5363)  
전국교인권위원회(☎777-0643)

## 만화사랑방

이동수



##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한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협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악덕자본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갈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각 철회 △단협위반 백지화한 헌법재판관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 도중 임성규 서울

본부장과 조철 관공연맹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원노련 이상준 위원장은 "정부는 부패된 자본과 권력을 숨기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느껴 용역장패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마저 우리를 떠난 상황에, 어디에서도 살 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력투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사 양측 합의로 해결된 단협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처벌할 수 없게끔 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걸로 예상되고 있다.

### 6기 한총련 탄압 응남 못해 연세대총학, 전국학생연대

검찰이 오는 10일-12일 영남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6기 대의원대회를 일천 봉쇄하고 참석자 전원을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8일 "검찰 방침은 정치·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대 총학생회는 "6기 한총련이 독단적으로 건설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학생운동을 용공이적행위로 몰아 탄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 총학생회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학생연대]도 8일 성명을 통해 "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불참 선언을 지지한다"면서도 "실력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울바르지 못한 의견이 개진되거나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지난해 월간(말)지를 통해 (주)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던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성폭행 사건의 배후에 한국타이어가 개입했을 의혹'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탄압 문제' 등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김 기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나경수 판사(형사2단독)는 "취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행사와 동정

□ <인문개혁 정책토론회> 신문사장과 기업구조 개선 방향

·때: 4월 9일(목) 오후 2시  
·곳: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

·발표: '공동판매 이렇게 하자'(정연구)/신문사장의 공정거래와 독과점규제(김승수)

□ 민청학련운동 4·9통일열사 추도식

·때: 4월 9일(목) 오후 6시30분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청학련 운동 계승 사업회

□ 월간 「사회평론 길」 지령 1백호 기념식

·때: 4월 9일(목) 오후 6시30분  
·곳: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아시아인권환경선언대회 설명 간담회

·때: 4월 10일(금) 오후 7시  
·곳: 민변 사무실(522-7284)

·주최: 광주시민연대모임(062-226-2093)

□ IMF와 인도네시아 위기 특강

·때: 4월 10일(금)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회원방(723-4255)

□ 고용인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제-파문(波紋)

·때: 4월 11일(토) 오후 7시-9시  
·곳: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관: 청년회의 준비위원회(677-8427)

·후원: 전국민주금속산업노동조합, 인천민주연대협의회, KNCC인권센터

·입장료: 1만원

□ '평화주의자 김낙중 석방대책위원회'(기정) 창립총회

·때: 4월 13일(월) 오후 7시  
·곳: 향린교회(776-9141)

·발기인 대표: 강만길 고영근 김진균 윤성식 홍근수

□ '편의시설 다시보기' 출판기념식 및 기념강연회

·때: 4월 17일(금) 오후 4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파라디디스복지재단

□ 서울여성전화 정보통신교육 프로그램

·때: 4월 21, 23, 28, 30일. 5월 7일  
·곳: 나우누리 오프라인  
·문의: 272-2161(담당: 안은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0일(금)

제 11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한총련 평화집회 보장하라”

### 사회단체, 한총련 비주류대학 성명 잇따라

검찰의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및 참가자 전원구속 방침'과 관련, 한총련 비주류 대학과 사회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국연합,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대협 동우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공안당국은 한총련의 거듭된 '평화적 행사 개최 다짐'과 학생들의 자정 노력을 무시하고, 소모적이고 구시대적인 강경 진압방향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96년부터 진행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과 4천여 명에 달하는 대량검거 등 학생운동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과 조직외해 공작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비상사적 조치였다"고 비판하며, "공안당국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들은 한편, 한총련측에 대해서도 "지난 몇 년간 학생운동 스스로 무리한 운동방식과 주장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열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6기 대의원대회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총련 거듭나기’도 주문

또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이사장 박상중)은 8일 "한총련 내부에도 학생운동의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와와 거듭나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강경대응 방침은 오히려 내부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학생들을 더욱 격려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주권수호, 민중생존권수호, 민주대개혁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강한규등)도 9일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남대, 대전대, 연세대 등 22개 대학 학생회 대표들은 9일 연세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의 비민주적 운영방식을 비판하며 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의원대회에 대한 이적규정과 참가자 전원구속 방침을 규탄하며 "공안당국의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민가협 목요일집회

9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제224차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히 안기부에 의한 과거 인권유린 행위가 집중적으로 폭로되었고, 안기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회에 참석한 김낙중(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 씨의 부인은 "92년 당시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형근 의원(현 한나라당)은 남편을 36년간이나 간첩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언론에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시민들의 편견을 조장한 사람"이라고 규탄하며 "더 이상 굴곡된 역사의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양홍관(12년형, 현재 대구교도소 구금) 씨가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사연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관련 글 2면>

양 씨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수치스런 고문까지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했다"며 당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음을 밝혔다. 이 편지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가 자행한 고문은

△집단구타 △손가락 사이에 나무막대기를 끼운 뒤 비틀기 △비너프기 △엎드려 뺨치기 및 쪼그려 뛰기 △손가락으로 눈 찌르기 △성기귀뚜라미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의 어머니는 집회에 전달한 글을 통해 "홍관이 안기부로 연행될 때인 92년 9월은 대통령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때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요즘 안기부가 북풍공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은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은 '기획'이 아닌 '공작'이었다"고 비판하며, "온갖 조작 사건과 정치개입으로 국민불안, 국정혼란을 가져온 안기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일 안기부가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면 해외정보보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내정보분야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하며 안기부의 수사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 고문...자포자기...허위자백

###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양홍관 씨 폭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요과제로 떠오르는 '안기부 개혁' 문제 가운데 과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9일 민가협 집회에서 발표된 양홍관 씨의 편지는 안기부의 고문과 관련된 충격적인 고백이다 <편집자주>.

92년 9월 12일 오후 1시경 집 앞에서 승용차 3대가 와서 서더니 10여 명의 사람이 달려들어 차에 태우려 했다. '왜 잡느냐' '누구나'며 소리를 질렀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차안으로 밀어 넣고 수갑을 채웠다. 영문도 모른 채 차를 타고 한참을 간 후 어디인지도 모를 건물 앞에 세우더니 지하실 방으로 끌려 내려갔다.

지하실 방에 끌려 내려가자마자 수사관 7-8명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발로 온몸을 짓밟았다. 그리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이에 거부하니 수사관은 또다시 구타를 일삼으며 옷을 벗겼다.

'네가 여기 온 까닭을 잘 알 테니 스스로 얘기해라'며 추궁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누군데 이리느냐'며 불법적으로 연행해 온 까닭을 물었다. 그랬더니 7-8명 정도가 양팔을 잡고 주먹으로 치며 '네가 있는 조직과 조직에서 너의 위치를 대라'고 하길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1-2시간쯤 지난 후에 조직표를 보여주며 '너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단 강원도당 소속이다' '너의 가명은 김형일이야' '너는 조애전 위원장이고 민애전 성원이다'며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들이대며 협박을 했다.

## 감옥을 바꾸자!

-교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대상: 97년 1월 이후 출소자 누구나  
•문의: 인권운동사랑방(☎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나에게 폭행과 고문을 일삼은 수사관 중에서 책임자는 이름은 모르지만 별명이 '월월이' '뽕뽕이' '사장님' 등으로 불리고 인상착의는 175cm, 몸무게 75kg 정도의 뚱뚱한 사람이었다.

12일 저녁식사 전까지 7-8명의 사람이 달려들어 벽에 밀어부치고 벽을 바라보게 한 뒤 양손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손가락 사이에 나무막대기를 끼워 수차례 비틀었다.

12일 저녁식사 이후부터 13일 새벽까지는 3개조로 편성된 고문수사관이 번갈아 갖은 폭행과 고문을 자행했다. 1조는 7-8명으로 구성되어 책임자를 주축으로 비너프기를 했고, 2조는 폭력구타 전문가로 보이는 2명이 담당했고, 3조는 수사관 3-4명이 협박을 일삼았다. 3조의 주무수사관은 김 실장이었다. 각 조는 한 시간마다 번갈아 들어와 구타와 협박을 일삼았다.

13일 오전에는 기합으로 벽을 보게 하고 손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엎드려 뺨치, 쪼그려 뛰기 등을 시켰다. 13일 오후에는 앞에서 행했던 폭행고문을 계속하며 '죽어버리겠다'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곤 했다. 기운이 없어 쓰러지면 물을 뿌려 다시 깨어나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성기를 뽑아서 비틀고, 귀두를 치며 성기를 움켜잡고 비틀었다.

성기구타고문은 16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를동안이나 계속되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자 최소한 구속조건이라도 갖추어야겠다는 판단을 한 듯이 '최호경을 만난 것' '유인물을 받아서 돌린 것'만이라도 인정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수치스런 고문까지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 그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담원임을 시인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를동안 진행되었던 고문이 계속 반복되었다. 5-6일 후에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좌

절, 패배감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성기귀뚜라미'라는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 발가벗겨진 채로 흉악한 놈들에 의해 육신이 겁탈당하는 그 순간은 육체적 통증도 느낄 수 없는 분노가 끓어 올랐다.

##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회장 박천을 목사)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키 위해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외노협은 "최근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산재(사망)보상, 사기 등의 문제로 출국을 못하고 있다"며 "귀환을 희망하면서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에 집단 고발(진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 활동에는 민주노총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와 한국노총의 '법률구조센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외노협은 국제 노동·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 제소 등의 활동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노협은 출국한 외국인노동자의 말을 소개하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 외국인노동자는 "한국 와서 남은 것은 잘린 손가락과 임금체불,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값야 할 빚밖에 없다. 우리를 못 살게 군 한국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외노협은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10만5천 명의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등 모두 14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외노협은 이들 외에 밀입국자와 조선족을 포함해 약 18만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1일(토)

제 11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침내 창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6차 회의는 '전문'과 약 1백 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을 완성했으며, 이 초안을 토대로 오는 6월 열리는 로마 외교회의에서 협약을 타결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완성된 '초안'을 둘러싸고도 아직 각국의 이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모든 사안이 표결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가능할 전망이다.

전해와 △검찰 직권으로 고소를 가능하게 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 국가가 '검찰 직권 고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위해, 내국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형식적 재판에 그치는 경우 보충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 국가를 협약에 참여시키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재판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 한국정부 적극 대처활동

이처럼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이 가시화된 것은 미국·영국·유럽 등 대다수 국가의 지지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전세계 2백여 개 민간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유종하 당시 외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대한 지지연설을 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왔다. 채정석 대책반장(법무부 검찰 4과장)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스위스 등 약 45개국 이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을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했으며, 정부는 가급적 우리 법제와 충돌이 적은 협약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검사는 또 "우리와 같은 약소국일수록 국제법을 강화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민간기구의 적극 참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고·르완다 사태에서 논의 촉발 2차대전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예는 뉘른베르크 및 동경 전범 재판이 있었으나 상설 형사재판소의 설치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구 유고연방과 르완다에서 참상을 겪고, 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재판소를 설립 운용하면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2년 유엔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됐으며, 94년 협약 초안을 제출하고, 95년부터 6차례에 걸쳐 「설립 준비위원회」를 운영해 온 끝에 그 결실을 보게됐다.

### "평화적 행사 치르겠다"

한총련, 대의원대회 일단 유보

10일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6기 대의원대회가 잠정유보됐다.

한총련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화장의 원천봉쇄, 대화장 침탈 등 강경방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정부가 강경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경찰과 학생들의 충돌사태를 유발, 한총련을 이적·폭력단체로 매도하여 한총련을 완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며 "현 정권이 원하는 바대로 이적·폭력시비에 밀려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당국에 대해서 △이적단체 규정의 철폐 △불심검문 중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검찰청장 및 도경철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청했다.

##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최근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없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본지 4월 10일자 참조).

외노협이 지적하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편집자주>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정부관계기관의 어느 문서를 보아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말은 없다. 하나같이 '해외인력' '연수생' '조선족' 이라고 쓰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교정되고 있지 못하며 값싼 노동력으로서 오직 활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의 기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 행동지침을 보면 '체불등 해결이 곤란할 경우 진술조서 또는 자술서 등을 받아 종결처리 되게 함으로서 성의있게 처리된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주지시킨다'라고 명기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하달시키고 있다. 최선을 다하여할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자 '성의있게 처리된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주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나 영세중소기업은 범죄자가 아니며, 모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부는 벌금

제도를 통하여 국제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천억에 이르는 벌금이 어떻게 쓰일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법무부 예산책정에서 벌금수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아울러 벌금으로 인한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단속 관계자와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김포출입국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와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한 금품수수 비리 행위를 먼저 근절하는 자성을 보여야 한다.

3) 강제출국조치에 대한 비판

최근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출국조치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필요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집중단속 기간 외에는 고용하도록 방조하고, 인력수급 조절상 필요하다면 단속하는 기준없는 이중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이는 법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인권유린의 기초였다.

IMF시대 이후에 집중단속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밀린 임금을 받으려 갈 권리 박탈'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으면 한국에 남아 있으라 해도 자진 출국하게 되어 있다. 집중단속은 오히려 귀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에 불과하다.

4) 연수취업제에 대한 비판

정부는 지난 2월 9일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정책은 올해 안에 마련하되 충분한 의견수렴후 결정하겠다고 전체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2일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 18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변형된 이름의 '연수취업제'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행정의 투명성과 노사정 합의안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국민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 진행되

고 있는 것이다.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못하였고, 정책결정과정도 밀실에서 소수에 의한 결정이었다.

5) 대체고용에 대한 비판

정부의 98년 외국인력정책 방향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를 강제출국조치 시키고 내국인 실업자를 단순기능분야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청은 작업환경이 나빠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 실업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IBRD로부터 3천억 원을 확보하여 제조업체가 외국인노동자 대신 내국인 실업자로 대체할 경우 대체취업당 1인당 5백만 원의 운전자금과 대체취업자가 5명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시설자금을 인원수에 따라 1억 원이상 장기저리로 용자를 해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이 아닌 대체고용으로 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모든 노동자에게 돌리고 '저임금, 장시간노동, 위해사업장'의 고통을 감수해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경제에 기여한 똑같은 노동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이간시켜 한국노동자들이 이루어 놓은 생존권 투쟁의 성과마저 퇴보시키려는 것이다. 내국인이 3D업종을 기피하는 것은 아직 덜 배고파서 그렇다는 무책임한 관계당국자의 발언은 중단되어야 한다.

## 행사와 동정

□ 도원동 살인철거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중연대투쟁대회

·때: 4월 12일(일) 오후 1시

·곳: 서울역광장

·주최: 도원동 진상규명대책위

□ 평화학교 개강식 및 조성만(오션)열사 10주기 추모선포식

·때: 4월 16일(목) 오후 7시

·곳: 명동 전진상 교육관

·강연: '21세기 민족의 화해를 준비하며'(문정현 신부)

·주최: 조성만 열사 추모사업위원회 (745-040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4일(화)

제 11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평화' 짓밟는 '국민의 경찰'

### 한총련, "초등생 프락치 발견" 주장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정부의 대응이 폭력일변도로 치닫는 양상이다.

현재 한총련은 6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거듭 평화집회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대회장소인 대구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구MBC에 따르면, 경찰은 12일 대구시내 대구백화점 앞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하던 대학생들을 연행하기 위해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던 시민 한준봉(41) 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한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대에선 강제로 보이는 청년 7명이 술에 취한 채 학교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한총련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해 경북대생들도 학생증없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 청년들이 들어오게 됐는지 의아하다"며 "이는 폭력배를 동원해 학내에서 폭력사태를 유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총련은 "경찰이 △지나가

는 버스를 세워 신분증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하차시키고 △불심검문시 여학생의 손목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으며 △불법불심검문에 불응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녀 연인이 지나갈 때 불심검문을 핑계로 농을 거는 등 불법과잉대응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지난 10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상현(영남대 철학과 90학번) 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가슴에 검은 리본을 착용한 학생이 경찰에게 얼굴을 구타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총련, "대회강행 않겠다"

한총련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거듭 평화집회 의사를 확인했다. 한총련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의원대회를 평화적으로 치르겠다"며 "오는 15일 자정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 개최보장 △연행학생 석방 △이적단체 규정철폐 △김대중 대통령 면담 또는

답변을 요구하며, 13일부터 15일까지 명동성당과 영남대, 경북대 등 각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한총련은 "현 정부가 끝까지 평화적 대의원대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대의원대회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대구지역 28개 사회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여러 차례 발표된 한총련 기자회견과 현재 학생들의 태도로 볼 때, 어느 때 보다도 평화적인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뚜렷한데 이를 애써 무시하고 김문에 의한 불법연행과 무리한 법집행을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총련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대회 장소로 예정됐던 영남대에서 '초등학생 프락치'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3일 동안 학생회관을 서성이다가 영남대 학생의 가방을 뒤지던 초등학생이 발견됐으며, 이 초등학생의 가방에서는 디스켓 3장과 유인물 다수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들은 초등학생으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행사장에 가서 자료나 유인물을 수집하라고 했고, 학교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 그 아저씨가 때린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 때: 4월 15일(수) 오후 2시

· 곳: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옆 공터

-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규탄 집회
- 스티커 설문조사
- 불심검문카드 판매 및 팸플릿, 유인물 배포
- 불심검문에 관한 퍼포먼스
- 불심검문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 사과 및 알림

지난주 <인권시평>이 필자 사정으로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필진이었던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 대신 박천웅(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목사가 이번 주부터 필진에 합류합니다.

☞ <인권시평> 3면

## '김낙중 석방대책위' 창립 각계인사 참여, "민족대화합" 촉구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김낙중(전 민중당 대표)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13일 오후 7시 명동 향린교회에 모인 약 1백명 가량의 참석자들은 「평화주의자 김낙중 석방대책위」(삼일공동대표 홍근수 목사) 창립총회를 갖고 김낙중 씨를 비롯한 양심수 전원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 고문으로는 리영희, 박순경, 이효재 씨 등이 위촉됐으며, 공동대표는 홍근수, 고영근, 김진균, 강만길, 윤성식 씨 등이 맡게 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양심수들은 냉전과 민족분단의 피해자들"이라며 "이제 민족대화합의 시대에 걸맞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에바다농아원생, 자민련 앞 시위

### 김선기 평택시장 공천 항의

5백일이 넘게 '비리재단 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 에바다농아원생 등 1백여 명이 지난 11일 여의도 자민련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재단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이 오는 15일 자민련에 입당, 시장 선거에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민련측에 "김선기 시장에 대한 공천 포기"를 요청하며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김 시장은 에바다 비리를 묵인한 간접 죄인"이라며 "뛰어난 행정가라 할지라도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시장은 절대로 재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은 오는 15일 오전 11시30분 자민련 중앙당사에서 김 시장에 대한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 .....주요 공판 안내

- ▶ 4월14일 (화)
  - 정명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선고
  - 진의성(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선고
  - 김봉남 외5(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 ▶ 4월15일 (수)
  - 홍준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오전11시, 합의1부, 서울고법 303호, 선고
  - 박정윤(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선고
  - 김학균/황상우(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서울고법 403호, 선고
  - 함운경(국보법 위반) 오후4시, 합의7부, 서울지법 423호, 속행

<16, 17일자 공판은 내일자>

## 주간/인권/호/름

(98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 6일(월)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져/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등 경기도내 6곳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소각장당 30-200t씩 과다확정돼 7백여 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7일(화)  
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해 진권업·서규영 판사에게 징지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 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원구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노동부 실업급여동향분석, 3월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만473명 중 87.5%가 사업주의 경영사정으로 실직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이승윤 부장판사),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고등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해직된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 씨에 대한 계약법 위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선고/예산청, 올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한 1조1천1백19억 원의 실업대책 예산의 세부 사업내역 확정, 국무회의 의결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현재의 위헌결정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세계일보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노점상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권총을 빼들고 위협

◆ 10일(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17개 시민사회단체 실업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범국민연대기구 구성 결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간접협의로 구속된 정수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선고한 원심확정/절도혐의로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복역중인 '대도' 조세형 씨 서울지법에 보호감호처분 재심 청구/대구·경북 경찰청,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유보에도 불구하고 33명 연행해 이중 엄정화(효성가톨릭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아간당지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구속영장 신속처리제도' 마련 시행

◆ 12일(일)  
서울역 광장에서 '도원동 철거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대회' 열여/박상천 법무장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

인권 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박천응(목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세계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존재하며, 이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배타적이거나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 자유무역지대(AFTA),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 호주-뉴질랜드 경제협력(ANZCER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아시아-유럽 회의(ASEM)와 같은 경제공동체 및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같은 형태의 지역구조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 따른 것이며, 이는 NGO(민간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간의 관계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 정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민간, 민중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며, 이러한 구조들이 소수 강대국들이나 지배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차별적 배제나 개방을 통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민간과 민중에 의한 감시와 비판,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시아 민중들의 국제연대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몫인 것이다.

민중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단체의 지역주의에 맞서 민간단체들 역시 민중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회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거기엔 한국의 민중단체들의 참여도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에이펙민중회의(APEC PEOPLES FOURM)와 아셈민중회의(ASIA-EUROPE PEOPLES FOURM)다. 에이펙의 경우 주로 경제문제에 주력하는데 비해, 아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11월 경 열리는 에이펙 민중회의는 98년 11월경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2년 후인 2천년에는 한국에서 아셈민중회의가 열리게 된다.

한편, 지난 9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노동, 여성, 외국인노동자, 소수민족 등의 분야를 주제로 하여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이펙 민중회의가 열렸으며, 민중회의의 결과를 정 부단체의 의결구조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98년 아셈민중회의가 지난 3월 23, 24일에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10개국의 대표 4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의제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 정치·사회적 직면사항에 대한 검토, 아시아국가들을 위한 연대와 경제위기에 따른 민중 사회의 응답 등의 문제였고, 노동, 여

공존, 평등, 생명이 우선시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민중연대가 필요하다.

성, 아동, 빈민 등의 소외 계층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신자유주의시대로 표현되는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지배전략은 경제를 앞세우고, 인간과 자연을 종속시키는 소외와 차별, 억압의 사회구조를 배양해 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의 세포분열적 배양을 막아내기 위해 민중 진영에서는 오히려 공존, 평등, 생명의 문제가 우선시되는 세상 만들기에 연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한국은 유엔 가입 이전에는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가 UN가입 이후 민중의 국제연대의 문이 점차 열리면서 참여의 기회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은 국제민중회의의 참여를 넘어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 민중운동진영은 상호 연대하여 민중국제회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내부적으로 키워야 한다. 더불어 이를 국내에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도 국제연대의 수준을 점검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운동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비판을 넘어

우리의 민중운동 진영은 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가들의 교육훈련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를 의치며 몰입듯이 밀고 들어오는 다국적 기업 및 단기성 투기자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국의 문제를 넘어 세계 민중진영의 차원에서 민중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유엔 및 국제적 차원의 규제의 제도화와 기존의 유엔 및 국제 규약에 대한 준수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운동으로의 도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자본에 대한 국제민중 단체의 역할이 비판의 소리로서만 아니라 정책결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MF 등의 국제금융과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투자협정(MAI) 등의 무역기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하며, 소수를 위한 다수의 지배의 지지 및 불평등 국제협정 재개정 운동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과 국제적 지표의 설정 등을 통한 '공동체적 실험의 경제철학'이 우리 사회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직시하고 국내의 민중단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과 국경을 넘어 국제연대 활동으로 과감한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해 나가는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열릴 아셈 민중회의와 에이펙 민중회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5일(수)

제 11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가칭)도원동 강제철거 책임자 처벌과 이범취·백석호 살인죄 고문폭력 진상규명 비상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 도원동 용산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환식 개발”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지구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게 되며, 따라서 이주대책비만으로는 인근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더 환경이 열악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다시 철거민이 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곡으로 이주하였다가 아파트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권이 파괴되는 상황을 겪게된다”며 “순환식 개발에 입각해 가수용시설을 개발지구내 건립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순환식 개발〉이란

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주민들에게 임시수용시설(가수용시설)을 건립해 준 뒤 주택건설을 시행하며 △주택이 완공된 후 거주자들이 건립된 주택에 입주도록 하고 △그 후에 임시수용시설이 들어섰던 자리를 원래의 개발목적 부지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은 높은 입주보증금 때문에 아파트입주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개발지구의 거주민들이 그 지역에 재입주하는 비율은 전체 거주민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장기간의 골리앗(철탑망루) 농성투쟁을 진행중인 도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역시 ‘가수용시설 건립’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 등이 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등 20여 개 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30일 발생한 도원동 철거폭력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철거용역의 철수와 주민 신변 보장 △가수용시설 설치와 임대주택 입주 보장 △주민 피해 배상 △강제철거 금지 및 순환식 개발 입법화 등도 요구했다.

편의시설 고발전화 개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제)는 지난 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편의시설 고발전화’(02-521-8298)를 개설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또 “현행법상 비장애인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장치가 없다”며 각 기초자치단체에게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청했다.

한 권의 책

외국인노동자 - 『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수 역음/ 분도출판사 펴냄/ 144쪽/ 1998/ 5천5백 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인간적·윤리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분도출판사〉 ‘경제와 인간’ 총서 세 번째 시리즈로 출판된 이 책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에 강제출국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다루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과 고용에 관한 독일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운동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때 세계화의 논리가 국정지표가 되어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흔들고, 이제 국제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세계화가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할 즈음, 외국인노동자는 ‘잊혀져가는 손님’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국제노동사무국에 따르면, 오늘날 50명중 1명 이상 꼴의 인구가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허창수 신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우리 사회에 통합하고 그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일에 무능하거나 그럴 마음도 없는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이 책을 출판했다”며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아시아 1백50여 개 민간단체들이 4년여 동안 준비해온 '아시아인권헌장'(헌장)이 오는 5월 광주에서 선포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헌장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뤄지는 작업이어서 그 의미와 내용이 주목을 끈다.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 Human Rights Commission)의 주도로 진행된 헌장 제정작업은 6인의 민간단체 대표들로 초안위원회가 구성된 후 95년 1월 스리랑카 콜롬보, 95년 8월 홍콩, 96년 1월 홍콩에서 진행된 지역별 검토회의와 95년 3월 인도 방갈로, 4월 네팔 등지에서 열린 나라별 협의의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올해 이 헌장을 선포하기로 하고, 초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광주시민연대모임(공동대표 윤장현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오는 5월 14일부터 4일간 최종 토론회를 진행한 뒤, 이를 선포하기로 했다.

헌장 제정을 주도한 아시아인권위원회 측은 헌장 제정 배경에 대해 "아시아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장치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제의 시민연대모임 국제사업부장은 "광주는 80년 이후 보여준 독재에 대한 항거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을 광주에서 선포하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헌장 선언대회는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15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16일)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17일에는 해외 강사의 특별초청강연이 준비되며, 아시아 인

권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언에 대한 최종검증을 마친 후 17일 5·18 전야제에서 이 헌장은 아시아 지역의 민간단체들과 조직위원들의 이름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광주시민연대모임은 이번 행사를 광주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인권증진에 헌신해온 50여 명의 인사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상임지도위원으로는 윤공희 천주교 대주교를 확정지었고, 조직위원장으로는 강신석 목사를 선정했다.

### 〈아시아 인권헌장의 내용〉

전문/헌장의 배경 설명/일반원칙/인권옹호에 대한 책무/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인권/생명권/평화권/민주주의를 누릴 권리/문화적 가치와 자유를 누릴 권리/발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권리/사회적 약자의 권리/여성/아동/장애인/노동자/학생/죄수와 정치범/인권의 실행/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 기구

### "타살 다름없는 죽음"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주)한화 창원공장 환경안전팀 정준희 기장의 자살 사건 및 불법폐수무단 방류 의혹과 관련,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련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완화와 '양벌규정'이라는 악법"이라며 "정준희 씨의 죽음은 사측의 불법적인 환경지침으로 인한 타살이나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어 "현행 법률상, 환경을 훼손할 경우엔 사업주와 환경관리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환경관

리인이 사업주에게 저항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은폐하는 양벌규정을 개정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14일 폐수 무단방류를 이유로 (주)한화 창원공장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으며, 15일 오후 1시 한화 본사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주요 공판 안내

▶4월16일(목)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속행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신건  
양귀성/이철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신건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선고  
김용희/김진해(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선고

▶4월17일(금)  
김오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1부, 서울고법 303호, 신건  
강신호/이소현/이유진(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서울고법 302호, 선고  
전민아/한현수(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서울고법 403호, 신건  
김종전(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서울고법 403호, 신건  
강병권(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서울고법 403호, 신건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2부, 서울지법 319호, 선고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1부, 서울지법 418호, 속행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 때: 오늘 오후 2시  
· 곳: 혜화역 4번출구 옆 공터  
· 주최: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6일(목)  
제 1105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야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3일 '1차 실업자대회'를 시작으로 매달 '실업자대회'를 개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승리21은 "2월말까지의 완전실업자는 3백48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 수 1백23만여 명(2월말 현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국민승리21은 "현행 정부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실망실업자들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승리21은 "취업자 중 반실업상태의 노동자가 1백40만 명에 달하며, 건설노동자의 79.4%는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6.1일 이하의 일을 한 실질적인 실업상태"라고 밝혔다. 권영길 대표는 "자살과 강도 등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위해 보험금을 받으려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등 실업자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승리21은 또 "정부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를 방조하는 법·제도·정책기조를 방치한 채 '구조적 성격의 공공사업 확대 등 실효성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측에 △장기적인 실업방지 정책의 수립 △법국가적 실업대책기구 구성 △객관적인 실업조사 △제벌해체·세제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40시간 노동제를 통한 1백30만 개 일자리 창출 △불법해고등 무단노동행위 근절 △모든 실업자에 6개월 이상 최저임금

지급 △국민생활 기본선 보장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대표들도 참석해 대졸실업자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이들은 "올해 1/4분기 취업율이 6.8%밖에 안 되고 신규실업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 지금 대학은 실업의 공포가 흘러넘치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18-65세의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령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대상구분 없이 소득과 자산 정도가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천옥남 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장경희 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부민노청 구속자 전원은 '사상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 만화사랑방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되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

지난 7일 '불법 불심검문 불복중운동 워크숍'을 개최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은 15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 캠페인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불복중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대학로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경고카드와 소책자가 시민들에게 배포됐으며,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이 행사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40-50대 아주머니들도 호응을 나타내, 불심검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의식을 집적케 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재 일부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을 사회단체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오는 5월 12일경 전문가와 경찰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불심검문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들의 자문 아래, 불심검문 피해신고센터(741-2407)를 개설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방침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각종 집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불법 불심검문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권단체와 대학생들의 불심검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친절 불심검문'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논평을 내고 "경찰의 태도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서울경찰청의 지시가 일선 경찰들에게도 전달되어 불법적 검문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이 '친절'을 내세우면서도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 불심검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안의 핵심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경찰은 과거의 역할적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분명한 입장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 "IMF 재협상, 재벌 개혁" 전국연합, 사회보장 확대 촉구

현행 IMF 이행협약의 부담성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부터 IMF와 정부간에 이행협약을 재검토하는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부당한 IMF이행협약 철회와 재협상 및 재벌개혁 촉구대회'를 15일 오후 2시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투기적인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주권의 확보와 민생안정, 경제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도 "IMF의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가 지금 천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부당한 IMF이행협약에 의한 초국적자본의 침투로 노동자, 민중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자영업자, 농민을 포함한 5백만 명이 경제력을 상실하는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번에 정부와 IMF 간에 이루어질 논의는 협약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자본 편향의 부당한 IMF이행협약 시정 △책임있는 실업대책, 사회보장 확대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듭 제기되었다. 전국연합은 "모든 민중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정작 이번 일의 주범인 재벌등 보수 기득권층의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환치산, 이자소득 등으로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보수, 기득권층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행사와 동정

□ 평화학교 개강식 및 조성만(요셉) 열사 10주기 추모선교식

·때: 4월 16일(목) 오후 7시  
·곳: 명동 전진상 교육관  
·주최: 조성만(요셉) 열사 추모사업위원회 (745-0408)

□ 제9회 4월의대상 시상식 및 토론회

·때: 4월 17일(금) 오후 2시  
·곳: 종로성당 3층강당  
·주최: 사월혁명연구소

□ '꽃다지, 실업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음악회 - <엄마, 아빠 뽀내세요!>

·때: 4월 17일(금) 오후 5시  
·곳: 안산역 광장

□ 새로운 국민운동체 건설을 위한 토론회

·때: 4월 17일(금) 오후 6시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새로운 국민운동체 준비모임

□ 노동정보화사업단 집들이

·때: 4월 18일(토) 오후 6시  
·곳: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50 (323-8485/6)

□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특강- '오주의 기업감시운동과 원주민 인권'

·때: 4월 20일(월)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강의실 (723-4255)

□ 토론회 '시정료문제와 수용자주권'

·때: 4월 20일(월) 오후 2시-5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방송바로세우기 시청자연대회의 (312-3317)

□ 진농 창립 8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농업정책의 평가와 방향

·때: 4월 24일(금) 오후 2시-7시  
·곳: 농업기술진흥회관 (전철 4호선 이촌역, 794-7270)

□ 공청회 '실업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때: 4월 25일(토) 오후 3시-7시  
·곳: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  
·주최: 전혜루, 민주노총

□ 노동조합 일상활동 개선방향 연구 발표회

·때: 4월 28일(화) 오후 3시-9시  
·곳: 숭실대 사회봉사관 3층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78-422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7일(금)

제 11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대응

###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관행화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심검문과 관련, 당시 불법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한 전경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았고 △검문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학생증 제시를 요구했으며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고 △학생증이 없는 사람들을 셔틀버스에서 내리게 했으며, 이로 인해 아직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한 신입생들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검문을 행해야 하지만, 당시 학생들의 행동과 주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학생들이 불심검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결코 없었다는 점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는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날 있었던 불심검문은 그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전경들의 행동은 명백히 부당한 신체의 구속

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번 고발의 취지에 대해 "공권력의 부당한 과잉사용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불법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순순히 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찰의 '친절 검문' 방침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 법대 학생회는 "당국이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봉쇄하기 위해 검문하는 과정에서 불법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남대 법대 학생회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모으고 있으며, 이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

16일 한국어성단체연합(여연)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금' 논의와 관련,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반성만을 촉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진상규명과 개인배상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여연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간위탁금을 받지 않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만일 외교통상의 주장대로 일본 정부에게 배상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연은 이어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 요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

'제주 4·3' 50주년을 맞아 진행되었던 각종 행사가 지난 12일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중배 등)는 성명을 통해 "반세기 동안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던 4·3에 대해 합법적이고 광범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이라고 밝혔다.

4·3 국민위는 특히 집권당에서 최초로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여야가 정략적 이해를 넘어 4·3 문제에 대해 성실히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4·3 국민위는 "앞으로도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가두서명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2차 거리캠페인

오늘 낮 12시 / 명동성당 입구 들머리 앞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

#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최근 '안기부 고문 피해' 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224차 목요일집회에서 김낙중, 양홍관 씨(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년)의 '안기부 고문피해' 사례가 발표된 데 이어, 16일 열린 제225차 목요일집회에서는 강용주(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85년), 김삼석(남매간첩 사건·93년), 김진성(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97년) 씨의 피해사례가 각각 폭로되었다.

이날 소개된 김삼석 씨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첫 '간첩사건'의 피해자였으며, 김진성 씨도 96년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첫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람들이다.

### "가족 들이대며 협박"

집회에 직접 참석한 김진성 씨는 "안기부는 내가 한총련을 배후조종해서 바르샤바에 대표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부인하자 계속 구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죄명조차 몰랐고, 다른 혐의가 터무니없자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무엇보다도 "안기부가 가족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은 사법고시를 준비중이던 동생을 거론하면서 "동생이 밑에 와 있다. 네가 제대로 안하면 사법고시고 뭐고 없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고 회고하며, "안기부는 과오를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진정 과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30일 만기출소한 김삼석 씨는 "안경을 벗고 나면, 뺨과 정강이에 손바닥과 주먹질, 구둣발이 번개같이 왔다 갔으며,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수사받은 지 일주일이 된 날, 명찰 160번을 단 수사관이 성기를 만지는 등 인간이하의 취급에 시달렸

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당시 수사를 맡았던 재판장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2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등 고문수사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맞지 않기 위해 허위자백"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현재 14년제 복역중인 강용주 씨의 사연도 소개되었는데, 강 씨는 △주먹과 구둣발에 의한 집단 구타 △발가벗고 손들고 서 있기 △발가벗기고 허벅지 구타하기 △손등을 플라스틱 자로 때리기 △성기를 책상 위에 올린 뒤 때리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대독된 편지를 통해 "당시 구타당한 주된 이유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조작해 놓은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맞지 않기 위해 그 내용을 외우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작사실'을 호소했지만, 김씨는 '다시 남산에 가고 싶냐'고 협박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목요일집회 참석자들은 '안기부 개혁'과 '과거 인권유린 진상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 기혼여성노동자 고통 실각

### 고용불안·취업상담 급증

16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난 1/4분기 동안의 상담 결과 영세사업장의 기혼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 전화'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인천, 마산, 부산에서 접수한 상담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불안에 관련된 상담은 총 161건의 상담 중 81.4% (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

용불안 상담은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영세사업장과 기혼여성들의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 민주노총, 전교조 등

민주노총, 전교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부당소급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귀식 등, 공대위)는 16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전국의 공무원 2천4백 명에 대해 짊어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소급하여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으로 신분 및 퇴직금의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번에 해지된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당사자들은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레 옛날의 사소한 사건을 빌미로 소급 임용취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대상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 것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임용결격 사유자 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해당자 전원을 특별 처리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대위가 1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용취소 사유로는 교통사고 42건, 폭행 27건, 공무방해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형량별로는 선고유예 9명, 집행유예 89명 등이었으며, 임용전 사건이 80명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12명, 20년 이상 83명, 30년 이상 5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1세 이상 12명, 41세 이상 35명, 51세 이상 48명, 60세 이상 5명이었었다.

한편,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임용취소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구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18일(토)

제 11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근,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주장근, 박수기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조양주, 최민, 신영덕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출소한 주장근, 조용근 씨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과 관련,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참문을 뚫고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장시간 농성을 한 것은 소란행위가 틀림없으며,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 대한 항의는 유죄로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선고를 받은 관련자들은 이번 판결이 '인권'을 무시하고 교도관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편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재소자들의 반발에 대해 "교도소는 특별한 곳이므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교도관들이 소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은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교도관들의 행동은 오히려 정도가 약한 것이며, 서둘러 진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으며, 일반 잡범들과의 형평성 및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양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근(동신대 90학번) 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광주교도소측이 재소자들이 보관하던 편지와 책 등을 영치할 목적으로 검방을 실시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특히 조용근 씨와 박웅(전남대 89학번) 씨가 지하실로 끌려가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채 20여 분간 구타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조용근 씨등 대학생 재소자들 외에도 김양무(광주전남연합 자통위원장) 씨가 "4일 동안 포승에 묶인 채 식사조차 못했다"고 면회과정에서 밝히는 등 당시 광주교도소의 인권유린 시비가 계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위해 교도소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광주교도소측이 이를 거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재소자들의 가족과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을 '각하'했으며, 반면 교도소측이 재소자들에 대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받 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조용근 씨 등은 교도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인들의 소외계층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기업이 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대협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무한경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사회보장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연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대협은 "김대중 대통령의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했다.

장대협에 따르면, 현재 2%로 되어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의무고용율은 0.46%에 불과하며, 심지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 역시 평균 0.86%에 머물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9호 발행

### 97년 하반기 인권상황 총정리

인권하루소식 합본9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IMF'체제 아래 노동자·민중 생존권의 위기,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 등 멈추지 않았던 공안당국의 인권유린,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등으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여성 인권운동 등, 97년 하반기의 인권상황이 머릿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741-5363

#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해외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인 인권과 입양정책'을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어린 나이에 해외로 입양됐다가 성장한 뒤 모국을 찾은 해외입양인들이 직접 참가해,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세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김현도(26) 씨는 "대부분의 해외입양인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교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해외동포들을 위해선 특별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지만, 해외입양인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한편으로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어 경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자문제'는 해외입양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김현도 씨는 "해외입양인들은 대개 체류기간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여행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해외로 다시 나가야 하며, 한국법이 취업비자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인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입양법을 공부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중인 김현도 씨는 "인제 추방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우리를 추방하지 않는 한 남아 있겠다"고 밝혔다.

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김현도 씨는 "해외입양인들은 대개 체류기간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여행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해외로 다시 나가야 하며, 한국법이 취업비자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인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입양법을 공부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중인 김현도 씨는 "인제 추방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우리를 추방하지 않는 한 남아 있겠다"고 밝혔다.

'비자문제' 가장 고통  
네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진인자(27) 씨는 "한국에 돌아와서는 미국에서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인지 증명할 해답을 찾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미국에서와 같이 편견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한 2년 동안 내가 바란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아가 무엇인지 헤아려주면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었다"며, "해외입양아들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내국인과의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입양인 이증국적 인정해야  
입양아들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인선 해송아동복지연구소 소장은 "입양의 목적이 입양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 이들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또 "입양인들이 쉽게 자신의 뿌리를 찾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친부모 상담 △더욱

신중한 입양가정 선정 △양부모를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는 입양인에게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해외입양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입양후 서비스' 업무 범위를 법제화할 것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이중국적 인정 △정부예산으로 한국방문의 기회 부여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모국 자료의 별도 제작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시 최소 1년 이상의 비자 발급 △한국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입양인들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불심검문' 2차 캠페인 전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7일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2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이 검문을 가장 많이 당하는 곳 중의 하나인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현행 불심검문이 명백히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복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선전활동이 벌어졌다.

이날 캠페인이 벌어진 명동성당에서는 여전히 전경들이 불심검문이 진행돼 대조를 보였으며, 주최측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심검문'을 하려는 전경들과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 서준식 씨 4월혁명상 수상

사월혁명연구소는 17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제9회 '4월혁명상' 시상식을 갖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이 상을 시상했다.

사월혁명연구소는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서준식 씨가 인권운동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준식 대표는 수상소감을 통해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존권 되찾기' 곳곳 행사

- 부당노동행위 적폐, 고용인정 및 민중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때: 18일(토) 오후 2시
  - 곳: 종묘공원
  - 주최: 민주노총
  - 외국인노동자 퍼포먼스: "우리도 똑같이 일했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 제1회 실업자 진진대회
  - 때: 23일(목) 낮 12시
  - 곳: 서울역광장
  - 주최: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 토론회 '여성실업문제 출구 찾자'
  - 때: 23일(목) 오후 1시30분-4시
  - 곳: 서울시의회 소회의실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21일(화)

제 11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엔 우리나라를 비롯,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등 5개국의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니시노 루미코(일본 전쟁책임자자료센터) 씨는 "일본 국내에서는 국회의원이나 학자, 문화인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위안부는 상행위다' '강제연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의 '중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라는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루미코 씨는 "그러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사제청원을 막아왔으며, 현재는 전쟁피해조사위원회 제정을 요구하는 1백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가운데 3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방의회에서도 '전쟁피해조사회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운동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배상 불요구 방침'을 내비친 것과 대조적으로 대만정부는 일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의 하비진(대북시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집행장) 씨는 "96년 대만정부는 △대만국적 위안부 피해자 및 그 후원단체의 입장 지지 △일본정부가 민간모금으로 보상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반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별배상 및 배상금 일차 지불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참가자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의 발굴 △아시아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2천년 계획을 제안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활동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결의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국가배상 및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 등을 거듭 촉구했다.

###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을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

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통(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Race and Class) 등 하 씨의 대학강의교재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학술논문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풀무질) 등 국내에 번역출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은 물론, 대학동료와 교수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양대 임지현 교수(사학과 학과장) 등 사학과 교수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정부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한 토론을 문제삼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탄원서를 보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데리코(Drrichos)는 20일 하 씨의 구속에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 씨와 같은 통신동호회(인터넷내셔널 동호회) 회원인 오동진(한국통신 노동자) 씨도 통신에 올린 글에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공판 안내

- ▶ 4월 22일(수)
  - 이재용/원용수/김진명(국보법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 ▶ 4월 23일(목)
  - 김정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 4월 24일(금)
  - 이승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김익/이유진/오혜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동티모르 인권 지지” 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DJ에 서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가 지난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동티모르를 지지하는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밝혔다.

호르타 씨는 이 호소문에서 “동티모르인들은 인도네시아의 잔혹한 군사지배 아래서 지난 23년간 고통을 겪어왔고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김 대통령이 지난 도덕적 권위와 지도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인권위는 오는 21일 동티모르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표결에서는 유렵연합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정부는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서는 △동티모르 주둔 인도네시아군의 감축 △정치적 이유로 구속중인 동티모르인들의 조속한 석방 △1991년 딜리 학살사건에 대한 자세한 해명 △구금중인 동티모르인들에 대한 인간적 처우 △인권보고관과 실무그룹이 동티모르를 방문하도록 초청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고스톱 의원’ 검찰 고발

이한동, 목요상, 권익현 등 13명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국회 의회회관에서 노름판을 벌인 이른바 ‘고스톱의원’ 13명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의원은 서정화(인천 중·동·웅진), 심정구(인천 남갑),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장영철(경북 군위·철곡), 유홍수(부산 수영), 이한동(대표최고위원), 이응희(경기 용인), 이의익(대구 북갑), 권익현(경남 산청·함양), 김영구(서울 동대문), 양정규(제주 북제주), 변정일(제주 서귀포·남제주), 이상배(경북 상주, 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중앙일간지와 유력주간지 관련기사 등을 망라해 조회하고, 접수된 제보의 내용을 종합·비교·검토함으로써 교차확인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발행

97년 하반기(7-12월) 인권상황 총정리

가격: 1만원(문의: 741-5363)

### 주/간/인/권/호/름

(98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 13일 (월)

서울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에 ‘경비상황 대비시 불심검문 관련교양 철저지시’라는 공문 보내/이기호 노동부장관, 질차무시한 대량해고 사법처리키로/한충련, 영남대에서 기자회견 갖고 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거듭요구한 뒤 15일까지 단식농성 돌입

◆ 14일 (화)

정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문제 유보/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상시종업원 1백인 이상 기업체 8백9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인력 채용규모는 지난해 30% 수준/전국건설노조연맹등, 건설일용노동자 81.6%가 실업상태/한국노총, 과천 제2정사 앞에서 경인지역 노조간부 5백여 명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정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래야르드(32·살인 강간혐의·파라과이 국적) 씨 사형집행

◆ 15일 (수)

전국철도노조중앙비상대책위, 용산역 광장에서 ‘일방적 임금삭감 저지 중앙결의대회’ 열어/보건복지부, 전국 공방, 병원, 학교, 지하철 등 총11만6997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설치율 41.9% (97년 6월말 기준)에 이르렀다고 밝혀/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서울서 개막

◆ 16일 (목)

금속연맹,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6개 완성차 노조가 연대투쟁 벌이겠다고 밝혀/민주노총, 올 상반기 임금·단체협약 등을 결정하는 한편, 임금인상 요구율을 5.1~9.2%로 확정/방배경찰서, 권영혜 전 안기부장의 영광건설 탈세 무마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세무조사 관련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나서

◆ 17일 (금)

정부와 국민회의,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복직 허용하기로 결정/학부모들에게 촛기를 강요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 x중학교 임 교사의 사표 수리/서월대 평교수협의회 교수 26명 정부 세종로청사 16층 교육부 상항실을 점거해 제단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하며 농성

◆ 18일 (토)

민주노총, 전국 15개 도시에서 일제히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고용안정 및 민중생존권 사수결의대회’/각 사업장에서 해고된 실직자들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시위

◆ 19일 (일)

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아프리카 주장이 온다고 해도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인권 시평

“광주에서 직접 총 들고 사람들 때려잡은 놈들만 나쁜게 아니야... 전두환, 노태우 열심히 빨아주던 언론사 놈들. 이런 놈들을 그냥 두고 국민의 시대가 열리나?”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김윤환, 최병렬만 그럴까.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 서경원, 방양균을 고문했던 정형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장교 출신 이장형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이시철, 경기여상을 설립했으며, 여전히 경기여상의 소유주인 김일윤도 국회의원으로 건재하다. 이게 다 국민(아니, 실은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이 너무 빨리 잊어줘서 생기는 일이다.

며칠 전 이종사촌형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운동이라고 한답시고, 가족 친척들에게는 한없이 형편없었기에 사촌형과 둘이 앉아 소주잔을 기울인 것은 정말이지 생전 처음 이었다. 피아노 전공으로 국립서울대를 나와서 독일유학까지 했던 사촌형은 ‘판따라’ 담지 않게 우리 사회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황석영 소설도 죄다 읽고, 박노해의 책은 신간까지 찾아서 읽었다. 다음은 형의 주장이다.

“야, 근데 말이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 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거 다 쳐먹은 놈들은 그냥 두어야 하나. 그놈들이 단순히 권력에 붙어서 저 혼자 잘살고 잘먹었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치고, 간첩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고, 요상스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억압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냥 두어야 되나 말이야. 독일에는 말이야 히틀러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거든, 근데 말이야 뭐 박정희가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공이 있다고, 독일에는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어요. 인류에 반한 죄. 뭐 이런 게 한국에는 없어. 광주에서 직접 총 들고 사람들 때려잡은 놈들만 나쁜 게 아니야. 광주 일을 두고 유언비어가 유행하는데 이런 건 죄다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데 필연적인 일이고, 우리 국민은 현명하니 이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을 거라던 교수놈들, 전두환, 노태우 열심히 빨아주던 언론사 놈들, 이런 놈들을 그냥 두고, 국민의 시대가 열리나? 열릴 수 있거나 하나.

일제시대에도 그랬잖아. 독립운동은 무슨 독립운동, 이놈들은 일본놈들에게 붙어서 대동아 공영이 어찌니, 어차피 약소민족이어서 식민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 영미구축보다는 같은 동양선진국의 통치를 받는 게 좋단 놈들이었잖아. 그런 놈들이니까, 독립운동 빙자해서 미국에서 호의호식했던 영감이 대통령을 해도, 총 들고 탱크 몰고 서울로 진격한 군인이 정권을 잡아도,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런 놈들은 말이야, 일본놈들이 다시 쳐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충성을 서약할 거야, 아니야 그런 놈들은 김정일이 내려와도 왜 이제 오셨나고 그럴걸. 아니야 아니야, 그런 놈들은 아프리카 주장이 와서 정권을 잡아도 똑같은 껌아. 빌어먹을 놈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말이야, 야 이놈아! 너는 인권운동을 한다는 놈이잖아. 인권운동이란 게 뭐냐, 사람 살리자는 거잖아. 그놈들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인혁당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런 놈들은 못 때려잡냐. 그런 놈들부터 때려잡아야 역사든, 경제든, 정치든, 도덕이든, 민족정기든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생전 처음 둘이 앉아 소주잔을 기울인 날, ‘그놈들’ 때문에 무지무지 혼났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22일(수)

제 11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천1백50만 원과 민간모금액 6백50만 원 등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침 언급을 피했다. 이는 정부가 '배상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외교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성명서에 나온 것이 전부"라며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외교교통상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을 성명에 명시할 계획이었다가,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를 보류시킨 바 있다.

정대협 반응, 다소 미온적

한편, 정부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정대협은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외로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21일 기자회견을 가진 정대협은 '일본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정부측 방침에 대한 '황의'보다는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환영'에 더 무게를 둔 듯했으며, 이는 정부의 '대일배상 요구

를 강력히 촉구해온 기존의 입장보다 다소 온건한 태도다. 다만 정대협은 "한국정부가 '배상 불(不)요구 방침'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한국 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추구를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유보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쿠와라 스와미 권고안대로 일본정부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정대협은 △정전법외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전범자 처벌 △사료관 건립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하는 기

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대협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을 발표문에서 삭제하는 대신, 정대협이 △정대협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일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새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먼저 거론하지 않는다는 데 양해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방침은 96년 대만 정부가 자국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본지 4월 21일자 참조).

## ☞... 새로 나온 책

### 편의시설 다시 보기

김정열 등 지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등/ 460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편의증진법)에 맞춰,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종합안내서가 출간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 촉진모임 등이 펴낸 <편의시설 다시 보기>는 권리개념으로서 '접근권(rights to access)'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접근권'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이동권'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책은 사회복지, 교통·환경, 건축, 정보·통신, 주택, 디자인(설계)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지난 3-4년간 민간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 이름을 <편의시설 다시 보기>로 정한 이유는 장애인들의 현실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편의시설이 만들어졌으면서도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형식적인 시설인 경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 책은 단지 책상 위에서 연구하며 쓴 책이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아픔과 장애를 겪으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4월 11일부터 편의증진법이 시행됐지만, 마땅한 개론서나 안내서가 없어 아쉬워하던 장애인 단체들은 "편의시설 및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 소년수, "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 6사동(소년수 수감)에 수감 중이던 서 아무개(20·전남 여수) 씨는 동료 재소자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주일간 쇠사슬과 수갑으로 온몸이 묶인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징벌 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 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입'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당시 다들 상대방은 광주지역의 폭력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가혹행위 여부는 물론, 서 씨가 징벌을 받았는지도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97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죄로 구속돼 10월까지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광주감별소(소년원)로 송치됐다 2주만에 출소했다.

한편, 서 씨는 광주감별소로 이송된 뒤에도 또 한 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당시 '선생님'으로 불리는 교도관들이 저녁 7시경 술에 취한 채 속속로 들어와 '잠을 성이 좋은가 보겠다'며 라이터불로 발을 지졌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관련자들의 처벌보다도 다시는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러한 사

## 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

서울대학교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82%의 찬성을 얻어 시행에 들어갔고, 인문대 학생회도 인문대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학생회칙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다른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생회칙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서울대 전체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대 여학생위원회 양승현(언론정보학과) 씨는 "성폭력방지를 위한 학칙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공백을 메꿀 공적 규약이 필요하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첩하게 대처할 목적에서 학생회칙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회칙의 제정은 학교측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제정된 학생회칙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지정하는 여성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인문대에서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사건

의 가해자인 남학생이 실명으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한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문대 학생회측은 "익명으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은 아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실명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공개사과'의 형태이고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동체에 용서를 비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사과는 그렇게 강제적이지 않다"면서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에서 가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가해자의 책임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모두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실명 공개를 반대하는 쪽은 "실명공개는 가해자에 대한 낙인찍기이며, 강제로 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이 또다른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그 남학생은 '정신대수요집회 참석'과 '감상문 제출 등 반성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 하나둘 늘어나는 양심수

###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생 하영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본지 4월 21일자 참조>, 지난 19일엔 지난해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지현찬 씨가 미행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성북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용민(고려대 법학과 4년) 씨도 같은 날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지 씨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각종 학내의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김용민 씨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과의 관련 여부 및 지난해 불심검문 과정에서 빼앗긴 책들의 이적성 여부와 관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발행

97년 하반기(7-12월) 인권상황 총정리

가격: 1만원 (문의: 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23일(목)  
제 11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3개월 개박고문, 15년 폐쇄독거

###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두터운 장막에 가려졌던 청송교도소의 인권실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대도', '의적'으로 불렸던 조세형(54) 씨가 법정에서 청송교도소에서의 처우를 일부 공개해,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신청한 보호감호처분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씨는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지난 15년 4개월 동안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7동 1평 짜리 폐쇄독방에서 24시간 폐쇄회로 카메라의 감시 밑에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된 '엄정독거' 생활을 했다."고 엄중의 변호사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 '숨쉬기도 고통스러웠다'

그는 "특히 첫 3개월 동안 혀수갑을 차고 손을 뒤로 해 등 뒤로 높이 묶인 손이 혀수갑과 연결된 채, 식사도 없드리 할아먹어야 했다(개박고문)."며 청송교도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증언해 나갔다. 그는 △감방은 뒷 창문이 철관으로 막혀 있고 북도 쪽에 난 시찰구(교도관이 감방 안을 감시하기 위한 작은 창)는 두꺼운 플라스틱 판으로 막혀있어 숨을 쉬기가 몹시 고통스러웠던 점 △감방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는 아무런 가리개가 없어 용변을 볼 때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드러나는 수모를 당했던 점 등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이어 그는 "새소장이 부임해 와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도 가혹한 통제와 감시를 당해야 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심리가 끝나 조 씨가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조세형 씨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던 양하림(38) 씨는 "살인범도 감도범도 아닌 그에 대한 교도소 측의 처사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5년의 형기를 다 채운 조 씨가 최근 또 다시 10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자, "제법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는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날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다음 재판은 5월 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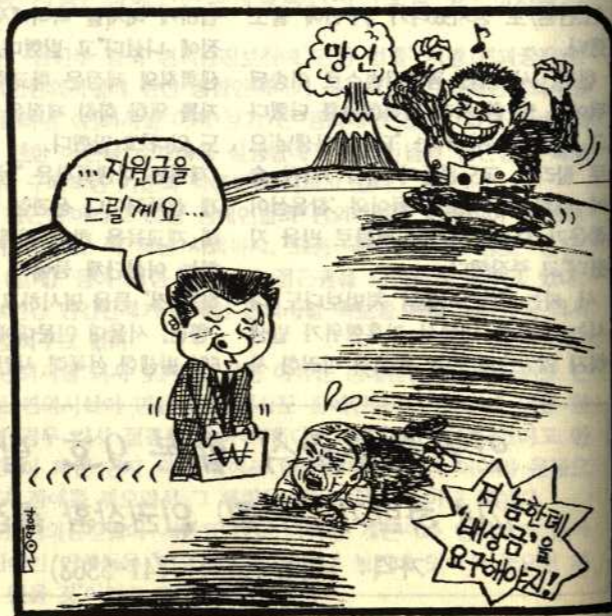
우선 3개월 동안 고문의 종류로 분류되는 '개박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행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독거 수용은 계속 2년 이상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방의 조건은 자연광의 상태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시한 55년에 유엔서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진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역대 청송교도소장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대학가 확산 조짐

###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

불법검문에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제기되고 서울대 총학생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이 '전질검문 요령'을 시달리며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미 4월 30일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전야제를 기해 대학생들의 행사를 준비중인 연세대에서는 다음 주부터 경찰의 불법검문에 대해 적극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저녁 시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검문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불법검문카드를 판매하고 있고, 27일에는 연세대 동아리 연합회에서 '불법 불법검문에 대한 연세인 자유발언대 및 설명회'를 통해 불법검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을 지키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의 대다수 대학 총학생회가 4월 30일과 5월 1일을 전후하여 집중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특히 경찰의 일방적인 불법검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었던 점에 주목하여 각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생들의 집회시위자유를 보장하는 요구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이 운동을 더욱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계획과 함께 24일부터 통신공간을 통하여 '경찰의 불법 불법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선언운동은 나우누리 찬우물, 하이텔 바통모, 천리안 화랑터 등 진보적인

통신동호회에서 우선 전개될 예정이다.

## 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실질적 조직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제108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힘찬 투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를 '대규모 실업과 고용불안기 발생하는 상황에서 98 임단투의 전국적 공동투쟁의 결의를 모으기 위한 전국중앙집중대회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쟁취,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제벌체제, 부당노동행위근절, IMF재협상쟁취 등을 위해 단순 기념식이 아닌 총파업의 실질적 조직화를 위한 위력적인 결의대회가 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은 조합원 외에 미조직노동자와 실업자, 사회단체등 관련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12일간을 노동절 기념주간으로 설정해 포스터, 플래카드,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의 대국민홍보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2일 검찰청 앞에서는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악덕기업주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노동절 집회는 각 단위별 사전 집회를 시...로 종묘공원에서 본대회를 가지고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발행

97년 하반기(7-12월) 인권상황 총정리

가격: 1만원 (문의: 741-5363)

## 행사와 동정

□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특  
일 경험 강연회

·때: 4월23일 (목) 오후2시  
·곳: 종로 기독교회관 강당  
·강연: 한스-올리히 리노우(독일 시  
각 장애인 학교 교장)

·주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조성만(오세) 추념 평화학교 강의  
'IMF 시대의 남북 경제 협력'

·때: 4월 23일 (목) 오후7시  
·곳: 명동 전진상 교육관  
·주최: 조성만열사추모사업위원회  
(747-2445, 745-0408)

□ IMF극복을 위한 강연회  
▷1차 강연회 'IMF가 우리사회에 미  
치는 영향'

·때: 4월 23일 (목) 오후7시  
·곳: 광주 남동성당 교육관(2층)

▷2차 강연회 'IMF와 교회'

·때: 4월24일 (금) 오후 7시  
·곳: 광주 가톨릭 센터 7층 대강당  
·주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 평  
화위원회(062-227-6008) 등

□ 의문의 죽을 진상고명 등을 위한  
대국민 퀘퀘인 선포식

·24일 오전 11시 ·곳: 서울역 광장  
·주최: 추모단체연대회의(742-3180)

□ 3.13 부분사면 구한 및 5.3 석탄절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

·24일 오후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전국연합(921-4090)

□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24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강당  
·주최: 민가협(763-2606)

□ 열린사회 시민연합 청렴대회

·26일 오후3시 ·천도교 수운회관  
·주최:열린사회시민연합(준)(363-8400)

□ 세미나 '인간존엄성과 양심수'

·때: 4월27일 (월) 오후2시  
·곳: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CCK)

신관 강당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460-7622)

□ '제 사회단체 대표 초청 오찬 라담  
회'

·때: 4월28일 (화) 오전 11시30분  
·곳: 프레스 센터 19층 국회실  
·주최: 민주노총(765-201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24일(금)

제 11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물대포 5시간 난사, 고공침투

### 도원동 강제철거 완료, 농성자 전원 연행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폭포수 아래를 지난 듯 흠뻑 젖은 몸이다. 부상당한 팔을 감싸 안고 다리를 질퍽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처절했다. 일부는 오열을 터뜨렸고, 일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묵묵히 경찰에게 몸을 맡겼다. 두 달여 간에 걸쳐 골리앗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도원동 철거민들의 싸움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 장비동원, 총력 공격

23일 오전.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 경찰 수백여 명과 용역직원, 재개발조합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리앗(철탑망루)에 대한 최후공격이 시작됐다. 두 대의 크레인인 골리앗을 향해 잠시도 쉬지 않고 물대포를 쏘아댔고, 마이크에서는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겠다"며 철거민들의 '투항'을 종용하는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전투경찰들은 철거민들의 추락을 예상한 듯, 골리앗 아래로 여러 개의 매트리스를 깔아 놓기도 했다.

골리앗 농성자들은 물대포의 공격 때문에 몸 하나 제대로 추스리기 어려운 속에서 혼신의 저항을 했으며, 산발적으로 용역직원들과 투석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회사측은 이날로 '끝장'을 볼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공권력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철거작업에서 철거민들의 저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처절한 저항 끝에 '백기'

낮 12시.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중기가 콘테이너 박스를 철탑망루 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이른바 '특공대'로 불리는 용역직원 10여 명이 쇠파이프와 연장을 소지한 채 '합승'하고 있었다. 골리앗 농성자들은 쇠파이프를 휘둘러가며 콘테이너 박스의 착륙을 저지하려 했지만, 10여분 후 골리앗 정상은 '특공대'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진입에 성공한 '특공대'들은 골리앗 정상으로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농성자들이 쌓아두었던 돌과 화염병, 이불과 옷가지 등이 하나둘씩 지상으로 던져졌다. "살려달라"는 농성자들의 마이크 소리도 엠프선이 잘려나가면서 곧 잠잠해졌다. 이제 골리앗 진입은 시간 문제였으며, 구경중인 재개발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제 항복할 때도 됐는데"라는 이야기들이 웃음 속에 흘러나왔다. 밖에서는 물대포를 쏘는 크레인 외에 또 한 대의 포크레인이 철탑 외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이때 잠시 골리앗의 철거민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물대포의 우려 앞에 화염병 역시 무용지물이었으며, 오후 1시 15분경 농성자들은 결국 '백기'를 내걸었다.

5시간여의 '전투' 끝에 농성자들은 하나둘씩 골리앗 밖으로 걸어나왔다. 한 농성자는 "육상으로 진입한 용역직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많은 사람들

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경 연행자들을 태운 전경버스가 공사현장을 빠져나가기 할 때, 한 주민이 차 앞을 가로막고 오열하기도 했지만, 그 주민 역시 전경버스에 실린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것으로 도원동 농성 상황은 종료되었다.

한편, 도원동의 철거가 임박해진 오전 11시경, 양연수 전국빈민연합(총)의장, 오세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 대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의 김영규 교수,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남경남 전철연 의장 등 각계인사 10여 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철거의 중단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요구였다.

###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24일 열린 제226차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또다시 과거 안기부의 고문사태가 폭로되었다(관련내용 2면).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째 수감중인 양동화 씨는 누나가 대독한 편지를 통해 "엄청난 구타와 협박, 기함으로 심신이 파괴돼 저항할 기력조차 상실한 가운데, 허위자백했다"며 "허위자백 외에는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안기부가 종용한 기자회견을 했다"고 털어놨다. 양 씨는 또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과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가슴이 뛰고 말문이 막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증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양 씨가 지난 94년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소하기도 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노동은 국민의 권리"

###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

지난 18일 부산에서 실직자 거리행진이 진행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첫 실업자대회가 열렸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23일 12시 서울역 앞에서 2백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제1차 실업자 전진대회'를 가졌다.

현재의 대량실업문제에 대해 권영길 대표는 "우리사회의 실업문제가 폭발일보 직전의 뇌관상태와 같다"며 "사회전체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실업대책만을 주먹구구식으로 남발하면서,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해고자인 세계일보의 김영호 씨는 "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제조업을 넘어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사주들은 요즘의 위기를 이용하여 그동안의 언론실태를 반성하기는커녕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을 통해 "노동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장기적인 실업방지정책수립 △모든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재벌 중심 경제정책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업자들의 결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승리21과 전국실업자동맹(총)은 매달 5일을 '실업자의 날'로 정해 실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메시지를 보내온 안하원 목사(부산 실직자거리행진 준비위원회)는 "현 실업문제는 실직자들의 단결된 목소리로 힘을 모을 때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며 "빼앗긴 일자리를 찾는 출발이며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전국의 실업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민주모임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정리해고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로 촉발된 경제공황상태가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몰염치 하

게 이에 대한 타당한 대안이나 해법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의미하는 정리해고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동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용조정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일 김대중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고통을 강요한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엄중 경고했다.

## "허위자백 외 물증없자 기자회견 시켜"

### '구미유학생 사건' 양동화 씨의 증언

나는 85년 6월 2일 오전 8시경 전남 광주에 있는 한 다방에서 정체불명의 남자 10여 명에 의해 국가안전기획부 광주분실로 연행되었다가 다시 서울에 있는 남산분실로 옮겨졌다.

남산 안기부 지하 1층 137호로 끌려갔는데, 취조실로 들어가자마자 군복으로 갈아입힌 뒤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몰래 혼자 잡혀 왔으니 협조하지 않으면 죽여서 버려도 아무 문제없다. 많은 놈들이 여기서 죽어나갔어도 아무일 없었다. 자! 봐라. 이 벽에 배인 핏자국이 여기 온 놈들이 고문받고 남긴 자국이다. 순순히 불어"라며 거침없이 협박했다.

내가 어리둥절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잠시 후 다른 안기부 수사관 3명이 들어와 그중 2명이 몽둥이로 온 몸을 무차별 구타하기 시작했다. 얼굴, 머리, 가슴, 등, 팔다리 등 온몸을 몽둥이로 내리쳤다. 2시간의 집단구타를 당한 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입고 있던 군복이 피로 적셔졌다. 그후에는 구타의 감각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아무도 모른 채 잡혀왔다는 극심한 공포와 계속된 폭행, 기함, 협박으로 인해 '이들이 나를 능히 죽이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5일경 갑자기 국군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합동수사를 한다며 함께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안사 수사관들이 합동조사에 참여하고부터 나와 관련된 피의사실이 더욱 과장되었다. 고등학교 후배와의 만남은 학생운동을 사주하기 위한 것으로, 후배와 농담으로 오고 간 모든 얘기들이 시위 예비음모로 조작되어 버렸다. 구타와 협박, 기함으로 피폐해진 심신은 저항할 기력조차 상실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것을 수 백장의 자술서로 작성케 하여 세뇌시켰다. 설새없이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쓰지 않으면 구타가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자 그들이 강요했던 허위사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연행 후 한 달이 넘어 남산 근처의 모 호텔에서 큰 형님과 30분간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면회하는 곳에 먼저 대기한 안기부 수사관 3명이 도청장치를 하고, 동석·감시하여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고문과 불법구금에 의한 허위자백 외에는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물증도 없었기 때문에 안기부는 송치 조금 전 기자회견을 종용하여 약 5분 정도의 기자회견용 조작사건 개요를 적어주며 몇 번이고 반복케 하여 2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실로 데려갔다. 그 회견이 끝나자 수사관을 향해 한 기사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후에 같은 수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더 기자회견을 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대답없는 메아리, "의문사 진상규명"

### 유가협 등, 대국민 캠페인 돌입

벌써 12년이 흘렀다.

독재권력 아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의 유가족들이 모여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한 때가 86년. 그때로부터 12년간 '의문사 진상규명과 열사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투쟁은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그러나, 6공과 문민정부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열사·희생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족민주유가협(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추모단체연대회의) 등 관련단체들은 또다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의 대열로 나서고 있다.

5월말까지 매일 가두서명·사진전 유가협과 추모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5월말까지 매일(일요일 제외) 오후 2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며, 가두서명운동과 함께 열사·희생자 사진전시회도 벌이게 된다. 또한 유가협 등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배은심 유가협 회장은 "수많은 양심적 죽음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은 민주정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 명예회복 △독재 정권 아래 저질러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제1차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지정 △민주열사를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 △열사 묘역의 일원화 및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등을 거듭 촉구했다.

4공에서 문민까지, 의문사 42명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선포식에는 유가족 20여 명이 열사·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참석했으며, 연사들의 발언이 한 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은 "열사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은 "지난 3·13 사면조치에서 국민을 기만했던 현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이를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김영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은전한 역사를 세우기 위한 진실규명과 기록화 작업에 집권자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최종길(73년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의문사) 씨로부터 이덕인(95년 아암도에서 변사체 발견) 씨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 아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42명의 사진이 전시돼, 서울역 광장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84년 군복무 중 의문사한 허영근 씨의 아버지(허영춘)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은 국민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모두가 권력의

감시자가 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 씨는 또 "문민정부 아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들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건을 전혀 재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고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78년 청주신학교 재학중 의문사한 정병영 씨의 아버지(정진동) 역시 "과거사의 규명은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 정부라면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철(87년 고문치사) 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더 이상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지 말라"고 질규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이 집계한 열사·희생자의 숫자는 4·19, 5·18 관련자를 제외하고도 3백28명에 이른다. 이제 또다시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과 민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 골리앗 농성자들 계속 구금 항의시위자들도 연행

23일 도원동 제기발지구에서 연행된 골리앗 농성자 전원이 24일 밤 현재까지 계속 경찰에 구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관련자들의 구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총거민연합(전총연)은 "골리앗에서 연행된 30명 전원이 용산·동대문·남대문 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총연은 "23일 도원동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과 대학생 등 56명도 경찰에 연행된 이후 계속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민주화의 성지'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불법검문, 폭력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제벌해체·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 소속 학생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법검문을 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검문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연대'측은 또 경찰의 검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명동성당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행동연대' 소속 학생 1백여 명은 명동성당 인근 삼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이후 명동성당 진입이 어려워지자 정리집회를 갖던 도중 명동성당에서 쫓아온 전경들에 의해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연행되었다고 '행동연대'측은 밝혔다.

'친절검문 요령'까지 내리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문을 하겠다던 경찰이 이날 '민주화의 성지'에서 보여준 것은 '겉다르고 속다름' 모습이었다.

###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가 내려진 후인 지난 3월 17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가 모두 3백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엔 3·13사면 직후 구속된 전재철(북부노동자회 사건·3월 15일 구속) 씨와 양정애(국제사회주의자 사건·3월 16일 구속) 씨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학생 구속자가 2백3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9년 이상 수감중인 장기수

가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법규별로 분류할 경우엔 전체 양심수의 79.6%인 2백8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민가협은 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총 4천2백37명이며, 그중 97년 한해 동안 구속된 양심수만 1천3백7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제13차 정기총회를 가진 민가협은 김정숙 씨를 신임 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민가협은 이날 총회결의문을 통해 "현 정부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은 이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 △사상정향제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인권탄압기구 안기부의 개혁 △고문·의문사 등 비인도적 범죄의 진상규명 △재소자 처우 및 감옥 인권 개선 등을 결의했다.

### "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전국연합, 법무장관에 공개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은 24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5월3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시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개서한에서 전국연합은 "지난 3·13 부분 석방과 사면조치에 대해 당시 장관이 5월3일 석가탄신일 특사에서 추가석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텔레비전 토론에서 '석가탄신일에는 특별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많은 양심수 가족과 관련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헤아려 이번 석가탄신일을 기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수천 명의 양민을 학살한 전·노 전직 대통령은 사면되고 뽕 하나 흩치지 않은 양심수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갇혀있다"고 비판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 "김대중 정부가 양심수를 석방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과거의 대통령처럼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 사회적 통합 위한 교육 절실 독일 시각장애인 학교장 특강

2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제)는 '제18회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한스 울리히 리노우(독일) 씨의 특별강연회를 마련했다. 독일 시각장애인학교 교장을 지낸 리노우 씨는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선,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시민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리노우 씨는 "장애인 학생들을 처음부터 돌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독일에서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위생처리, 식사법, 물건사기, 세탁, 사교활동 등 실생활 능력을 가르치며 이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리노우 씨는 또 "지나치게 장애학생들을 돕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소극적인 경향을 제거하고, 발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면서 실제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삶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발행

97년 하반기 인권상황 총정리

가격: 1만원(문의: 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28일(화)

제 11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고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 한국타이어, 순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회사와 노동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본가들의 배는 계속 불러가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 소장 김상근)가 작성한 '한국타이어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최근 수년간 당기순이익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회장 조양래)는 현재 심각한 경영악화 상태에 있으며, 이는 무리한 설비투자와 과도한 차입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94년 금산공장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무리하게 단기은행차입금과 장기외화차입금을 끌어 들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이자비용과 외환손실 부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96년 5백65억 원이던 이자비용은 97년에 8백70억 가량으로 늘었으며, 이는 한국타이어의 생산노동자 4천명이 한해 동안 받아간 임금총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96년, 97년에 각각 16%, 14%씩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1%,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주주들에 대한 배당액은 94년 32억2천만 원에서 97년 46억5천9백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배당성향도 15%에서 4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차입경영 과실, 노동자에 전가 반면, 회사측은 이러한 경영상의 부담을 정리하고 및 정규직의 비정규화 등 고용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측은 97년 11%의 인원감축을 통해 노무비의 비중을 13% 삭감했으며, 98년 들어서도 정리해고와 정규직원의 용역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 3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를 비롯한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무비를 삭감하는 가운데에도 97년 광고선전비로 2백79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96년과 대비해 무려 75%나 증가한 액수다. 노기연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나가는 돈은 한푼도 아까워하면서 소비적인 부문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 위기 돌파구, 노동탄압 선택 한편, 최근 수년간 벌어졌던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 문제도 무리한 차입경영에 따른 부담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5월 금호타이어 파업사태를 기회로 시장을 확장하기 시작한 한국타이어가 늘어난 공급물량을 채우고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사측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휴일조차 금지시키고, 조출·진입을 의무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연장했으며, 한편으로는 더 많은 판매와 더 많은 이익을 내다본 경영자층이 금산공장을 착공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95년 노동자들의 불만이 분출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와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결과로 임금인상이 단행되고 부분적으로 근무시간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가중되는 자금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회사측이 다시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노기연은 "1955년 설립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한 한국타이어가 97년 현재 자본금 332억7천8백만 원의 회사로 성장한 반면, 노동자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음을 던지며, "기업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노동자고, 기업이 좋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이라고 밝혔다.

## .....오늘의 공판

- ▶ 4월 28일(화) 양귀성/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 등),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김봉남 외5(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이승구(국보법 등), 감상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박미애/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진성(국보법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박진호(국보법) 오후 4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 29, 30, 5월 1일 공판안내는 내일자에

##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김대중 정부가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공권력이 노동자들에 대해선만 갑날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6시경 경찰은 국민대 노동조합(위원장 조춘화)의 천막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 전원을 연행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노조위원장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 왔다.

강동국 국민대 총학생회 학자국장은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인 새벽 5시경 국민대학교 학생회장 및 직원 50여 명이 천막을 둘러싸고 철거를 시작했으며, 이에 자고 있던 10여 명의 농성자들이 밖으로 나와 격렬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적인 열세로 천막은 무너지고 농성자들이 천막 위에 누워 계속 저항하자 전투경찰 1개중대가 교내로 투입되었고, 학생 9명을 포함해 농성자들이 전원 강제연행되었다고 밝혔다.

강동국 씨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대 현승일 총장이 직접 112로 전화를 걸어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니 긴급히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30여명의 전경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씨는 "학교 주변에 10대 정도의 전경버스가 대기 중이던 것이 사진촬영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이 공권력투입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농성자들을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전원을 석방했다. 다만,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고, 이에 학교측은 농성에 가담했던 참가자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고소했다.

조춘화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 학교측 초청을 받았을 때 "이경숙 총장은 과거 80년대 초 국보위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노가위 위원으로 노동법 개악에 일조하더니 숙대 노조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97년도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 학사진행방해, 해고행위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배포한 교육·홍보자료를 대학이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이며 노조에 개입·지배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현승일 국민대 총장은 지난 20일 직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농성에 가담하는 자 등 해고행위를 하는 자는 구조조정시 선착순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국민대대학원 학생회장인 원동업 씨도 '교내 재민주단체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한 사실과 선동적인 유인물을 작성·배포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당한 상태다.

## 주/간/인/권/호/름

(98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 21일(화)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49억1700만원 지급 의결/정부, 북한의 대남 라디오방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경기도 교육청, 학생 수 1백 명 이하, 학급수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151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모두 156개교를 2003년 까지 통폐합키로/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8·15광복절 맞아 북한방문 취재를 위해 통일부에 방북신청 내기로/유엔인권위, 미국측이 쿠바를 지목해 제안한 '인권 특별감시 대상국' 지정요구 결의안을 19대 16의 표차로 부결

◆ 22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단체의 정치활동 허용과 공권보장등 각 정당에 요구/보건복지부, 97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금을 잘못 운용한데 따른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교육부, 내년부터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학부모의 평가를 받게할 방침/환경운동연합, 제28회 지구의 날을 맞아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 및 깃벌 매립반대 시위/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첫 공판 열려/민주노총, 청구성심병원 등 34곳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집단고발

◆ 23일(목)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제도 개선 요구하며 전국 1만여 대 택시 파업/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협의회대회'/국민승리21,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실업자대회 개최/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 실직자들의 불법·폭력집단행동과 불법 총과업 엄단키로, 또 한총련 등 불법단체들의 실업자단체 침투와 노학연대투쟁 봉쇄키로/독일정부, '고용정책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408억 마르크 투입키로/인도네시아 대학생 2천여 명 수도 자카르타에서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최근 최대규모의 가두시위 벌여

◆ 24일(금)

세계일보 노조, 이상희 사장과 감구한 관리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고소/서울시교육청, 1백80만원 손지 챙긴 스고교 최아무개 교사 해임 통보/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 '의문사 진상규명 및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 촉구' 대국민 캠페인 돌입

◆ 25일(토)

북녘동포를 돕기 위한 '국제금식의 날' 행사, 서울을 비롯한 36개국 107개 도시에서 열려/제일동포, 오사카에서 '4·24 한신(오사카·고베) 교육투쟁 50주년 기념집회'

◆ 26일(일)

통계청 3월중 고용동향 발표, 실업률 6.5%, 실업자수는 137만8천명으로 집계/보건복지부·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신고 10건 접수/서울경찰청,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농성자 30명에 대해 구형측의 강제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5명 구속, 25명 불구속 입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29일(수)

제 11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천주교 주교들이 양심수 석방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교)가 주최한 '양심수' 세미나는 주교들이 '양심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진 최초의 세미나로서, 이는 한국 천주교계 전체가 김대중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인간 존엄성과 양심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대)와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가 발제자로, 윤기원 변호사(박동균 신부(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양심수 사면문제와 관련, 박 교수는 "특별사면은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평소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국가의 실정법제도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사상적 양심결정이 인간의 존엄성, 즉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 내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정치적·사상적 갈등해소 내지 국민화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간첩죄로 처벌된 수감자의 경우라도 △간첩행위의 동기에 윤리적 양심의 가책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었고 △장기간 구금되어 현재 고령,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 체제의 포용성과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특별사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기원 변호사는 "현재 사면논의가 명망가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작간첩에 대한 사면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작간첩 사면 최우선 고려 대상 한인섭 교수는 논란을 낳고 있는 양심수 개념과 관련해, "비폭력적 정치적 표현은 좌경이나 공산주의적 견해라 할지라도 보장되어야 하며, 적군파와 같은 테러조직을 만들 경우 등을 제외하고 폭력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양심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향제도와 관련해 한 교수는,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사상 형성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간섭하며, 그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개인을 형벌로 제재하는 체제는 파시즘"이라며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폭력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유현석 변호사는 긴급조치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만세'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다가 잡힌 학생들에게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플래카드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만세라고 썼지만, 마음 속에는 유신헌법 폐지라는 뜻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유 변호사는 소개했다. 윤기원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에 대한 판결을 지적하며, "법원이 한층 더 구속자들에게 대해 미리 유무죄를 정해 놓은 뒤 형량만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 한권의 책...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노라 칼린 지음/ 도서출판 책갈피 발행/ 128쪽/ 4,300원/ 1995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대 불행한 기억하나, 나찌의 가스실로 들어간 건 유대인 뿐만이 아니었다. 분홍색 역삼각형을 가슴에 새기며 가스실로 사라져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걸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오늘 소개한 책을 읽어보시라.

이 책은 동성애를 개인의 '선택'이나 '성적 취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관계' 속에서 모색했다. 저자는 "자연스럽게 구축된 성이란 없다"고 단정하며, 동성애 역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해 왔음을 밝혀낸다. 따라서 동성애가 인정되거나 거부되느냐를 떠나서 그 사회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동성애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어떻게 억눌렸으며 어떻게 개조되었는지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성억압과 가족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저자는 억압의 역사가 연속되면서 단절되어 새로운 단층이 형성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지적변동 가운데 하나가 산업혁명이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가족과 성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억압받았는지 풍부한 예를 들어 보여준다.

##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대학생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행이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지난 13일 한양대 하영준 씨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4월달에만 20여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다. 이수미(동덕여대 총학생회장 학교 앞에서 26일 연행), 조용신(나우누리 민중가요 동호회 운영자, 사무실 근처에서 26일 연행), 이동욱(안동대학교 총학생회장 숙소로 가는 도중 28일 연행), 정현진(전남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26일 집 앞에서 연행)씨 등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연행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배미선(신라대), 신현중(청주대), 진현근(대구대), 박광진(건국대), 정재욱(경북대)씨 등이 전국 각 지역에서 체포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측의 영장제시없이 무조건 강제연행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현행법이거나 영장을 제시하거나 긴급체포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대학생들을 강제연행하는 것은 노동절을 앞두고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결집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과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수미 씨의 경우도 연행 당시에는 국보법 위반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뚜렷한 혐의 내용을 찾지 못하자 학내 문제와 관련해 구속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강대 경영대 학생회장인 정욱 씨도 지난 26일 연행당했지만 경찰에서 확실한 혐의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27일 풀려났다.

경찰은 지난 23일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실무협의회'를 열어 실직자들의 불순세력화를 막기 위해 한총련 등 불법단체들의 실업자 단체침투와 노학연대투쟁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명동성당 경찰 모습 사라져 불심검문 캠페인 영향

명동성당 입구를 지난 때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전투경찰의 불심검문이 28일부터 사라졌다.

28일 서울시경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불심검문 캠페인을 전개함에 따라 병력운영에 무척 고심했다"며 "사회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앞으로 명동성당에는 병력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갖기로 했던 제3차 '법대로 하자! 불법검문' 캠페인을 취소했다.

명동성당에서 전투경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무려 9개월만이다.

### 연세대 불심검문 캠페인 한창 27일 동아리연합회 설명회

27일 연세대 민주광장에서는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불법검문에 대한 연세인 자유발언대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4월 30일 연세대에서 108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불심검문할 것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리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의 사회로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의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준비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태 씨가 답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심검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행사장주변에 전시된 불심검문관련 대자보를 유심히 읽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이후 '불심검문반대'라고 쓰여진 천에 손도장을 찍는 행사도 진행이 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연세대에서는 4월 30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총학생회 및 문과대학 생화에서도 '불심검문카드'를 판매하고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리고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주요 공판 안내

- ▶ 4월 29일(수)
  - 전민아/한현수(집시법,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김오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 4월 30일(목)
  - 진의성(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윤순재 외7(국보법, 관악노동청년회)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21부, 신건
- ▶ 5월 1일(금)
  - 박정운(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김종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NO! MAI 세계동시다발 지구적 행동의 날

- 때 : 오늘(4월 29일) 낮 12시-3시
- 곳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동화은행 앞
- 내용 : MAI(다자간투자협정) 진행상황 및 한국정부 입장 비판/프랑스 파리 투쟁 및 해외투쟁사례 소개 및 국제연대발언/이후 서울국제민중회의, 5월달 WTO 반대운동 등 투쟁계획 발표/퍼포먼스 등
- 주최 :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837-285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4월 30일(목)

제 11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NO! MAI! 항의 행동

### ‘자본 세계화’ 맞서 ‘인권·환경 지키기’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이 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자본과 민중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쪽은 ‘자본의 국경없는 진출’을, 그 반대쪽은 ‘민중생존권과 노동권, 환경권 등의 사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MAI란 초국적기업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투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정으로, IMF(국제금융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조인될 경우, 경쟁력 있는 초국적기업에 의해 국내 산업기반이 파괴되고, 노동·환경기준 및 인권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다.

MAI와 관련된 협상은 9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지난 27,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이를 조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미국 등 각국 정부 사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조인은 일단 미뤄졌다.

이같은 자본의 움직임에 맞서 각국 민중진영은 항의행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소속 회원 1백여 명이 29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투기자본 살찌우는 MAI 반대” “한국정부는 MAI 조인을 즉각 거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알림**  
〈만화사랑방〉은 지면관계상 내일 신습니다.

‘NO! MAI!’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대표는 “MAI는 △국가기간산업(전기, 통신, 은행) 등 모든 경제부문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가능케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노동·환경 기준을 약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국내 조항을 철폐시킨다”고 밝혔다.

또 이경완 청년회의(준) 정책홍보위원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아프리카 등 전세계 민중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초국적자본은 무조건 먹여치우기에만 혈안이 된 메뚜기떼와 같은 존재”라며 “MAI와 OECD 각료회의는 이러한 메뚜기들의 반찬거리를 마련해주는 모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씨는 또 “한국 자본 역시 더 편한 노동통제와 더 많은 이윤확보를 위해 MAI에 반대하지 않는 데다, 정부는 협정조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각국 민중진영 항의행동 잇따라  
한편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에 따르면, MAI 등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관련한 각국의 항의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ECD 각료회의가 열렸던 파리에서는 초스토프스키(‘빈곤의 세계화’ 저자) 씨 등이 연사로 나선 가운데 ‘신자유주의 및 무역자유화 기구’ 등에 대한 규탄대회가 진행됐으며, OECD 건물 주위에서 ‘MAI협상에 반대하는 인간따위 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에서는 적어도 5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5월 1일부터 WTO(세계 무역기구) 탈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며, 5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엔 프랑스, 독일 등 각국으로부터 항의행동대가 제네바로 집결해 거리축제 및 WTO 건물 앞 시위 등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방글라데시에서의 ‘IMF 및 WTO,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시위’,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의 ‘무역 없는 날’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는 전했다.

## 행사와 동정

### 양심수석방 촉구 위한 청년기자 회견

- 때: 4월 30일(목) 오전 10시
- 곳: 조계사 포교원 소회의실
- 참가단체: 한청협, 전대협등우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 여성활동 촉구집회

- 때: 4월 30일(목) 오후 2시
- 곳: 한나라당 및 국민회의 당사 앞
- 주최: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273-9535)

### 제2차 아셈 NGO회의 보고대회

- 때: 4월 30일(목) 오후 5시-7시
- 곳: 여성단체연합 평화의 집 (269-5763)

### 발제: 아셈 NGO회의 준비과정 경과보고(이대화) / 아셈 NGO회의의 논의와 쟁점(이대훈)

- 문의: 참여연대 (723-5300)

### 고용안정쟁취, 민중생존권시수

-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
- 때: 4월 30일(목) 오후 2시
- 곳: 종묘공원

### 제10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 때: 5월 1일(수) 오후 1시30분-5시
- 곳: 종묘공원
- 주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98년 4월분 총목차(1094-111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094	4/1	1	도원동 철거폭행, 적준용역 확실- 철거민 고사직전, 음식물 반입 차단/도원동 사건현장 그림
		2-3	〈인권하루소식〉 98년 3월분 총목차(1073-1093호)
1095	4/2	1	4·3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표명령자·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4·3 50주년 행사 안내/〈만화사랑방〉 생존권 외면하는 정부
		2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주요내용-“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1096	4/3	1	도원동 폭행 피해자 이범휘 씨 증언, “나를 폭행한 건 용역강패들”/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2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대만인권추진회, 서준식 씨에 성금/〈한편의 논문〉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 (김광우)
1097	4/4	1	머리 길다고 라이터블로 지지, 서울 모공고 ‘교사폭력’ 물의/인권운동사랑방,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예정/감제철거 중단 촉구,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공동성명
		2	“신자유주의 반대, 지구적 민중행동” 촉구-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PGA 보고대회 가져/〈레드 헌트〉 탄압 재연, 각 대학 4·3 기념 〈레드 헌트〉 상영/〈발췌〉 지구적민중행동(PGA) 선언문
1098	4/7	1	말썽마다 조직폭력배 등장- 매일노동뉴스 기자, 취재도중 폭행 당해- (주)원실업도 폭력 시비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
		2	“왜 이제서 우리를 위로하는가”- 4·3희생자 진혼곳에 다녀와/ 주간인권흐름(3월 30일-4월 5일)
1099	4/8	1	이철용 씨 사건 가해자 드러나, 시위집안 전경 ‘방패로 폭행’ 시인/ (주)한화 정준희 씨 자살사건 파문, ‘폐수방류’ 지시에 번민하다 자살/현행 불심검문은 위법, 불심검문 워크숍 열려
		2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요약〉 ‘인권운동가 선언’ 초안
1100	4/9	1	정부대표단, 국내 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국내 민간단체 주장 신빙성 없다”고 주장/〈만화사랑방〉 묻히는 안기부개혁
		2	‘단협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현재 앞 시위/6기 한총련 탄압 인정 못해, 연세대 총학생회·전국학생연대 주장/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에 유죄선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1101	4/10	1	“한총련 평화집회 보장하라”, 사회단체·한총련 비주류대학 성명 잇따라/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태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2	고문...자포자기...허위자백,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양홍관 씨 폭로/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1102	4/11	1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제소 가능/“평화적 행사 치르겠다”- 한총련, 대의원대회 일단 유보
		2	〈요약〉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부정책 비판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행사와 동정
1103	4/14	1	‘평화’ 짓밟는 ‘국민의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 폭력 난무/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2	‘김낙중 석방 대책위’ 창립- 각계인사 참여, “민족대화합” 촉구/에바다농아원생, 자민련 앞 시위-김선기 평택시장 공천 항의/ 주간인권흐름(4월6일-4월12일)/주요공판안내
		3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박천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1104	4/15	1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우선”-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장애우권이문제연구소, 편의시설 고발전화 개설/〈한 편의 책〉 ‘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수 엮음)
		2	‘아시아인권현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타살 다름없는 죽음-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인권하루소식〉 98년 4월분 총목차(1094-111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05	4/16	1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만화사랑방〉 실업
		2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돼-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 전국연합, 'IMF 제협상, 재벌개혁' 촉구집회
1106	4/17	1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
		2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강용주·김진성 씨 고문사태 발표/기혼여성노동자 고문심각, 고용불안·취업상당 급증/민주노총·전교조 등,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1107	4/18	1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소의계층 교통전자' 비판-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2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불심검문 2차 캠페인 전개/서준식 씨 4월혁명상 수상
1108	4/21	1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컴퓨터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외교제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
		2	"동티모르 인권 지지"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김 대통령에 서한/참여연대, '고스톱 의원' 13명 검찰 고발/주간인권호름(4월 13일-4월 19일)
		3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109	4/22	1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새로나온 책〉 『면의시설 다 시보기』(김정열 등 지음)
		2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 "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하나들 늘어가는 양심수- 새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1110	4/23	1	3개월 개방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만화사랑방〉 일본군 위안부
		2	불법 검문 불복중운동 대학가 확산조짐,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실질적 조직화
1111	4/24	1	물대포 5시간 난사·고공침투- 도원동 강제철거 완료, 농성자 전원 연행/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2	"노동은 국민의 권리"-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 "하위자백 외 불증여자 기자회견 시켜", '구미유학생 사건' 양동화 씨 증언
1112	4/25	1	대답없는 메아리 "의문사 진상규명"- 유가협 등, 대국민캠페인 돌입/도원동 굴리앗 농성자들 계속 구금, 항의시위자들도 연행
		2	말뿐인 경찰의 '천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검문/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전국연합, 법무부장관에 공개서한/사회적 통합 위한 교육 절실, 독일 시각장애인학교장 특강
1113	4/28	1	'교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이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2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주간인권호름(4월 21일-4월 26일)
1114	4/29	1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새로나온 책〉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노라 칼린 지음)
		2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명동성당 경찰 모습 사라져, 불심검문 캠페인 영향/ 연세대 불심검문 캠페인 한창, 27일 동아리연합회 설명회
1115	4/30	1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선 '인권·환경' 시수
		2·3	〈인권하루소식〉 98년 4월분 총목차(1094호-1115호)

# 인권하루소식

## 98년 5월

### (제1116호 - 제1136호)